

뉴노멀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우리의 통일·대북전략(1/3년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29-01

KINU 연구총서 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 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 **1부**

전병곤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 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7-29-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 (1부)	통일연구원 (성균중국연구소)
17-29-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 (2부)	통일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국제정치학회)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전병곤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현승수 연구위원 김상기 부연구위원 이기태 부연구위원 홍석훈 부연구위원 김한권 교수(국립외교원) 전재성 교수(서울대학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임수호 연구위원	조충재 연구위원 오윤아 연구위원
협력 연구기관	성균중국연구소	이희옥 소장	서정경 연구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수형 박사	-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 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 **1부**

연구책임자 : 전병곤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실장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현승수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

김상기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이기태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기획부장 / 부연구위원)

홍석훈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김한권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조교수)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 연구위원)

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 팀장 / 연구위원)

오윤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 관계와 한반도예의 합의 1부

뉴노멀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우리의 통일·대북전략(1/3년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29-01 KINU 연구총서 17-21-01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저자	전병곤, 현승수, 김상기, 이기태, 홍석훈, 김한권, 전재성, 임수호, 조충제, 오윤아
발행인	손기웅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국제전략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아미고디자인(02-517-5043)
인쇄처	(주)아미고디자인(02-517-5043)
ISBN	978-89-8479-905-9 93340 미중 관계[美中關係] 349.42012-KDC6 / 327.73051-DDC23 CIP2018004611
가격	9,500원

© 통일연구원, 201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 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 **1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 례

요약	9
I. 서론	19
1. 연구배경과 필요성	21
2. 연구목적과 내용	23
3. 연구방법 및 구성	26
<1부>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와 한반도: 핵심쟁점과 파급영향	
II. 뉴노멀 시대의 미중관계 변화 요인	29
1. 미중관계 변화에 대한 기존 논의와 뉴노멀 시대 도래	31
2. 미중관계의 특징	39
3. 미중관계의 변화 요인	50
III.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의 핵심쟁점	59
1. 글로벌 차원	61
2. 지역 차원	97
3. 한반도 차원	148
IV. 미중관계의 쟁점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	167
1. 미중관계의 쟁점 평가	169
2.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179
참고문헌	197
최근 발간자료 안내	207

〈2부〉 아태 지역 국가들의 대미·대중인식과 대응: 사례와 유형

V. 사례연구: 아태 지역 국가들의 미중인식과 정책	9
1. 일본	12
2. 러시아	37
3. 인도	63
4. 아세안	90
5. 북한	119
VI. 아태 지역 국가들의 대응 유형과 시사점	149
1. 대응전략 유형 평가	151
2. 한국의 대미·대중외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67
VII. 결론: 한반도에 주는 정책적 함의	175
1. 종합분석	177
2. 한국의 통일·대북전략에 대한 함의와 과제	189
참고문헌	197
최근 발간자료 안내	205

표 차례

표 I-1 협동 연구기관 및 연구수행	28
표 III-1 U.S Goods Trade with Asia and China, 2003~2015	66

그림 차례

그림 I-1 3개년 연구계획	24
그림 II-1 미중관계에 미칠 변인 간 관계도	58
그림 III-1 U.S Goods Trade with Asia, Europe, North America, and South and Central America, 2003~2015	67

요 약

본 연구는 3개년 과제인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우리의 통일·대북전략』의 1차년도 연구로서,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 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부와 2부로 구성하였다. 1부의 주제는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와 한반도: 핵심쟁점과 파급영향”이고, 2부의 주제는 “아태 지역 국가들의 대미·대중인식과 대응: 사례와 유형”이다.

1부의 연구에서 주안점을 두었던 내용은 미중관계의 핵심쟁점을 추출, 평가하고 이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었고, 2부의 연구에서는 일본, 러시아, 인도, 동남아, 북한의 대미·대중정책의 특징과 그 대응유형을 평가하고 우리의 대미·대중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1부와 2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한반도에 주는 함의와 전략적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1부: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와 한반도: 핵심쟁점과 파급영향〉

1부는 3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II장은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 변화 요인이고, III장은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의 핵심쟁점이며, IV장은 미중관계의 쟁점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이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미중관계를 보는 기존 논의를 국제정치의 주요 패러다임인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관점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뉴노멀의 정의와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뉴노멀(new normal)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고위험, 미국 경제의 역할 축소 등의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지칭하는 경제적 용어이다. 이로 인해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역할과 주도력이 감소하는 반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역할과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중국판 뉴노멀이라 할 수 있는 ‘신창

요 약

타이(新常態)가 제창된 것에서 보듯이, 중국 경제도 중속 성장에 머물면서 미중 간 격차는 축소되었지만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중 간에 상호의존적이거나 이전보다 더욱 경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중관계는 협력과 갈등, 경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불확실성이 제고되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를 미중관계의 뉴노멀이라 칭할 수 있다. 이어서 이러한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 변화 요인을 구조적 요인과 행위자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조적 요인은 국가 간 세력관계의 변화, 즉 중국의 부상 정도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이며, 행위자 요인은 미중 양국의 국내정치적 상황, 즉 중국의 시진핑 집권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인식이다.

Ⅲ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와 행위 수준의 변인들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미중 전략적 협력·경쟁관계의 다차원적인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지역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는 역내 질서와 패권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보이고 있고, 이는 향후 역내의 다양한 미중 간의 현안 및 잠재적 사안들을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이다. 주요 쟁점으로는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북핵 문제, 사드 문제, 동맹 및 다자안보협력,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이 해당한다.

다음으로 글로벌 차원에서는 중국의 세력범위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슈들이 적지 않고 향후 미중 간 규범경쟁의 징후들을 판별하는 의미에서 주요 쟁점들을 선정하였다. 즉, 지구적 경제 질서, 국제해양 질서, 테러리즘(사이버안보), 기후변화와 환경, 인권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우리의 이익과 밀접한 한반도 차원의 쟁점들도 선정하였다. 한반도 차원의 쟁점인 한미동맹, 남북관계, 평화체제, 통일 등은 모두 미중 간에 이견을 보이면서 동시에 미중

요 약

관계에 영향을 끼치거나 영향을 받는 이슈들이다.

IV장에서는 미중관계의 쟁점들을 차원별, 쟁점별로 미중의 입장을 비교·평가하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쟁점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중 간 협력적 공간이 여전히 많은 편이며, 이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 미중 간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측면이 많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미중 간 규범 경쟁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차원의 경우는 미중 간 입장 차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현재 미중 간 갈등과 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북핵 문제나 일대일로와 같이 협력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갈등적 측면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토·영해 및 국가안보에 깊은 영향을 주는 다른 이슈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미중 전략적 경쟁지역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반도 차원의 쟁점은 지역 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력적 측면이 많으나 대부분이 지역적 이슈와 깊은 상관성을 갖고 있는 관계로 글로벌 차원의 쟁점보다는 갈등적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차원의 쟁점의 경우는 우리에게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편이라 미중 간의 현안으로 대두되지 않고 있을 뿐, 향후 관심 쟁점들이나 전략적 경쟁과 연계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잠재적 갈등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미중관계 차원별 쟁점들의 성격과 특징을 평가하면, 글로벌 차원의 쟁점은 협력적, 지역 차원의 쟁점은 갈등적, 한반도 차원의 쟁점은 잠재적이라 규정할 수 있다. 협력과 갈등의 수준으로 비교한다면, 지역 차원, 한반도 차원, 글로벌 차원의 순으로 갈등적이고, 그 반대의 순으로 협력적이다.

쟁점별로 보면, 비전통안보 분야의 쟁점들인 테러와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미중의 입장이 비교적 협력적이며, 지구적 경제 질서와

요 약

국제해양 질서 그리고 인권 및 일대일로 등의 경우는 주도권 경쟁보다는 이견 갈등을 보이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미중 규범경쟁이 아직은 치열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전통안보와 주권, 영토 문제에 해당하는 대만, 남중국해, 사드, 동맹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대립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 차원의 이슈들로서 언제든지 미중 간 갈등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폭발력이 있다고 평가된다.

〈2부: 아태 지역 국가들의 대미, 대중인식과 대응: 사례와 유형〉

2부는 2개의 장과 결론으로 구성했다. V장은 사례연구로서 아태 지역 국가들의 미중인식과 정책이고, VI장은 아태 지역 국가들의 대응 유형과 평가이다. V장의 사례연구에서는 일본, 러시아, 인도, 아세안, 북한을 그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주요 기준은 미중 경쟁관계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거나 자유롭지 못한 국가, 한반도의 상황과 직간접 관련성을 갖는 역내 행위자, 중국의 부상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 주변국이란 지정학적 위치 등이다. 인도의 경우는 한반도 관련 직접적 행위자로 볼 수 없으나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미중 사이에서 대외전략을 운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포함시켰다.

이렇게 선정된 5개 사례국의 외교정책 기조 속에서, 미중 강대국 체제 등장을 전후하여 대미·대중정책의 변화 양상, 변화의 동기,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였다. 다만, 이들 국가의 경험을 한국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대응전략을 유형화하여 VI장에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유형화의 준거 틀은 국제정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안보전략인 ‘균형(balancing)’과 ‘편승(bandwagoning)’ 그리고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을 모두 고려하였다. 이에 따른 사례국의 유형을 평가하면, 미국과 중국이란 초강대국 간 경쟁관계에서 사례국

요 약

들은 대부분 헤징전략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들 국가의 지정학적 조건, 국력의 크기, 중국과의 전통적 관계, 전략문화의 성격, 국내 정치적 상황, 국가이익 특히 경제관계 등에 의해 헤징의 행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명확한 경성헤징에 해당한다. 즉,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경성헤징은 중국의 의도와 동북아 안보상황에 따라 향후 경성균형으로도 변화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대중 경성헤징을 취하는 이유는 경제적 상호의존, 중국과의 역사적 경쟁관계, 미일 동맹이라는 변수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일본이 부상한 중국의 의도에 대해 더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다면, 더 강화된 경성헤징과 간접균형, 그리고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대중 균형까지 고려할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제한적 편승과 연성헤징으로 분류된다.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상호보완적 이익과 미국의 패권에 대한 공동대응에 기초하고 있다. 즉, 러시아와 중국은 상호 유사한 비서구적 가치관과 민족주의 등의 국가정체성을 갖고 있고 다극 체제를 선호하는 공통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각자의 세력권과 영향력을 형성, 확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는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해야 할 공동의 안보자산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도의 경우는 중국의 강대국화에 대한 이중헤징과 간접균형전략으로 나타난다. 주된 이유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잠재적인 전략적 경쟁관계, 중국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한 결과이다. 인도의 간접균형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중헤징을 추진하면서 향후 인도양을 중심으로 전개될 중국과의 안보경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 할 수 있다.

아세안의 경우는 다양한 국가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하나의 특징으로 규정하기 곤란하지만, 대체로 중국의 부상을 기회와 위협으로 인식하

요 약

고 있어 이중혜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제도균형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 아세안은 느슨한 국가연합 형태의 제도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지역안정을 위해 중국의 위협을 제도로 완화시키고자 하는 대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다만, 회원국별로 중국과의 역사적, 경제적 관계와 안보적 상황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긴 하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라오스·필리핀은 중국에 대해 연성혜징의 행태를, 베트남은 경성혜징의 행태를, 말레이시아·태국·싱가포르·미얀마·인도네시아는 중립적인 행태를 보인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는 제한적 편승과 연성혜징 행태를 취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간접균형이라는 매우 특이한 이중혜징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중혜징은 유형화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나,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사이에서 북미·북중관계 등 전략적 삼각관계를 만들어내려는 북한의 전략적 의지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결론부에서는 1부와 2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적 협력과 경쟁관계의 변화가 한국의 대미·대중정책에 주는 시사점과 통일·대북전략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미중 간 전략적 협력과 경쟁관계가 주는 시사점은,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둘째,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 셋째, 향후 미중 전략적 경쟁관계의 심화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일방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한반도의 통일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가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전혀 없지 않은바,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여섯째, 아태 지역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국가처럼, 우리도 혜징전략을 안보전략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은 분단국이며 미국과의 동맹국인바, 제한적 혜징전략을 안

요 약

보전락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의 갈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동맹관리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동맹관리전략은 한국 고유의 안보이익과 동맹이익의 공통분모와 차별성을 구별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은 분리될 수 없다는 한미 간의 확고한 안보 유대감을 바탕으로 동맹을 관리하되, 중국과의 갈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의도에 대한 인식에 따라 한국은 대중 간접균형과 대중 제한적 편승의 이중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통일·대북정책에 주는 전략적 과제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및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평화와 번영, 책임 등의 가치 외교 제창, 남북 대화와 교류 모색을 통한 북한 견인, 미중관계의 변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다양한 대비책 강구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뉴노멀, 미중관계, 전략적 경쟁과 협력, 제한적 헤징전략, 한반도 평화와 번영

Abstract

U.S.-China Relations of Strategic Competition in the Era of the New Normal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Jun, Byoung Kon et al.

This study is the first-year work of the three-year project,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the Era of the New Normal and South Korea’s Strategy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For this year, the authors addressed the them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the Era of the New Normal and Implic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o this end, this study is comprised of two parts. The first part touches on the topic of “U.S.-China Rel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ra of the New Normal: Core Issues and Ramifications” and the second part deals with the topic of “Perceptions and Responses of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arding the U.S. And China: cases and types.”

The first part focused on deducing and evaluating the core issues in U.S.-China relations and the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econd part assesses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responses of many countries’ (Japan, Russia, India, ASEAN countries, and North Korea) policy regarding the U.S. and China and infer th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policy toward the U.S. and China.

As the analysis suggests, the U.S.-China relations have arguably entered the era of the new normal—with the strategic competition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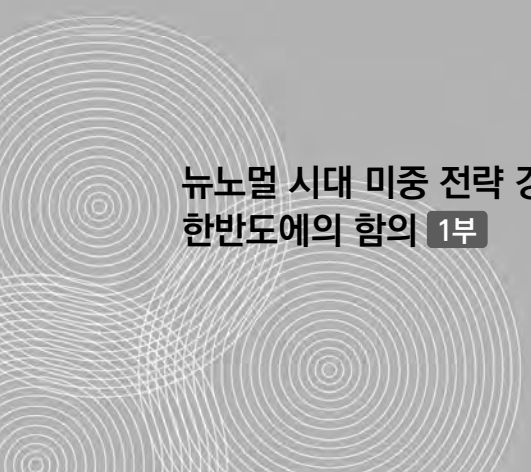
and cooperation complexly intertwined and the increasing and routinizing uncertainty. That is, the bilateral relations seems to have a negative influence of fomenting an environment unfavorable to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of constraining South Korea's autonomy as the U.S-China relations seem to be structuralized—cooperation at the global level and confrontation and competition in the regional level.

Moreover, viewing the experience of case countries' policy on the U.S. and China, South Korea should not be embroiled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actively strive to enhance its autonomy while adequately adopting strategies of alliance management with the U.S. and of limited hedging strategy toward China. Ultimately, Seoul should promote a friendly setting through value diplomacy of peace and coope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undesirable repercus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mid changes in U.S.-China relations and excogitate strategy regarding North Korea and unification, discovering and capitalizing on positive aspects.

Keywords: New Normal, U.S.-China Relations, Strategic Competition and Cooperation, Limited Hedging Strategy,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 서론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 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 **1부**

1. 연구배경과 필요성

최근 미중관계는 글로벌·지역적·양자적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과 갈등이 일상화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미중관계는 이미 글로벌 이슈와 지역적 차원의 문제 및 쌍무적 현안을 둘러싸고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는 추세에 있다.

그렇다면, 뉴노멀의 의미는 무엇인가? 뉴노멀의 사전적인 의미는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지칭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고위험, 규제강화, 미 경제 역할 축소 등이 뉴노멀로 논의되고 있다.¹⁾ 중국에서도 이를 ‘신창타이(新常态)’로 표현하며 2014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신창타이’ 시대에 진입했음을 선언했다. 그동안 두 자릿수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해오던 중국은 2012년부터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15년부터는 6%대로 성장 목표를 조정하면서 신창타이가 제창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신창타이는 중저속 성장을 새로운 상태로 인정하면서도 성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뉴노멀과 다른 측면도 있다. 즉, 중국은 성장을 버리지 않고 지속성에 방점을 두면서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향후 중국의 의도대로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중국식 표준의 세계 확산과 자국 이해관철을 위한 주도적 행보로 이어지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규범 경쟁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성장 속도 유지를 위한 내치에 치중하면서 수세적인 대외행보 속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갈등보다는 협력적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일상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더욱이, 자국 영

¹⁾ KOTRA, “Daum 백과 해외투자용어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print/188XX75600598>> (검색일: 2017.05.19.).

향력의 점진적 쇠퇴를 보호주의와 미국 우선의 외교를 통해 해소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향후 미중관계가 협력과 갈등의 공존이란 특징을 보이면서 형성·전개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의 전략적 협력과 갈등이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행위자 요인으로서, 미중 간 상호인식의 차이에 따른 ‘전략적 불신(strategic distrust)’을 들 수 있다. 즉,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부상’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중국이 결국 미국 주도의 패권질서에 도전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글로벌·지역적 차원에서 대중국 견제와 봉쇄 전략을 수립·운용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둘째는 구조적 요인으로서, 미중 간 경제력·군사력 차이를 들 수 있다. 2008년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패권의 ‘상대적 쇠퇴(relative decline)’와 신흥 강대국 ‘중국의 부상(China rising)’이 이루어짐에 따라 미중 ‘양강(G2) 체제가 도래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계속되고 머지않은 장래에 미국의 경제력을 초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군사력 차원에서는 미국의 압도적 우위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미중 간 행위자·구조적 요인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다양한 층 차(Level)에서 전략적 협력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면 뉴노멀 시대의 미중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는 냉전·탈냉전 시기의 제로섬(zero-sum) 성격의 강대국관계와 달리 ‘협력 속 갈등’ 및 ‘갈등 속 협력’이라는 복합적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대했지만 ‘취약성’은 오히려 심화되었고, 상호 ‘전략적 불신’도 여전히, 양국관계에 영향을 주는 내부·외부 영향요인도 과거보다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불신에 기반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중국 견제 및 봉쇄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에 따른 경제협력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협력도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 역시 ‘신형대국관계’ 제시를 통해 미국 주도의 현존 국제질서는 인정하되, 자국의 정당한 ‘핵심이익’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고 공세적 주변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역내에서의 점진적인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적 협력과 갈등 추세가 일상화되면서 동북아의 전략·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통일전략과 대북정책 수립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과 갈등의 반복은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이는 곧 북한체제의 불안정성과 결합되어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강대국 정치’의 특성상 미중 간 ‘협력(혹은 ‘담합’)'의 필요성에 의해 한반도 문제의 중요성이 낮아지거나 심지어 ‘소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뉴노멀 시대의 미중관계의 복합성이 동북아 국가에 주는 중요한 함의는 바로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나라에 치우친 대외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적 협력과 경쟁 및 갈등 구도의 특징과 함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대미·대중 ‘복합외교’ 전략을 마련하고, 나아가 우리의 통일·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과 내용

기존의 미중관계 변화에 따른 우리의 외교전략 및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다음 두 개의 범주로 집약된다. 첫째, 기존의 미중관계와 한반도 관련 연구는 대부분 현실주의에 기반한 ‘세력전이’ 내지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둘째, 독립변수로서의 미중관계에 대한 근원적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는 학술연구보다는 종속변수로서 동아시아 또는 한국의 대응방안이라는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성

이 강하다.²⁾ 하지만 뉴노멀 시대의 미중관계 연구는 기존의 미중 간 ‘패권경쟁’은 물론 국제 어젠다 확보를 위한 ‘규범경쟁’의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뉴노멀 시대의 도래에 따라 미중관계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성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미중 ‘패권경쟁’은 물론 국제적 어젠다 확보를 위한 ‘규범경쟁’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한다. 그래야만 미중 경쟁·갈등 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최대화하고, 미중 간 ‘담합’에 의한 한반도 문제의 ‘소외’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의 구도 속에서 미중관계의 협력과 갈등의 수준 및 추세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중장기적 통일·대북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연구의 방대성과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우리의 통일·대북전략』을 주제로 총 3개년(2017~2019) 사업으로 진행된다. 3개년 연구는 미중관계의 현실성과 정책적 시급성을 감안해 각 연도 별 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상호 연계성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그림 1-1 3개년 연구계획



²⁾ 정재호 엮음, 『미·중 관계 연구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p. 23.

최종 3차년도(2019)에는 미중관계 변화에 따른 한국의 증장기 통일·대북전략이 종합적으로 제시되는데, 그 선행 작업으로서 2차년도(2018)에는 2025년까지 미중관계를 증장기적으로 전망하고 1차년도(2017)에는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의 핵심쟁점과 파급영향 및 한반도에의 함의 분석에 초점을 둔다. 2차년도 연구는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경쟁이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미칠 증장기 도전요인과 기회요인을 식별하는데 활용하는 한편, 미중관계를 전망에 따른 시나리오 별로 우리의 대미·대중정책과 중단기적 통일·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제시할 예정이다.

1차년도의 연구는 2·3차년도 연구를 위한 기초 공사로 설계되었다.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 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를 주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행위자 요인, 구조적 요인 등)을 발굴하여 이들 핵심쟁점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2차년도의 미중관계를 전망할 수 있는 변수를 발굴하는 한편, 미중 전략경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함의와 과제를 도출한다.

그런 점에서, 1차년도 연구목적은 뉴노멀 시대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미중관계의 핵심쟁점과 한국의 대미·대중정책에 주는 시사점 도출에 있다. 이를 위해 1차년도 연구는 1부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와 한반도: 핵심쟁점과 파급영향”과 2부 “아태 지역 국가들의 대미·대중인식과 대응: 사례와 유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먼저, 1부의 경우 뉴노멀 시대의 특징과 미중관계의 변화 요인을 구조적, 행위자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서 미중 간 상호 전략적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양자 간의 쟁점을 글로벌, 지역, 한반도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책적 입장을 입체적으로 추출한다. 글로벌 차원의 쟁점으로는 지구적 경제 질서, 국제해양 질서, 테러리즘(사이버안보), 기후 변화와 환경, 인권 등이며, 지역적 차원의 쟁점으로는 대만, 남중국해, 북핵,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다자안보협력 및 동맹, 일대일로 등이다. 그리고 한반도 차원의 쟁점으로는 한미동맹, 남북관계, 통일, 평화체제이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미중의 입장을 차원별, 쟁점별 비교분석을 통해 우선순위와 비중을 평가하고 한반도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검토한다.

2부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아태 지역 국가들의 대미·대중인식과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이들 국가의 대응 유형을 분류해 한국의 대미·대중외교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사례국으로는 미중 전략적 경쟁관계의 영향을 받는 구조적 요인과 중국의 부상에 직면한 중국 주변국이란 지리적 요인, 한반도와 직간접 관련성이 있는 역내 행위자를 기준으로 일본, 러시아, 인도, 아세안, 북한 등을 선정하였다. 사례국의 대응전략 유형 분류기준으로는 ‘균형(balancing)’과 ‘편승(bandwagoning)’, ‘헤징(hedging)’을 포함해 설정하고 유형화하였고,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시사점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1·2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향후 미중관계를 가늠할 주요 쟁점과 변수들을 제시함으로써 2차년도 연구에 활용하고, 단기성의 우리의 대미·대중외교와 통일·대북전략에 주는 함의를 제시할 예정이다.

3.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의 분석 틀은 1부의 경우엔 행위자·구조 분석모델을, 2부 사례 분석의 경우는 안보전략으로서 헤징(hedging strategy) 개념을 원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³⁾ 그리고 본 연구의 공통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연구 방법은 문헌분석이다. 문헌분석은 미중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 자료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당국 그리고 사례국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1차 자료

³⁾ 안보전략으로서의 헤징은 자신이 속한 지역안보상황의 불안정성과 상대국 의도의 불확실성 그리고 자신의 이해관계가 높은 상황에서, 즉 국가의 최종목표 설정 및 그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을 확정할 수 없는 안보환경에서 균형과 편승의 어느 중간적 입장을 취해 이득과 손실의 중화작용을 도식적으로 추구하는 안보전략이라 할 수 있다.

와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정태적인 문헌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조사(field research)와 심층면접(deep-interview)을 활용해 보완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주요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와 학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문헌이나 공식성명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습득하는 데 주력하였고, 국내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병행해 학문적, 정책적 시사점 발굴을 위한 노력도 동시에 기울였다.

아울러 본 연구주제의 특성상 학제 간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즉, 지역연구자와 국제정치학자, 경제학자 등이 참여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다양한 연구진의 연구결과를 체계화하고 질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 수차례의 공동연구자(co-work)회의를 각 권별로 진행하였고, 중간보고 이후에는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통해 연구내용과 방향의 상호 연계성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본 연구는 타 기관과의 협동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대표적 참여 기관으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성균 중국연구소, 한국국제정치학회이며, 이들 기관의 특성에 맞게 연구를 배정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밀접한 인도, 아세안, 북한 등의 지역사태 연구(V장)에 참여하면서 자체 세미나와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특히, 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성균 중국연구소는 중국의 미국전문가들에 대한 현지 방문을 통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결과는 II장에 일부 반영하였다. 그리고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수행한 위탁과제(“동아시아 국가의 미중관계 인식과 대응유형”)의 결과도 VI장에 일부 반영하였다.

표 I-1 협동 연구기관 및 연구수행

연구기관	참여연구진	연구코워치의
주관 기관	통일연구원	공동연구자회의 5회 기관별 회의 9회
협력 기관	KIEP	
	성균중국연구소	
	한국국제정치학회	
	전병곤 선임연구위원(책임) 김상기 연구위원 이기태 연구위원 현승수 연구위원 홍석훈 부연구위원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임수호 연구위원(책임) 오윤아 연구위원 조충제 연구위원	
	이희옥 교수(책임) 서정경 교수	
	이수형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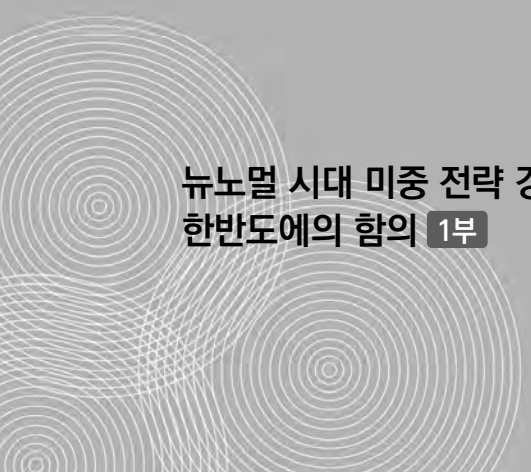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부를 제외하면 1부와 2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1부의 II장은 미중관계 변화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고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의 특징을 분석한 후 행위자·구조 분석모델을 원용해 미중관계의 변화 요인을 도출하였다. III장은 미중관계의 핵심쟁점을 글로벌, 지역, 한반도 등 3개의 차원별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대비시켜 분석하였고, IV장은 이에 대한 비교평가와 대한반도 영향을 분석하였다.

2부 사례와 유형에서, V장의 사례연구는 일본, 러시아, 인도, 아세안, 북한 5개 사례국의 대미·대중인식과 정책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평가하였고, VI장에서는 이들 사례국의 대응 전략을 유형화한 후, 한국의 대미·대중외교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결론부에서는 1부와 2부의 연구를 종합분석하고 한국의 대북·통일전략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1부〉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와 한반도: 핵심쟁점과 파급영향

Ⅱ. 뉴노멀 시대의 미중관계 변화 요인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 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 **1부**

1. 미중관계 변화에 대한 기존 논의와 뉴노멀 시대 도래

가. 중국의 부상을 보는 국제정치적 관점

일반적으로 국제관계 이론의 주요 패러다임은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로 대별된다.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국제정치적 관점 역시 이 3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⁴⁾ 다만, 2008년부터 진행된 국제금융위기에 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상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중국의 부상을 보는 국제정치적 시각도 중국의 부상 여부가 아닌 중국이 어떻게 부상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이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이 기존 미국 중심의 질서에 안정적일지 혹은 불안정일지를 평가하는 데 주력한다.⁵⁾ 물론 각각의 관점에 따라 중국의 부상을 다양하게 평가하지만, 낙관적 입장과 비관적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⁶⁾

먼저, 국력과 국가의 정책적 의지 그리고 안보딜레마의 변수를 중시하는 현실주의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한다. 즉, 중국의 국력이 증대되고 있는지, 이를 행사하려는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안보딜레마가 심화될 것인지 등이다. 이에 대한 비관적 견해와 낙관적 견해가 현실주의 내에 모두 공존하고 있다. 낙관적 견해는 중국이 급격히 부상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한 종합국력의 한계와 그에 따른 패권의지의 부재로 안보딜레마가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주장한다. 반면, 비관적 논의는 중국의 부상을 세력전으로 해석한다. 즉, 중국 부상의 핵심인 경제성장이 군비 증강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상호 불신에 기반한 안보딜레마를 야기할 것으로 인식한다.

4) 박홍서, “중국의 부상과 국제관계이론: 중국위협에 관한 이론적 시각,” 김태호 외, 『중국 외교연구의 새로운 영역』 (파주: 나남, 2008), pp. 23~68.

5) 전병곤, “중국의 동북지역개발과 한중협력 구상,” 『중국학연구』, 제54집 (2010), p. 385.

6) Aron L. Friedberg,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2 (2005), pp. 7~45.

둘째, 자유주의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제도화, 민주화 등의 변수를 중시하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를 중시하며 접근한다.⁷⁾ 즉, 중국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과 경제적 자유화가 정치발전이나 민주화를 이끌 수 있을지, 또는 세계경제 질서에 편입된 중국이 국제사회와의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갈등적이기보다는 협력적으로 변화될 것인지에 관심을 갖는다. 낙관적 관점의 자유주의는 중국의 경제발전이 국제사회와의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국제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중국의 민주화와 제도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인식한다. 반면에 자유주의적 비관론자들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국력의 증강이 자국 내 민족주의를 자극하거나 기존 사회주의와 결합된 강력한 일당독재 내지 권위주의 체제를 형성시킬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추구할 것으로 주장한다.

셋째, 구성주의는 국제관계를 사회적 구성으로 파악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 경제력과 군사력 등 객관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체성, 규범, 개체와 구조 간의 상호 구성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 물론 구성주의 내에서도 중국의 부상을 비관적이거나 낙관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모두 존재한다. 중국의 경제발전이 새로운 규범에 적응하면서 정체성이나 전략문화를 연화시킬 것이라는 낙관적 입장과 중국의 경제발전이 오히려 중국적 규범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비관적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⁸⁾

이처럼, 기존 중국의 부상을 보는 국제정치적 관점은 현실주의와 자유

⁷⁾ 자유주의 이론을 구성해온 무수히 많은 저작물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Robert Keohane and Joseph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3rd edition (Longman: New York, 2001); Robert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Bruce Russett and John Oneal, *Triangulating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w York: W.W.Norton & Company, 2001).

⁸⁾ 전병곤, “중국의 동북지역개발과 한중협력 구상,” p. 386.

주의, 구성주의에 따라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지만, 모두를 관통하는 공통된 측면도 존재한다. 즉, 중국의 부상이 기존 질서를 헤치는 위협인지, 아니면 기존 질서를 강화하는 기회인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부상하는 중국이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와 맞닿아 있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질서나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며 세력전이를 추구할 경우, 미중관계는 갈등과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나,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 규범과 책임을 준수하는 국가로 변모할 경우, 미중관계는 협력적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집약할 수 있다.

나. 미중관계 변화에 대한 이론적 분석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제정치의 주요 패러다임인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견해를 모두 갖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관점에 기초해 낙관적인 견해는 미중관계가 협력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관적인 견해는 미중관계가 갈등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두 개의 대립적 입장과 더불어 미중관계가 갈등과 협력이 공존할 것이라는 절충적 입장도 존재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향후 미중관계의 변화를 협력과 갈등 그리고 복합적 관계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미중관계의 협력적 변화에 관한 논의이다.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입장은 자유주의적 낙관론자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중국이 경제적 상호의존, 국제제도, 그리고 경제성장에 따른 민주화에 의해 기존의 국제질서를 순응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미중관계도 공존과 협력적 관계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 경제의 급성장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역시 자본주의 틀 안에서 경제를 운영해야만 하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체제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교류는 어쩔 수 없이 상호협력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미 미중 간 경제 교류는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이 상호 갈등 양상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비용적 측면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상호 협조해야만 한다는 논거이다.

또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와 같은 국제적 다자기구는 물론 아세안+한·중·일(ASEAN+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등 다수의 지역협력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기구와 제도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협력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분석한다. 게다가 칸트(Immanuel Kant)의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에 입각해 미중관계를 협력적으로 전망하기도 하며,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y)’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중국에서 민주주의가 제도화되면 중국은 ‘대의 팽창주의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⁹⁾

2013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신형대국관계”라는 용어는 이러한 미중관계의 협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회담 후 브리핑에서 미국의 톰 도닐런(Tom Donilon) 국가안보보좌관은 미래에 미중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였는데, “미국은 미중관계가 불필요하게 전략적 라이벌 관계로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그의 언급은 이러한 논거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¹⁰⁾

⁹⁾ 근대화론 특히,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Seymour M. Lipset,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3, no. 1 (1959), pp. 69~105를 참조할 것.

¹⁰⁾ Tom Donilon, “Press Briefing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Tom Donilon,”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6/08/press-briefing-national-security-advisor-tom-donilon>> (검색일: 2017.08.10.).

둘째, 미중관계가 갈등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시각은 현실주의의 구조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미중 간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논리에 중심을 두고 미중관계를 비관적으로 전망한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주요 논점은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그 경제력은 다시 군사력으로 이전되어 결국 미중 간 세력전이 발생함으로써, 미중 간 힘의 양극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시각에서 분석해 본다면, 힘의 패권은 경쟁할 수밖에 없고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국으로 등장함과 동시에 중국의 목표는 대외 팽창주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맞서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중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주장한다.¹¹⁾ 미국은 자국의 헤게모니적 지위에 도전하거나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성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헤게모니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제적 공격 또는 무력 사용도 감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또한,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 역시 미중관계를 비관적으로 분석하는데, 미국의 헤게모니적 지위가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의해서 도전받고 곧이어 세력균형의 상태에 들어감으로 인해 미중관계는 군사적 경쟁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주장이다.¹²⁾ 이에 따르면, 비록 미중 양국이 핵 억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의 세계전쟁은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안보딜레마’의 속성 때문에, 양국이 군사적 경쟁 구도와 정치적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셋째, 미중관계에는 협력과 갈등이 모두 공존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¹¹⁾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1).

¹²⁾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9).

분석은 미중관계를 낙관적이나 비관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두 개의 관점을 모두 비판하는 ‘절충론’적 입장에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의하면, 미중관계는 ‘협력 속에서 갈등’과 ‘갈등 속에서 협력’이라는 틀 내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당분간 큰 변화 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러한 절충론적 입장은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목표가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이 지역패권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기 때문에,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와 한편에서는 협력적 관여(engagement) 정책을, 다른 한편에서는 갈등적 견제(hedging) 정책을 병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논의는 미중관계가 협력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주장과 반대로 갈등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주장의 주요 논거들을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예를 들면, 중국의 부상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거나 경제발전으로 인한 민주화로 전이되는 시점이 불명확하다고 비판한다. 또한 중화민족주의와 미국의 예외주의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그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더욱이 경제적 상호의존도의 증가가 반드시 공동의 이익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며,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불균등한 분배가 만족 국가와 불만족 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다. 미중관계의 뉴노멀 시대 논의

뉴노멀(New Normal)은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에서 시작한 전 세계적 경기침체를 지칭하는 경제적 용어이다. 이 용어는 미국의 로저 맥나미(Roger McNamee) 벤처투자가가 2003년 자신의 저서 『뉴노멀(The New Normal)』에서 사용하였는데,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가 세계적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 의미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 경제가 예전처럼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저성장, 저소비, 저물가, 그리고 고실업률이 지속되는 상태에 머물게 되는 현상을 지칭한다.¹³⁾

이러한 현상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기준과 표준으로 자리하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 금융질서와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에 타격을 줌으로써 미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약화된 반면에, 중국은 10.4%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며 일본을 넘어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형의 발전모델이라 할 수 있는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가 한때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와 대비되며 주목받기도 했다. 더욱이 중국은 미국의 기축통화인 달러 체제에 도전하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구하기 시작했고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를 설립하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경제 질서와 경쟁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침체는 중국 경제의 지속 성장에도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써 중국도 양적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더는 지속하기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뉴노멀의 중국판이라 할 수 있는 ‘신창타이(新常态)’를 2014년부터 선포하고 경제성장의 둔화를 극복하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즉, 비록 저속성장이라 하더라도 지속에 방점을 두고 성장을 유지하려는 시도로서, 중국식 표준의 세계적 확산과 자국 이해관철을 위한 주도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의 중국식 ‘신창타이’ 정책은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중국 주도의 외교적 행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규범 경쟁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¹⁴⁾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뉴노멀의 시대는 기존 미국 주도의 국제정치경제 질서가 약화되고 신흥 강대국인 중국이 도전하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기존 국제적 원칙과 규범을 새롭게 대체하는 것도 아닌 상태가 지속되고 일상화되는 글로벌 혼돈의 시

¹³⁾ 아산정책연구원, “뉴노멀의 시대,” 『2016 아산 국제정세 전망』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5), p. 9.

¹⁴⁾ Tong Zhao, “The “New Normal” for China’s Economy and Great Power Diplomacy,” *China Policy Review* (March 1, 2015).

대로 뉴노멀을 이해하기도 한다.¹⁵⁾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세계질서의 주도권 약화는 상대적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가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게 되고 국제정치의 혼돈 양상이 일상화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 먼저 야기된 뉴노멀은 이제 국제정치로 확대된 개념으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논쟁을 넘어서 미중 간에 협력과 갈등, 그리고 패권 경쟁에서도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개념으로 전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미국발 경제 위기가 맞물려 양산된 뉴노멀의 함정은 미중 양국이 경제적으로 경쟁관계이면서도 이미 한 배를 탄 협력 관계이기도 한 상황을 만들었으며, 동북아 패권경쟁에서도 안보와 경제가 그 경계선이 모호해진 21세기의 국제정세는 향후 미중의 협력과 갈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양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뉴노멀 시대의 미중관계는 협력과 갈등 및 경쟁이 일상화되는 특징을 보이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이 미국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체제에 순응하면서도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 새로운 협력관계와 경제발전 모델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려는 점 등을 들 수 있고, 미국은 중국의 AIIB나 일대일로를 적극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수용 내지 묵인하면서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점 등이 그렇다.

따라서 미중관계는 상호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지역적 차원에서 전략적 경쟁과 갈등이 일상화되는 ‘뉴노멀’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로 인해 국제질서, 특히 동아시아 질서에도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제고되고 일상화되는 현상이 출현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¹⁵⁾ “Is Global chaos the new normal,” *Los Angeles Times*, July 29, 2014.

2. 미중관계의 특징

가. 냉전 및 탈냉전 시기 미중관계의 전개와 특징

냉전(Cold War)시기의 미중관계는 크게 두 단계-1949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미소 양극체제의 영향에 따른 ‘적대적 관계’ 시기, 1970년대 시작된 미중 ‘데탕트’와 수교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전략적 협력 모색’ 시기-로 나눌 수 있다.¹⁶⁾

탈냉전(post-Cold War)시기의 미중관계는 ‘전략적 불안정’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구소련과 동유럽의 해체에 따른 냉전체제의 종식과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미중관계의 갈등 국면을 거치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중국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불안정 시기가 지속되었다.

(1) ‘적대적 관계’ 시기(1949~1960년대 중반)

냉전 초기인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수립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미중관계는 ‘적대적 관계’가 주류를 이루었다. 냉전 초기 미중 적대적 관계의 지속은 미소(美蘇) 양극체제라는 국제정세의 변화, 소련 요인, 미중 양국의 국내적 상황 등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유주의 진영은 적극적으로 포용했지만 소련을 포함한 공산주의 진영은 철저하게 봉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미국의 대중(對中)정책 역시 고립과 봉쇄가 주를 이루었는데, 특히 1950년 2월 「중소우호동맹조약」의 체결과 6월 ‘한국전쟁’ 및 1954년 12월 「미국-대만 공동방위조약」 체결 등을 거치면서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¹⁷⁾

¹⁶⁾ 냉전 시기 미중관계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Harry Harding, *A Fragil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1972*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 pp. 297~302.

¹⁷⁾ David Shambaugh, “Patterns of Interaction in Sino-American Relations,” in *Chinese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eds. Thomas Robinson and

반면, 사회주의 신생 국가로서 독립과 주권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던 중국은 미소 양극체제의 영향으로 인해 소련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추구했고, 자유주의 진영의 수장인 미국에 대해서는 제국주의·패권주의 세력이라는 이유를 들어 적대적 입장을 취했다.¹⁸⁾ 하지만 1950년대 후반에 나타난 이념논쟁으로 인해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냉각되기 시작했고, 1960년대에는 국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졌다.

(2) '전략적 협력 모색' 시기(1960년대 후반~1989년)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를 거쳐 1989년까지 미중관계는 상호 전략적 이해에 기반하여 '전략적 협력'을 모색한다. 이 시기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대만 문제, 소련 요인, 미중 양국의 국내적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국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게 된다. 즉, 소련의 핵 개발이 가속화되고 1968년 베트남 전쟁의 패배가 확실시되자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였다.¹⁹⁾ 1972년 2월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인정하는 공동성명인 「상하이 커뮤니케」를 발표했다. 이후 중국과 미국은 1978년 12월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고, 1979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국교가 수립되었다.

David Shambaug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 218; Jean S. Kang, "US Policy Dilemma: Food Aid to an 'Enemy Stat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6, no. 2 (October 2005), p. 37.

¹⁸⁾ 세이시엔 지음, 정재남 옮김, 『신중국 외교이론과 원칙』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5), pp. 164~165.

¹⁹⁾ 닉슨 대통령은 1969년 12월 대만해협을 순찰하던 미 제7함대를 철수하도록 했고, 1970년 2월 의회 연설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건설적인(constructive)' 관계 수립 및 '중국의 국제사회 편입'"을 강조했다. 이어 1971년 3월 미국 탁구팀이 중국을 방문하여 이루어진 '핑퐁외교'와 동년 7월 키신저(Henry Kissinger)-저우언라이(周恩來) 회담 등을 통해 관계 정상화가 논의되었다.

미중 수교 이후 미국은 1980년대 중반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의 적용을 확대하는 무역협정에 서명하기로 결정했고,²⁰⁾ 1980년 11월 출범한 레이건(Ronald Reagan)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을 승인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대만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을 명분으로 첨단무기의 판매를 유지하는 이중(雙軌)정책을 취하였다.²¹⁾ 특히 레이건 행정부는 중국과의 군사전략적 관계 확대를 모색했는데, 이는 곧 소련에 대한 견제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역시 1960년대 후반부터 소련과의 이념적·군사적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었고, 문화대혁명 이후 국내경제적 어려움과 피폐해진 민심을 수습할 필요성이 있었다. 중국이 처한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은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시도하는 데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²²⁾ 특히 개혁·개방 노선을 천명한 덩샤오핑(鄧小平) 지도부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 진영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외관계의 전략적 환경을 개선하고 국제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외교정책을 구사했다.²³⁾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중국 지도부는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주변 안보환경 조성을 대외전략 목표로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실용주의 외교를 지향했다. 미중 양국은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안보협력도 확대하기 시작했으며, 양국 지도자 간 상호 방문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1989년 발생한 ‘6·4 천안문 사건’ 이후 미국이 대중 경제제재를 단행하면서 미중관계는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20) 해리 하딩 지음, 안인혜 옮김, 『중국과 미국』 (서울: 나남출판, 1995), p. 171.

21) 세이시엔 지음, 한인희 옮김, 『중국외교사』 (서울: 지영사, 2000), pp. 22~23.

22) Rosemary Foot, *The Practice of Power: US Relations with China since 194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 2.

23) Alan D. Romberg, “U.S. Strategic Interests in Northeast Asia: 2009 and Beyond,” 『전략연구』, 제14권 2호 (2007), p. 9.

(3) '전략적 불안정' 시기(1989~2008)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미중관계는 '갈등과 경쟁 및 협력'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전략적 불안정'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냉전 시기 미중관계가 주로 '소련 요인'으로 인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점에서, 구소련의 해체로 대표되는 냉전체제의 종식은 양국 모두에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동안 미중 양국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각되지 않았던 쌍무적 문제-인권, 무역마찰, 대만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소련이라는 주적(主敵)이 사라진 탈냉전 시기에도 여전히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새로운 지역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간 지역 안보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남으로써 역내 불안정과 복잡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²⁴⁾

탈냉전 초기 미국의 대중정책은 부시 행정부의 '평화적 참여(peaceful engagement)' 정책과 클린턴 행정부의 '포괄적 참여(comprehensive engagement)' 정책 및 '확대(enlargement)' 정책 등을 통해 중국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²⁵⁾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은 물론, 중국 역시 이에 대해 '화평연변(peaceful evolution)'

²⁴⁾ Thomas J. Christensen, "China, US-Japan Alliance and the Security Dilemma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4 (Spring 1999), pp. 49~60; Richard Holloran, "The Rising East," *Foreign Affairs*, no. 102 (Spring 1996), pp. 3~21. 중국이 세계적인 차원의 강대국은 아니지만 최소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역 강대국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David Shambaugh, "Chinese Hegemony over East Asia by 2015?"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9, no. 1 (Summer 1997); Samuel S. Kim, "China as Great Power," *Current History*, vol. 96, no. 611 (September 1997), pp. 246~251; Micheal Yahuda, "China's Search for a Global Role," *Current History*, vol. 98, no. 629 (September 1999), pp. 266~270 등 참조.

²⁵⁾ 이러한 정책 추진의 논리적 근거는 '중국의 부상'은 불가피하며, 미국의 정책적 목표는 중국을 포용하여 중국이 국내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제적 태도를 갖도록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Suisheng Zhao, *China-U.S. Relations Transformed: perspectives and strategic interact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8), p. 7.

의 전략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탈냉전 시기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아태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있어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더해주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미국의 역내 이익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²⁶⁾ 비록 2001년 ‘9·11’ 사건 발생 이후 2002년 9월 발표된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²⁷⁾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아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구성부분”이라 하여 미중관계를 ‘전략적 협력’ 관계로 보는 인식상의 변화는 있었지만, 미국이 여전히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 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잠재적인 위협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²⁸⁾

반면, 중국은 탈냉전 시기 평화롭고 안정적인 주변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아태 지역 내에 불안정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동맹관계 강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 등을 아태 지역에 존재하는 전통적 안보위협 의 예로 들고 있고, 미국의

26) 1997년 『4년 주기 방위 평가』보고서는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중점을 “미국과 대적할 만한 신흥 패권국의 출현을 방지하고, 미국 안보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을 미국과 대적할 만한 특정국가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May 1997); 2001년 5월 『미국과 아시아: 새로운 미국전략과 군사배치를 향하여』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할 것을 천명했고, 중국을 미국의 새로운 도전의 하나로 인식했다. RAND,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Posture*, embargoed news release report (May 15, 2001).

27)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28) 부시 행정부 초기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지만, 2001년 9·11 사건 이후 중국의 협력이 필요해짐에 따라 2002년 ‘건설적 관계(constructive relationship)’로 재규정했고, 부시 2기 행정부에서는 중국을 ‘책임 있는 이익공유자(responsible stakeholder)’로 명명했고, 2006년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중국을 ‘이익공유자(stake holder)’로 지칭했다. 차창훈, “전략적 경쟁자 혹은 이익공유자?, 미중 군사교류에 대한 일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46권 2호 (2006), p. 82.

일방적 패권주의도 아태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했다.²⁹⁾ 2002년 발간된 『중국국방백서(中國國防白書)』는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진행되는 동북아에서의 전역미사일방어(Theater Missile Defence: TMD) 체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대만의 보호 명목으로 제공 또는 적용될지도 모른다는 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³⁰⁾

탈냉전기 미중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긴장과 이완의 반복에 따른 불안정성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로 인해 경색되었던 미중관계는 1992년 말 각료급 수준의 대화를 재개함으로써 긴장이 다소 완화되었다. 하지만 1995년 5월 미국 정부가 대만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의 미국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양국관계는 다시 한번 냉각되었다. 또한 1997년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시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분야-즉, 고위급 전략대화, 지역 안보, 해상협력 등-에서 협력을 확대했고, 1998년 6월 클린턴 대통령의 방중 시에도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수립에 노력할 것을 합의하는 등 미중관계는 새로운 발전단계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1999년 5월 미국을 주축으로 한 나토군의 유고슬라비아 주재 중국대사관 폭격, 2001년 미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 충돌 사건 등을 거치면서 미중관계는 다시 한번 갈등을 겪었다. 다른 한편으로 부시 행정부 시기 미중 간 군사·안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는 미중 전략대화를, 2006년부터는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매년 두 차례씩 개최하는 등 전략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도 지속했다.

29) 江澤民, “全面建設小康社會, 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在中國共產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求是』, 第22期 (2002).

30)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02年中國的國防》白皮書』 (2002); “中國國務院新聞辦公室,” 『人民日報』, 2002.12.09.

나. 뉴노멀 시대의 미중관계 특징

(1) G2시대의 도래와 신형대국관계

탈탈냉전 시기의 미중관계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미국 패권이 상대적으로 하락(decline)하고, 신흥 강대국 중국이 급속하게 부상하는 새로운 ‘미중 두 강대국(G2) 체제’를 특징으로 한다.³¹⁾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제질서의 주도국인 미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하락시킨 반면, 신흥 강대국인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확대시킴으로써 소위 G2라 불리는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을 촉진한 시발점이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2~3%대 저성장에 머무를 때, 중국은 8%대의 고도성장을 구가함으로써 금융위기 해결 과정에서 ‘중국역할론’이 증대했다. 중국은 2010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5조 8,786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일본(5조 4,742억 달러)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고, 세계 각국의 미래전망 보고서도 대부분 2020~2030년경에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근에 발간된 자료일수록 중국의 세계 1위 경제 대국 등극 시기를 2020년 이전으로 앞당기고 있다.³²⁾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패권의 상대적 하락과 ‘중국역할론’의 증대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경제적 의존도는 심화되었고,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갈수록 심해졌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미국 국채 보유국이자 최대 무역흑자국이고,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

31) 전재성, “국제환경 변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영향,” 신중호 외,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 223.

32)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11);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 (2008); PricewaterhouseCoopers, *The World in 2050: The accelerating shift of global economic power: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011).

후 중국에 미국 국채의 보유 및 추가 구매를 요청하는 등 경제 분야에서 미국의 중국의존성이 증대되었다.³³⁾ 또한 2010년 이후 미중 간 위안화 절상문제를 비롯한 무역마찰, 이란 핵 문제, 달라이라마 문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 남중국해 분쟁 등을 둘러싼 상호 갈등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주목할 점은 바로 이 과정에서 미중 간 새로운 형태의 협력과 갈등관계가 출현했다는 것이다. 즉, 최근의 미중관계는 이전보다 글로벌 차원의 협력기회는 증대되었지만, 기존의 국내정치 요인과 구조적 요인에 의한 영향만이 아니라 중국의 부상에 따른 영향력 증대와 이익 경쟁 등으로 더욱 다원화되는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패권의 상대적 하락과 ‘중국역할론’의 증대는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종합국력 격차가 이전보다 축소되었다고 인식하도록 만들었고, 이는 곧 대외정책에 있어서 기존의 소극적이고 수동적 대응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책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결국 중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정당한 ‘핵심이익’을 존중하도록 하는 공세적인 대미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³⁴⁾ 실제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009년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 방중 시 서로의 핵심이익과 관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는 2010년 5월 개최된 미중 ‘전략·경제대화’ 개막 연설에서도 반복되었다.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인 다이빙궈(戴秉國) 역시 주권안보와 영토보존 및 국가통일을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언급하였다.³⁵⁾

33) Wayne M. Morrison, “China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CRS Report (June 3, 2009), p. 8.

3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공세적 대미정책에 대해서는 김재철, “세계금융위기와 중국의 대미정책,” 『中蘇研究』, 제34권 2호 (2010), pp. 15~40.

35) 다이빙궈가 언급한 중국의 3가지 핵심이익: ①중국공산당 영도, 사회주의제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노선, ②중국의 주권안보, 영토보존, 국가통일, ③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기본적으로 보장. 戴秉國, “堅持走和平發展道路,” <<http://www.fmprc.gov.cn/>>

이러한 경향성을 반영하여 미중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중국이 제안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구축 노력이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2011년 미국 방문 시 양국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상호존중, 호혜공영의 협력동반자관계(相互尊重、互利共贏的合作伙伴關係) 건설”이라는 미중관계의 비전을 제시했고, 2012년 5월 중미 전략경제대화 개막식에서는 ‘신형대국관계’ 구축이라는 화두를 제시했다.³⁶⁾ 시진핑 국가부주석 역시 2012년 7월 중국 칭화대학(清華大學)에서 열린 ‘제1회 세계평화포럼’에서 ‘신형대국관계’ 건설을 역설했다. 제18차 당 대회 보고에서도 중국은 타협과 협력을 통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국관계 구축을 강조하였다.³⁷⁾

그동안 제기된 언급을 통해서 볼 때, ‘신형대국관계’란 상호존중과 호혜호리의 협력동반자관계를 핵심 특징으로 하는 대국관계로서, 신형대국과 기존 패권국 간 충돌과 모순을 처리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³⁸⁾ 중국은 ‘신형대국관계’ 제기를 통해 중국과 미국이 “갈등이 아닌 협력을 하고, 중국의 부상을 미국이 인정하며, 상호 핵심이익을 존중하자”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구축 요구에 직접 반응하기보다는 중국의 ‘평화적 부상(peaceful rise)’에 대한 강조로 화답하였다.³⁹⁾

chn/gxh/tyb/zyxw/t774662.htm) (검색일: 2017.08.28.).

36) 胡錦濤, “推進互利共贏合作, 發展新型大國關係: 在第四輪中美戰略與經濟對話開幕式上的致辭,” 『中國新聞網』, 2012.05.03. 후 주석은 이를 통해 중미관계 발전의 기본 입장과 원칙을 밝히며 강대국 간의 힘과 충돌의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강대국 관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신형 강대국은 기존 강대국의 지위와 영역에 도전하며 이는 결국 양측의 충돌을 가져오는 ‘강대국의 비극’이라는 전철을 중국과 미국이 답습할 이유가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제의를 했다.

37) “胡錦濤, 堅定不移沿着中國特色社會主義道路前進, 為全面建成小康社會而奮鬥,” 『人民網』, 2012.11.09, <<http://cpc.people.com.cn/n/2012/1118/c64094-19612151.html>> (검색일: 2017.08.31.).

38) “胡錦濤會見美國總統奧巴馬,” 『中國新聞網』, 2012.06.20, <<http://www.chinanews.com/gn/2012/06-20/3975110.shtml>> (검색일: 2017.08.31.).

2017년 10월 19차 당 대회 보고에서,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라는 용어 대신 ‘신형국제관계’를 제시했는데, 이는 스스로 대국이라 칭함에 따라 발생한 미국과의 갈등은 물론 주변국의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류운명공동체’의 건설도 제기했는데, 이는 중국이 정면 대결보다는 안정적인 미중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을 우회적으로 확대하려는 대미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향후 미중관계는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패턴으로 진행될 것으로 분석된다.

(2) 미중관계 뉴노멀 시대의 특징

미중관계는 이미 전략적 협력과 경쟁이 일상화(routinization)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진입했다. 21세기 국제정치의 핵심 키워드는 현존 패권국 미국의 글로벌·지역적 영향력에 대한 신흥 강대국 중국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의 부상이 미국패권의 상대적 쇠퇴를 촉진하면서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⁴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미중 간

39) 미중 정상회담 시 시진핑은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 두 대국을 수용할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강조했고, “미중은 자국 경제발전, 글로벌 경제 회복, 지역적·글로벌 이슈 처리 등에서 공통 이익을 갖고 있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는 “중국이 지속적·평화적으로 세계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환영하며,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기후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화답했다.

40) 찬성론자들은 주로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군사력도 계속 증강 추세에 있으며, 대외정책 역시 공세적(assertive)이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반면, 회의론자들은 미국의 군사력이 여전히 중국을 압도하고 있고, 미국의 힘(power)과 사명감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 내 대표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옌쉐통(閻學通) 교수 역시 2023년경 미중 양강(兩極)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을 주장하면서도 경제력이 아닌 군사력과 문화적인 면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격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국방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의 5배 이상이며, 미 국방부는 군사혁신과 함께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Anti-access, Area denial: 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공해전(AirSea Battle: ASB)’ 전략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전략적 경쟁과 갈등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은 명확해 보이고, 이제 국제 사회의 관심은 미중 간 ‘세력전이’와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이 언제 나타날 것인지에 집중되어 있다.

즉, 중국이 미국 주도의 현 질서를 인정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점증시킬 것인지, 혹은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 내지 재편을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중의 첨예한 갈등이 충돌로 이어질 것인지 등이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 사안으로 등장했다. 이 점은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성향이 강조되면서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사실 미국은 글로벌 이슈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전히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나, 체제와 이념의 차이로 인한 양국의 전략적 불신은 여전하며, 이로 인한 지역적 차원에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흥 강대국인 중국은 주변 지역에서의 영향력과 핵심이익을 수호하면서 미국과 제한적인 경쟁을 하고 있으나, 2017년 10월 19차 당 대회를 거쳐 2018년 본격적인 시진핑 집권 2기 체제가 출범하면 이러한 추세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상에서 본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의 특징은 미국의 주도력이 신흥 강대국인 중국으로 분산되는 다극화가 이루어지고, 기존의 체제와 이념 및 군사·안보적인 경쟁만이 아닌 경제 질서와 규범 및 제도, 문화의 경쟁과 글로벌 차원의 이슈를 둘러싼 경쟁으로 다원화되는 상호의존적 관계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어느 일국이 독점적인 우위를 점하기는 쉽지 않은 채 미중 간 상호의존성과 취약성이 동시에 심화되는 구조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양국은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현실적·구조적 제약성을 상호인정하고 ‘미중 전략·경제 대화’와 ‘G20 정상회의’ 및 미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관계를 향후 전략적 협력 위주로 운용하고자 노력해왔다.⁴¹⁾

이와 같이, 뉴노멀 시대의 미중관계는 냉전·탈냉전 시기의 제로섬(zero-sum) 성격의 강대국관계라기보다는 ‘협력 속 경쟁과 갈등’ 혹은 ‘경쟁과 갈등 속 협력’이라는 복합적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냐하면, 미중 간 상호의존성은 증대했지만 취약성이 오히려 심화되었고, 상호 ‘전략적 불신’ 또한 여전하며, 미중관계에 영향을 주는 내부·외부 영향요인도 과거에 비해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다.

3. 미중관계의 변화 요인

여기에서는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의 변화에 미칠 주요 변수와 쟁점들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와 행위의 두 가지 분석 수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왈츠(Walz)는 국제정치를 분석할 때, 3개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개인주의 행태 중심의 ‘제1의 이미지(first image)’와 국내정치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제2의 이미지(second image)’, 그리고 국가를 하나의 기본변수(Unit)로 보고 국제관계의 틀로 보는 ‘제3의 이미지(third image)’가 그것이다.

구조적 수준 변인은 제3의 이미지로서, 즉, 국가 간 세력관계의 변화, 특히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를 설정하였고, 행위 수준 변인은 제1의 이미지와 제2의 이미지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통하여 미국과 중국의 리더십 교체와 국내정치적 요소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양국 지도자 리더십의 개인적 성향과 국내적 제약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⁴²⁾

⁴¹⁾ David M. Lampto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Age of Obama: looking each other straight in the eye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8, no. 62 (November 2009).

⁴²⁾ 미중관계 변화 요인 분석에 있어 왈츠의 3가지 이미지(the levels of analysis) 분석 틀 중에서 시스템 행태 중심의 ‘third image’와 국내정치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second image’의 사고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가. 구조적 요인: 중국의 부상과 미중 관계

국제정치학에 있어 ‘제3의 이미지’의 틀에서 보는 구조주의적 접근방법(the structural approach)은 국가를 기본 단위이자 핵심으로 파악하고 국가들 간의 안보, 시장, 영향력에 대한 경쟁을 무정부 상태의 제로섬(zero-sum) 관계로 인식한다.⁴³⁾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상호 안보경쟁이 불가피하게 지속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상호 불신과 불확실성에 의한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로 구조화되어 나타난다.⁴⁴⁾

따라서 중국의 지속적인 부상은 미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조적 변인이 된다.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결정한 이후 1990년대 탈냉전의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고도성장을 구가하였다. 특히,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로 2010년 중국의 경제규모는 일본을 능가해 미국 다음의 세계 2위로 급부상하였다. 당시 중국 부상의 실체는 경제성장에 있으며, 대체로 2020년을 전후해 미국을 초월하거나 근접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이 지배적이었다.⁴⁵⁾ 그러나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면서 중국 경제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게 됨에 따라 이러한 예측은 실

43) 현실주의적 구조주의 접근방법에서 국가는 선형적인 행위자로서 국제정치에서 국가 이외의 다른 행위자들은 중요치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국가 ‘주권’은 독립된 정치 공동체의 존재를 의미하며 자신의 영토에서 법률적인 권위를 갖는다.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퍼트리샤 오언스 편저,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5), p. 166.

44) 휠러와 부스(Wheeler and Booth)는 안보딜레마란 “한 국가의 군사적 준비가 다른 국가의 심리에 있어 그와 같은 준비가 단지 ‘방어적인’ 목적인지, 공격적인 목적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들어낼 때 나타난다”고 말한다. 위의 책, pp. 164~165.

45) He Jianwu, Li Shantong and Sandra Polaski, *China's Economic Prospects: 2006-2020*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April 2007); 미국 의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인사이트는 2013년 경, 유니트는 2018년 경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초월할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Craig K. Elwell and Marc Labonte, “Is China a Threat to the U.S. Economy?” *CRS Reports for Congress* (January 23, 2007).

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경제력에 기반한 중국의 종합국력이 미국과의 격차를 축소시키면서 국제사회, 최소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중 양강 체제(G2)의 구성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신흥 강대국 중국이 자국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 확대된 자국의 이익을 어떠한 형태로 보호할 것이며, 이에 대해 기존 강대국인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미중관계가 규정될 것이다. 미국은 소련 해체 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글로벌 차원의 모든 사안에 개입하고 있는데,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떠한 형태로든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정은 중국의 주변 지역인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제도와 규범에까지 폭넓게 확산될 개연성도 내포되어 있다.

물론,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미국 주도의 질서 유지에 위협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협력의 기회이기도 하다. 앞서서도 분석했듯이, 중국의 부상을 보는 국제정치적 관점 역시 이를 모두 공유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재해석하면, 부상한 중국은 주변국 및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중국위협론’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중국기회론’으로 양분할 수 있다. 즉, 중국위협론은 중국의 부상이 옛 중화질서로의 복귀를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중국은 현재의 패권국인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전이의 국가로서 호전적 성향을 가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에, 중국기회론은 중국이 국제사회에 안정적으로 편입하면서 국제규범과 책임을 준수하는 협력적 국가로 변모하면서 국제사회에 위협이 아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관점이다.⁴⁶⁾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기반해 상호 견제 조치를 취하면서도 국제테러와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차원의 이슈와 복핵 문제

46) 전병곤 외, 『한·중·일 간 외교안보협력관계 비교분석과 전망(2015년 한·중·일 역학관계 대응 종합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2), p. 42.

등에서 외교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필요한 중국은 안정적인 중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형대국관계’를 미국에 제의하면서 상호 핵심이익의 존중을 요구하였다. 게다가 중국은 ‘중국의 꿈(中國夢)’과 ‘중화민족의 부흥’ 실현을 위해 군비를 증강시키고 해양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주권과 영토, 발전이익을 핵심이익으로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이전보다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입각해 중국의 부상 억제, 동맹관계 강화, 역내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 확산, 북핵 및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분쟁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미중관계는 점차 갈등적 측면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의 미중관계는 양국의 국력 차이, 특히 군사력의 차이로 불균등한 안정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상한 중국과 이를 제어하려는 미국의 관계는 협력적 측면보다 갈등적 측면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협력적 관계와 대립·경쟁적 관계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는 불확실성도 내재해 있다. 이는 중국의 부상이 어디까지 지속될지, 이를 미국이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의 견제를 중국이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나. 행위자 요인: 리더십 교체와 국내정치적 변화

구조와 행위 중 무엇이 더욱 중요한 변인인가는 판단하기 불가능한 철학적 질문일 수밖에 없으나, 구조는 일종의 맥락이 되며 그 안에서 행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전후관계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⁷⁾ 최근 다양한 정치체제의 발현과 한계 그리고 G2 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 모색은 다시금 국내정치적 요소들이 정책결정자들의 외교적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가설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설사 독재정권이라

⁴⁷⁾ 위의 책, p. 44.

할지라도 국내적 비용과 이익에 의해 정책결정을 하게 되고, 특히 중요한 대외정책 결정에서도 국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가설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관계에 있어 정책결정자의 개인적 성향과 지배이념을 이해하여야만 실제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변수들을 찾아낼 수 있다. 즉, 국가 정치지도부의 신념체계와 인식(perception)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미친다.⁴⁸⁾ 이러한 지도부의 인식은 역사관과 교육 그리고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국가 간의 외교정책 역시 상호 역사관계, 정치문화 그리고 제반 상황들을 분석 틀에 포함시켜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의 경우는 시진핑의 개인적 성향과 중국 지도부의 국내 문제와 대외 문제에 대한 전략적 인식이 무엇인지가 대미관계를 규정하는 중요 변인이 된다. 중국은 여전히 사회적 통제력이 강한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를 유지하고 있어 시진핑을 비롯한 지도부의 인식과 선호도는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시진핑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자신감을 토대로 강력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란 중국의 꿈 실현을 강조해왔는데, 이는 주변국에 커다란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역내 주도권 다툼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미국이 동맹관계 강화를 통해 군사·안보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커다란 불만을 갖고 있으며, 금융 및 하이테크 중심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외교·안보적 영향력의 확대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⁴⁸⁾ 로버트 저비스(Robert Jervis, 1976)는 국제관계에서의 인지론적(cognitive)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는 정책결정자의 개인적 인식(이미지, 신념과 의도)은 외교정책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개인적 인식은 역사적인 경험과 타인과의 교류에 의한 직관과 관심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Robert Jervi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특히, 2017년 10월 19차 당 대회를 통해 집권 2기를 맞는 시진핑은 통치이념으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당장에 삽입하고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는 등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19대 보고에 의하면, 중국은 향후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해 인류에 많은 공헌을 할 것이며, 유엔의 역할과 글로벌 경제관리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되, 향후 국제사회에서 책임대국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⁴⁹⁾ 그리고 중국은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의 대국외교를 주창하고 있는데,⁵⁰⁾ 이는 향후 영향력 확대를 위한 미국과의 경쟁, 특히 규범 경쟁이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2016년 11월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미국 우선(America First)’ 과 강한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트럼프식 뉴딜정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성향은 기존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강력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은 ‘경제, 군사적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economic and military strength)’이며, 위협받는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으로 ‘위대한 미국의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이고, 그 출발점은 미국 내부의 경제부흥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⁵¹⁾

이는 미국이 해외 군사개입 축소, 동맹국에 대한 방위분담 확대, 세계

49) 習近平, “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 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 在中國共產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http://cpc.people.com.cn/19th/n1/2017/1027/c414395-29613458.html>> (검색일: 2017.10.26.).

50) 신형 국제관계의 핵심은 ‘상호존중’, ‘공평정의’, ‘상생협력’이고, 인류운명공동체는 항구적 평화, 보편적 안전, 공동번영, 포용개방, 청결하고 아름다운 세계 등 5개 세계의 건설을 의미한다. “王毅談新時代中國特色大國外交總目標: 推動構建人類命運共同體.” <<http://fmprc.gov.cn/web/wjbzhd/t1503111.shtml>> (검색일: 2017.10.27.).

51)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 고찰,” 『연합뉴스』, 2016.11.14.

경찰국가보다는 미국 국익에 중심을 두는 대외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을 전면에 내세움에 따라 향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과도 무역전쟁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 미국은 중국의 지역패권국으로의 부상을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미사일 방어체계(Missile Defense: MD)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들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기후협약」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탈퇴에서 보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독선적이고 돌발적인 행위는 기존 미국 주도의 질서에 공백을 초래하는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점은 새로운 국제질서 모색을 위한 중국의 규범경쟁을 유인하는 측면도 된다. 이처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대외전략은 예측하기 쉽지 않으며 그만큼 불확실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정책의 향방은 향후 미중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 미중관계의 변화와 주요 쟁점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 변화 요인을 구조적 요인과 행위자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조적 요인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를, 행위자 요인은 리더십 교체와 국내정치의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미중관계의 변화는 협력과 경쟁의 측면을 모두 함유한 복합적 상호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분석했듯이, 중국의 부상이 착실히 진행되더라도 미국의 국력을 단기간에 추월할 수 없기 때문에 미중 간 불균등한 안정구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미국 중심의 이익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며, 중국은 미국의 단극 체제와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한 편입과 도전을 선택할 것이다. 그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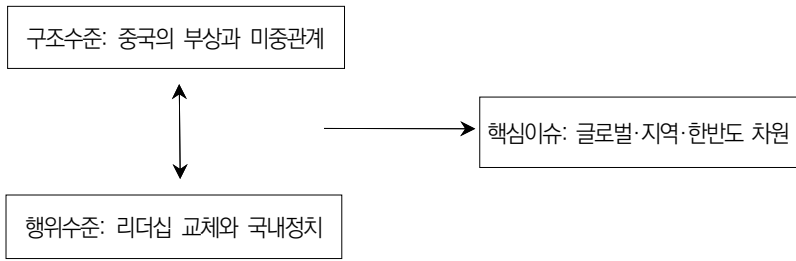
단 기준은 중국의 부상과 이익에 미칠 영향이며, 그에 따른 대응은 미국의 반응을 포함 사안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는 미중관계의 변화를 전망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1차년도인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미중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데 있지 않고,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가 협력과 경쟁의 복합적 관계로 전개될 개연성이 크며, 이것이 한반도에 어떠한 함의를 주는가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중 간 전략적 협력 및 경쟁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추출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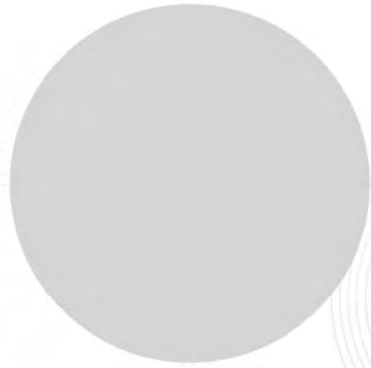
앞의 구조와 행위 수준의 변인들을 통해 볼 때, 향후 미중관계의 변화는 글로벌 및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쟁점들을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역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는 역내 질서와 패권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보이고 있고, 이는 향후 역내의 다양한 미중 간의 현안 및 잠재적 사안들을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이다. 주요 쟁점으로는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북핵 문제, 사드 문제, 동맹 및 다자안보협력, 일대일로 등이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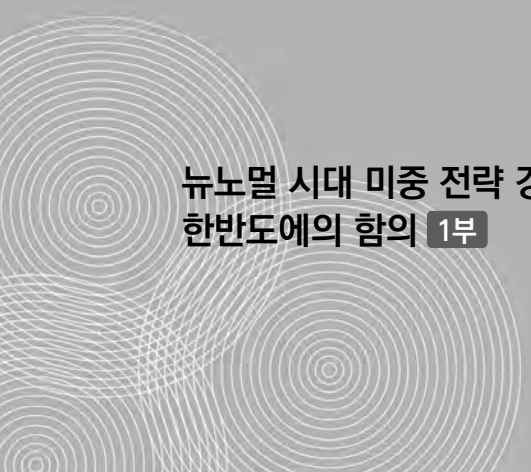
다음으로 글로벌 차원에서는 중국의 세력범위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슈들이 적지 않고 향후 미중 간 규범경쟁의 징후들을 판별하는 의미에서 주요 쟁점들을 선정하였다. 즉, 지구적 경제 질서, 국제해양 질서, 테러리즘(사이버안보), 기후변화와 환경, 인권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우리의 이익과 밀접한 한반도 차원의 쟁점들도 선정하였다. 한반도 차원의 쟁점인 한미동맹, 남북관계, 평화체제, 통일 등은 모두 미중 간의 이견을 보이면서 동시에 미중관계에 영향을 끼치거나 영향을 받는 이슈들이다. 이상의 구조와 행위 수준의 변인과 쟁점들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II-1 미중관계에 미칠 변인 간 관계도



Ⅲ.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의 핵심쟁점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 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 **1부**

1. 글로벌 차원

가. 지구적 경제 질서

(1) 미국 입장

2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세계의 경제, 안보 질서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여전히 경제력 회복과 국내경제 문제 해결에 골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의 경제회복 정책이 미국의 중산층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었다고 전면비판하면서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를 주창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에 기반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 체제와 더불어 미국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냉전기 자유주의 국제경제 질서를 지키는 보루와 같은 나라였다. 패권안정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국제적 공공재를 제공하는 패권국가로서 세계경제가 무한 경쟁의 보호주의로 환원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동시에 다른 국가에 대한 안보를 제공하면서 이들 국가와 협력하여 때로는 경제적 양보를 끌어내고 때로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했다. 1970년대에 들어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냉전기 안보 개입으로 경제력이 약화되면서 미국은 기존의 개입주의 경제 패러다임을 버리고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취하게 된다.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미국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자본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탈규제의 정책을 취하며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제고하고,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독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WB)과 같은 국제기구를 활성화하였다.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로 미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의 신자유주의화를 가속화하는 정책을 강화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신자유주의 경제 운용과 금융의 자유화, 지구화 등은 미국 경제에도 부담을 주게 되어 결국 소득 격차의 심화, 중산층의 몰락, 경제 위기의 빠른 세계적 전파 등의 문제를 갖게 되었다. 2016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는 미국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 실업률 하락을 위한 노동정책, 중산층을 부활시키기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일반적 추세에 더하여 제조업 부활, 미국을 떠난 자본들의 회귀, 미국에 대해 소위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는 무역 상대국에 대한 비판,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판 등의 요소를 부가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미국 경제가 미국 외교정책에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한 점에서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

세계경제 질서의 핵심에는 새로운 미중관계가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비판을 지속해왔다. 향후 새로운 미중관계를 기축으로 어떠한 세계질서가 만들어질지 지켜보아야 하는데 우선 생각해 볼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여전히 지구적 차원에서 유일의 리더십 국가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 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비중이 낮아지고 공공재 제공의 역할이 줄어들었지만 많은 국가가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경제적 리더십을 행사하기를 원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공격하고 보호주의로 선회하면서 많은 국가가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경제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군사적 의미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더욱 견고하다. 미국은 여전히 지구 곳곳에 군사적 투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과 연구개발의 측면에서 다른 어느 나라도 압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지역전략, 혹은 대중전략은 미국의 지구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의 외교대전략은 행정부별로, 혹은 시기별로 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변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현재 트럼프 정부의 외교전략을 무엇

이라고 정의하기 어렵지만 기존의 지구적 투사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미국의 국익이 결정적으로 개입된 사안에 대해서만 군사력을 사용한다는 전략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더불어 미국 국익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미국 내 다양한 외교전략 논쟁이 있었다. 미국의 국력이 축소되는 국면에서 기존의 개입주의보다 선별적이고 방어적인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⁵²⁾

셋째,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개인 변수에 영향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정치의 변화 및 미국 내 정치 과정이라는 구조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를 밝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외교전략을 비판하고 미국 국익 우선의 기치를 내걸고 당선된 데에는 미국의 국익을 현재와 같이 조망하게 만든 구조적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강대국으로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시진핑 정부하에서 중국적 특색을 가진 대국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미국에 대해 강력한 도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차원의 미중관계도 매우 중요해졌다. 미국의 세계경제 전략에 부분적으로 도전하는 중국은 G20와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를 통해 지구적 차원의 영향력을 확장하려 노력한다. 중국은 과거 20년 지구적 행위자로 등장했고 현재 모든 국제기구에서 중요한 회원국이 되었다. 덩샤오핑이

⁵²⁾ G. John Ikenberry, Michael Mastanduno and William C. Wohlforth, "Introduction: Unipolarity, State Behavior, and Systemic Consequences," *World Politics*, vol. 61, no. 1 (January, 2009), pp. 1~27; Nuno P. Monteiro, "Unrest Assured Why Unipolarity Is Not Peaceful," *International Security*, vol. 36, no. 3 (Winter 2011/12), pp. 9~40; Nuno P. Monteiro, *Theory of Unipolar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A Superior U.S. Grand Strategy,"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16), pp. 70~83.

논한 도광양희(韜光養晦)의 기본 철학은 유지되지만 중국의 이익이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질문은 중국이 현재까지 국제제도의 핵심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는 현상유지국가로 남아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G20은 중요한 지구제도로 부상하였고 중국도 이와 함께 중요성이 증가했다. 그리고 러시아의 주도로 2009년 여름 브릭스가 창설되었고 2012년 남아공이 합류했다.

중국은 1999년 전후 독일 쉬뢰더 총리 방중 이후 G8 합류요청을 받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논쟁을 벌였으나 아직 선진국 지위가 아니었고, G8에 합류할 경우 많은 국제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부정적으로 여겼다. 그러나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이러한 상황은 급변하여 중국은 G20을 통해 지구적 강대국으로 부상하려 했다. 2016년 일본에서 G8 회의가 개최되고 역시 G20을 일본에서 연이어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되었고 중국은 G20에서 논의되는 주요 국제 문제에서 점차 발언권을 강조해나가고 있다. 브릭스는 중국이 아시아 주변국 외교를 강조하는 데 비해 중요성이 아직 덜하여 지구적 차원의 중국의 관심보다는 지역 차원의 관심이 우선임을 보여주고 있다. 브릭스는 발전단계가 비슷하고 중요성이 높은 국가들의 모임으로 지구적 공공재를 제시하면서 서로 관심 있는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브릭스는 브릭스개발은행과 1,000억 달러 규모의 긴급외화준비협정(Contingency Reserve Arrangement: CRA)을 창설하여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브릭스개발은행은 시진핑 주석이 AIIB 창설을 발표한 2013년 10월과 비슷한 시기에 창설되었으며 워킹그룹도 베이징에 자리 잡고 있다. 양자의 목표는 사실상 동일한데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재정을 발전시킨다는 것으로 중국은 이 두 기구에서 일본은 아시아 개발은행, 미국은 세계은행에서 각각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들 기구는 경쟁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은행이 2014년 글로벌 인프라 기금(Global Infrastructure Facility:

GIF)을 창설한 이래 불가피하게 경쟁 구도를 가지게 되었다. 중국은 SCO에서만 브릭스에서 주도권을 추구하지는 않고, 결국 G8과 G20의 성과와 맞물려 브릭스의 의미가 결정될 확률이 높다. 브릭스가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많이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관건이다.⁵³⁾

항저우 G20 회의는 지구경제의 상호 의존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계기였다. 지구적 수요, 상품가격 하락의 문제, 신흥국으로부터 자본 탈출, 수입 격차와 불균형 발전, 테러, 기후 변화 등 중요한 지구적 문제들이 다루어졌다. 그러나 심각한 지구적 문제에 비해 글로벌 거버넌스는 여전히 많은 문제에 처해있다. 2008년 경제 위기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국내 수입 격차와 무역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포퓰리즘의 흐름에 위협받고 지구화에 역행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데 G20은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긴급구호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위기 시 국가들의 협력이 두드러진 것이다. 위기가 잠잠해진 가운데 협력이 약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또 다른 위기가 닥칠 때를 대비한 평시 협력, IMF 개혁 등 지구 거버넌스를 위한 노력, 특히 개도국의 협력, 각국 중앙은행과 재무장관들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은 향후 G20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스스로 생각하는 리더십을 넘어 개도국을 대변하면서 미국과 주요 공통이해를 같이 해나가는 적극적 정책을 펴기를 바라고 있다.⁵⁴⁾ 미국은 현존하는 G8, G20, 그리고 IMF나 WTO와 같은 다자 기구를 넘어 미중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6년 항저우 회의에서 기후 변화

⁵³⁾ Gudrun Wacker, "China's role in G20/BRICS and Implications,"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Berlin (2014).

⁵⁴⁾ G. John Ikenberry, "The Plot Against American Foreign Policy: Can the Liberal Order Survive?" *Foreign Affairs* (May/June 2017) 참조.

에 대한 미중 간의 협력이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적극적 리더십을 요구한다. 또한 경제 위기 초기에 IMF에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국이 3세계 국가들을 설득하고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⁵⁵⁾

미중 간의 양자 경제관계 역시 지구경제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중 수출은 경제 위기 이전 150% 증가세를 보이던 것이 이후에는 26% 증가했다. 다른 아시아 지역 국가에 비해 미국의 대중 수출은 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의 대중 수입 역시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22% 증가세를 보이다가 경제 위기 이후 2015년까지 32% 증가세를 보였다. 2003년 이후 중국은 아시아 국가 중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2015년에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미국의 상품 무역의 41%를 차지한다. 따라서 미국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지위는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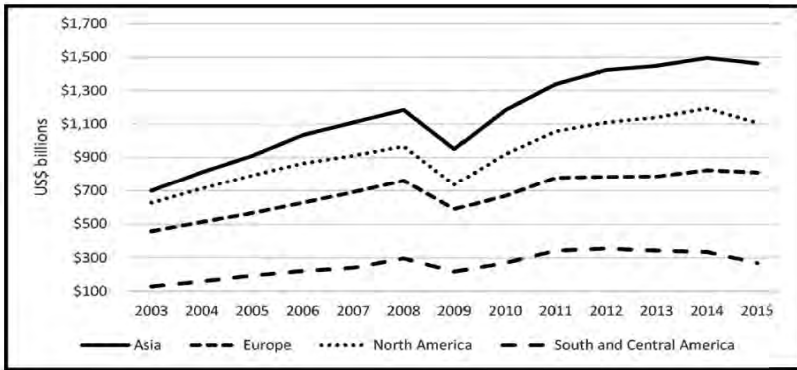
표 III-1 U.S Goods Trade with Asia and China, 2003~2015(US \$ billions)

Year	Asia		China		China's Share of U.S.-Asia Trade	
	Exports	Imports	Exports	Imports	Exports	Imports
2003	\$206	\$493	\$28	\$152	14%	31%
2004	\$231	\$581	\$34	\$197	15%	34%
2005	\$252	\$659	\$41	\$243	16%	37%
2006	\$291	\$743	\$54	\$288	19%	39%
2007	\$327	\$783	\$63	\$321	19%	41%
2008	\$359	\$825	\$70	\$338	19%	41%
2009	\$308	\$644	\$69	\$296	22%	46%
2010	\$387	\$796	\$92	\$365	24%	46%
2011	\$439	\$900	\$104	\$399	24%	44%
2012	\$457	\$966	\$111	\$426	24%	44%
2013	\$475	\$973	\$122	\$440	26%	45%
2014	\$481	\$1,018	\$124	\$468	26%	46%
2015	\$458	\$1,007	\$116	\$483	25%	48%

출처: U.S. Census Bureau, "U.S. Trade in Goods by Country," <<http://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index.html>> (검색일: 2017.08.01.).

⁵⁵⁾ Robert Kahn and Steven A. Tananbaum,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 G2 Within the G20,"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Global Economics Monthly* (April 2016).

그림 Ⅲ-1 U.S Goods Trade with Asia, Europe, North America, and South and Central America, 2003~2015



출처: United States Census Bureau, "U.S. Trade in Goods by Country," <<http://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index.html>> (검색일: 2017.08.01.).

문제는 향후 동아태 지역의 경제아키텍처의 향방이다. 트럼프 정부 등장 이전까지 경제면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강력하게 추진한 TPP를 추진했고, 2015년 10월 타결된 바 있다. 이외에도 동남아 국가들과 관계 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 등 경제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미국의 대아시아 교역량은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1조 1,800억 달러로 23.6%를 차지하던 것이 2015년에는 1조 4,600억 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TPP를 취소해버렸고 이후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과 환율 조작국 지정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핵 문제를 위한 중국의 도움을 얻기 위해 대중 경제압박을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어떠한 미중 경제관계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2) 중국 입장

현재 미중 사이에서 지구적 경제 질서를 놓고 양국의 시각 차이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분야는 국제금융과 무역질서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서구 강대국이 주도하는 WB와 IMF와 함께 미국과 일본

이 주도해온 아시아 지역 다자 간 개발은행인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등이 중국·인도·러시아·브라질 등 BRICS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신흥 경제 강국과 저개발/개발도상국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기존 국제무역의 기본 틀인 자유무역주의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단지 중국만의 생각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또한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노력을 기울인 TPP에서 탈퇴하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간의 합의에 따른 자유무역주의를 탈피하여 양자 간 협상을 통해 국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무역 질서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다양한 다자외교 무대에서 자유무역주의와 지역 경제 통합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하며 미국과 다른 무역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가) 국제금융 질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질서와 규범에 관해 중국의 도전이 가장 거센 분야 중의 하나가 경제 질서라 말할 수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분야는 금융과 무역 질서, 그리고 지역 경제 통합과 관련한 리더십이다.

중국은 2015년 4월 AIIB를 창립했는데 총 57개의 회원국이 참여한다고 발표하였다. 창립회원국들로는 현재 인도, 싱가포르, 한국,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시아의 주요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의 선진국도 포함되어 있다.⁵⁶⁾ 이 외에도 중국과 영토 분쟁

⁵⁶⁾ AIIB가 예상을 뛰어넘는 57개국의 창립회원국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영국의 가입이었는데, 당시 미중 사이에서 눈치를 살피던 많은 국가들이 이를 계기로 동참할 수 있었다. 영국의 가입은 미국 주도의 현 금융질서 내에서 AIIB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영국은 미국의 우려를 부분적으로 해소하며 자신의 경제적 실리 또한 보호하였다.

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을 포함한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이 모두 가입하였으며, 중앙아시아와 중동 국가,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그리고 남미의 브라질까지 전 세계적인 범주를 망라하고 있다.

AIIB의 창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미국과 이에 보조를 맞춘 일본, 캐나다 등을 제외하면 G7 국가 중 네 나라가, G20 국가 중에는 13개국이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AIIB는 설립 추진 초기의 예상을 깨고 영향력 있는 국제금융기구의 하나로 그 모습을 나타내었다. 또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자신감을 가지기에 충분한 이정표적인 사건이었다. 이후 AIIB는 2016년 1월 16일 공식적인 출범을 하였으며, 초대 총재에는 진리첸(金立群) 전(前) 중국 재정부 부부장이 선출되었다. AIIB는 2017년 8월 기준으로 80개 국가가 회원국⁵⁷⁾으로 가입해 있으며, 본부는 베이징에 개설되었다. 또한 중국은 AIIB에 297억 8천 40만 달러를 투자하며 32.0243% 지분율(total subscription)과 27.5186% 투표권(voting power)을 차지하고 있다.⁵⁸⁾

출범 당시 중국은 아시아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이 AIIB의 설립 목표이며, 이를 위한 1,000억 달러의 자본금 중 중국이 500억 달러, 나머지 참여국이 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AIIB는 기존의 다자 개발은행과의 상호보완을 통해 아시아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역내 경제발전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대화를 희망하는 아시아의 개도국에 중국 주도의 AIIB는 자국 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커다란 기대를 갖게 하는 다자개발은행의 출현이었다.

⁵⁷⁾ 이 중 24개 국가는 엄밀히 분리하면 '가입 예정국(pro prospective members)'이다. 이들 국가는 향후 자국 국내법절차와 자본금 납입을 거쳐 AIIB의 정식 회원국이 된다. AIIB 공식 홈페이지, <<https://www.aiib.org/en/index.html>> (검색일: 2017.08.22.).

⁵⁸⁾ "Members and Prospective Members of the Bank," <<https://www.aiib.org/en/about-aiib/governance/members-of-bank/index.html>> (검색일: 2017.08.22.).

반면에, 미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AIIB가 지배구조와 투명성 및 환경, 노동 세이프가드 부분에서 국제 수준에 미달할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신흥 경제강국들과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 중 일부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기존의 ADB가 아시아 개도국의 산업 인프라 시설 투자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들은 미일이 주도해온 ADB 지배구조 내에서 중국과 다른 개도국들의 상황이 투자자금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이런 점에서 중국과 AIIB 참여국들은 ADB와 경쟁할 수 있는 또 다른 다자개발은행의 출현이 역내 경제 통합과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당시 ADB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시설 투자 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약 7,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이에 비해 당시 ADB가 제공할 수 있는 투자자금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AIIB는 인프라 투자금을 융통하는 데 새로운 대안이란 긍정적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래튼 우즈 체제하에서 미국은 유럽과 일본과 함께 WB와 IMF, 그리고 ADB를 포함한 각 대륙별 개발은행들을 설립하고, 이 은행들을 통해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점차 부상하는 중국이 ADB에 대응하는 AIIB를 설립할 뿐 아니라, WB와 IMF에 대응하는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NDB)’과 ‘위기대응기금(CRA, 應急儲備基金)’을 BRICS 국가들과 함께 설립한 점에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향후 중국이 AIIB, NDB, CRA 등을 활용해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 질서에 도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중국 주도의 다자개발은행이 미국이 구축한 국제금융 질서를 보완할지 재편할지는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지켜 봐야 할 것이다.

(나) 국제무역 질서

국제무역 질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의 지지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과 아시아-태평양 자유 무역 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을 매개로 한 지역 경제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당시 국제무역 질서와 영향력을 놓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TPP⁵⁹⁾에 대응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 시절 국제무역 질서에서 미중 간의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2014년 11월 중국은 베이징에서 개최된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미국 주도의 TPP에 대응해 아태 지역의 주변국을 포괄하는 FTAAP 설립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미국은 이렇듯 중국이 국제금융 질서에 이어 무역질서에서도 목소리를 높여가자 국제경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TPP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미국 의회를 향해 국제경제 질서를 중국에 넘길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반대파들을 설득해 나갔다.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은, 당시 AIIB 설립, RECP과 FTAAP의 추진에 이어 해상과 육상의 신(新)실크로드를 가리키는 ‘일대일로’ 구상을 주창하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경제 질서에 도전하는 데 대한 미국 내 긴장감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행보가 기존의 경제, 금융질서에 대한 보완과 개혁이지 도전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제경제의 규범과 질서 구축에 대한 중국 영향력

⁵⁹⁾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으로 논의가 시작됐던 TPP는 2008년 미국, 호주, 페루가 뛰어들며 규모는 물론 그 의미까지 확대되었다. 2010년 3월 베트남이 가세하여 8개국이 정식협상을 개시하였으며, 이후 말레이시아가 2010년, 멕시코와 캐나다가 2012년, 일본이 2013년 협상에 참여하였다.

의 급속한 증가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TPP는 2015년 9월 30일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TPP 12개국의 경제장관들이 모인 각료회의에서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예정되었던 각료회의 일정을 4일이나 연장하면서 타결을 위해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였으며 결국 10월 5일 5일간의 협상 끝에 결실을 맺었다. 예상외의 전격적인 TPP 타결에는 경제적인 고려만이 아니라, 아태 지역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인 고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6년 미국이 대선 기간에 돌입하고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TPP를 “미국에 잠재적인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당선되면 미국은 TPP에서 탈퇴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ASEAN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TPP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의 핵심이며 만약 TPP가 퇴조한다면 미국의 지도력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다시금 TPP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대로 취임 3일 후인 2017년 1월 23일 TPP 탈퇴 계획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미국의 대선이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계속해서 TPP 탈퇴 의사를 유지하자 국제사회는 자유무역주의를 중심으로 한 국제무역 구도의 변화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은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과는 대조되는 행보를 강화하며 국제사회에서 자유무역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자청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당선자 시절인 2016년 11월 중국 시진핑 주석은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4차 APEC 정상회의의 기조연설을 통해 아태 지역이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의 도전과 무역성장 정체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경제의 글로벌화의 이점과 FTAAP은 아태 지역의 장기적 번영과 관련된 전략 방안이라 칭하며 조기 구축을 촉구하였다. 이어 시 주석은 2017년 1월 1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제45차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하여 개막 연설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분명한 반대를 표시하고 자유무역주의의 수호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2017년 초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TPP 탈퇴를 선언한 이후 중국은 2017년 3월 23~26일에 하이난성(海南省)에서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미래와 직면(直面全球化與自由貿易的未來)’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보아오 아시아 포럼(Boao Forum for Asia, 博鰲亞洲論壇)에서 개막식 축전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지혜를 모아 포용력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⁶⁰⁾ 이어 같은 해 5월에 개막한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시 주석은 기조연설을 통해 “무역은 성장의 견인차로,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국가 간 불균형과 분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창했다.⁶¹⁾ 또한 2017년 9월 샤먼(廈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BRICS 공상(工商) 포럼’ 개막식에 참석한 시 주석은 기조연설을 통해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의 추진으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시 주석은 경제 글로벌화의 재균형을 통해 각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⁶²⁾

결론적으로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보호무역주의로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자유무역주의의 퇴보에 대해 우려하는 국제사회 회원국에 새로운 리더십을 보이는 행보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자유무역 수호의지와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제 대응 조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보이는 중국 내 외국기업들에 대한 경영과 투자 법규 등 중국이 실제로 보여주는 경제 정책과의 괴리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60) “習近平向博鰲亞洲論壇2017年年會開幕式致賀信,” 『新華社』, 2017.03.25,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7-03/25/c_1120693072.htm> (검색일: 2017.09.10.).

61) “習近平在‘一帶一路’國際合作高峰論壇圓桌峰會上的開幕辭,” 『新華社』, 2017.05.15,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7-05/15/c_1120976082.htm> (검색일: 2017.09.10.).

62) “習近平在金磚國家工商論壇開幕式上的講話(全文),” 『新華社』, 2017.09.03,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7-09/03/c_1121596338.htm> (검색일: 2017.09.10.).

중국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나. 국제해양 질서

(1) 미국 입장

국제해양 질서는 지구적, 지역적 차원에서 경제적, 군사적, 이념적 사안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이다. 미국과 중국은 동아태 지역을 둘러싼 해양 질서를 놓고 경쟁에 돌입해 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서해 등에서 주장하는 해양영토에 관한 사안들에 주목해왔다. 중국의 주장 뒤에 깔려있는 해양 질서에 대한 인식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구상하고 주장하는 바대로 실제 해양영토가 재조정된다면 미국의 동아태 전략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미국은 생각하고 있다. 우선 상업적 중요성을 들 수 있다. 남중국해의 경우 매년 3조 4,000억 달러 상당의 국제해운상품이 통과하며 이들 중 많은 부분이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과 연계되어 있다. 둘째, 어업과 원유, 가스 등 중요한 에너지원이 역시 해양 질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셋째, 해양 질서와 분규 지역은 군사력 투사 및 법질서 강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해양뿐 아니라 상공에 대한 접근권과도 관련이 있다. 중국은 소위 제1도련선을 조성하여 중국 본토로부터 미국 군사력을 격리시키고자 하며,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여 잠수함발사핵미사일의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족주의라는 국민 감정도 해양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 미국은 중국의 해양 질서 주장이 중국인들의 민족주의 감정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이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간주한다.

동아시아 해양영토에 대한 주장뿐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중국의 주장 역시 미국의 주요 관심사이다. 중국은 자신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타국의 군사력 행사를 규율할 수 있다고 국제법을 해석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이슈와 중국의 해양영토 주장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만약 중국이 주장하는 해양영토에 대한 영유가 굳어질 경우 이들 섬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미국의 군사 활동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미중 간의 공군, 해군 간의 충돌은 이러한 시각 차이에 따라 더욱 가열되어 왔는데, 이미 2001년, 2002년, 2009년, 2013년, 2014년 등 수차례에 걸쳐 양국 간의 긴장이 조성된 바 있다.⁶³⁾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첫째, 미국은 국가 간의 모든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강제, 협박, 위협, 무력 사용 등이 행사되어서는 안 되고 국제법과 일치하는 바대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은 자유항행의 원칙을 준수함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국가가 국제법이 규정한 바대로 해양과 상공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고 본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 합법적 사용을 방해하는 모든 행동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준수한다. 셋째, 미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양, 육지 영토 분쟁에 관하여 주권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넷째, 미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주권사항에 대해 입장을 취하지 않지만 이러한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 바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가진다는 것이다. 영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강제력, 위협, 협박, 무력 사용에 의해서는 안 되며 국제법에 맞는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주장은 해양에 대한 관습 국제법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특히 육지에 관한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이 육지에 대한 논의와 별개

⁶³⁾ 이들 사건 목록은 다음과 같다. EP-3 Incident (April 2001); USNS Impeccable (March 2009); USNS Victorious (May 2009); USS George Washington (July-November 2010); U-2 Intercept (June 2011); INS [Indian Naval Ship] Airavat (July 2011); INS [Indian Naval Ship] Shivalik (June 2012); USNS Impeccable (July 2013).

로 진행될 때 미국은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분쟁 당사국은 지금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는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도발적, 일방주의적 행동을 금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은 분쟁 지역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대규모의 육상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일곱째,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제해양법에 의거 자신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경제적 행동을 규제할 권리가 있다고 보지만, 군사적 행동을 규율할 권리는 없다고 본다. 여덟째, 미국은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하는 것이 국제법의 규율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아홉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일본의 행정권하에 있으며 현상을 변경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시도를 반대한다는 것이다.⁶⁴⁾

(2) 중국 입장

중국은 2008년 이후 남·동중국해를 중심으로 국제해양 질서의 분야에서 미국과 치열한 논쟁과 전략적인 경쟁을 치르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는 구단선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영토와 영해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중국해에서는 일본과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남·동중국해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입장 차이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가) 구단선의 역사적 유래와 중국의 주장

구단선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가 처음 공식적으로 출판한 지도는 장제스(蔣介石)의 중화민국(中華民國)이 본토를 지배하던 1947년 ‘11단선’

⁶⁴⁾ Ronald O'Rourke, "Maritime Territorial and Exclusive Economic Zone (EEZ) Disputes Involving China: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eptember 15, 2017) 참조.

이 그려진 ‘남해제도위치도(南海諸島位置圖, Map of South China Sea Islands)’이다. 이는 국민당 정부가 1930년대에 만들어진 중국 내 여러 지도들을 참고하여 제작한 지도로서 특히 ‘수륙지도심사위원회’에서 1935년 4월 출판한 ‘중국남해각도서도(中國南海各島嶼圖)’ 이후 개정된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하고 중국에서 물러난 후 국공내전에서 장제스의 국민당이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끄는 공산당에 패배하여 대만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은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이후에도 한동안은 국민당이 출판한 11단선의 ‘남해제도위치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후 1953년 저우언라이 총리는 베트남과 관련된 통킹만 주변에 표시된 2개의 선을 지운 9단선 지도를 승인하였다. 이후 중국에서는 9단선이 그려진 지도가 현재까지 출판되어왔다.⁶⁵⁾

이러한 배경을 가진 중국의 9단선이 남중국해 논쟁의 중심이 된 것은 2009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각각 또는 공동으로 대륙붕 외측한계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각 국가가 제출한 자료에 서로 이의를 제기하면서부터이다. 특히, 같은 해 5월 6일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공동으로 대륙붕 외측한계자료를 제출하자 중국은 외교서한을 통해 남사군도와 인근 해역, 해저, 지하에 대한 주권 및 해양 관할권이 중국에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 외교서한은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대륙붕 외측한계자료 제출은 남중국해에 있어서 중국의 주권 및 주권적 권리와 해양 관할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게다가 중국은 이 외교서한에 9단선을 그은 자국의 지도를 첨부함으로써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에서의 자국 관할권 구분의 기준선으로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 Nine

⁶⁵⁾ Li Jinming and Li Dexia, “The Dotted Line on the Chinese Map of the South China Sea: A Note,”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4, issue 3-4 (2003), p. 290.

Dash Line)’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격이 되었다.

이후 중국은 자국의 역사적 자료들을 근거로 9단선 내에 위치한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제도, 南沙群島),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제도, 西沙群島),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 黃巖島)을 포함한 모든 도서, 암초(reef), 모래톱(shoal), 간조 노출지(low-tide elevation)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과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나) 해양규범과 질서에 대한 중국의 이견

중국의 이러한 구단선에 대한 주장은 현재까지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주장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13년 1월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2016년 7월 12일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가 발표한 판결은 구단선을 포함하여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중국과 필리핀의 분쟁에 대한 PCA 재판에 대해서는 제2절에서 상세히 다루겠음).

이에 대해 중국은 약 2000년 전인 한(漢)대부터 남중국해의 인근 해역을 발견하고 점진적으로 관리체계를 완비하기 시작한 반면, 필리핀과 미국이 영유권 분쟁에서 근거로 삼는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 Conventions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은 1994년에 발효되어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13년 필리핀이 유엔해양법재판소에 영유권 분쟁의 강제 중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중재안을 수용하지도 재판 절차에 참여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그 이외에도 미국과 자유항행권의 해석과 입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중이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무해통항(innocent passage)’에 관한 주장이다. 군함의 초계, 정찰

활동이 상대 연안국에 대한 위협이나, 아니냐는 미중 간의 논쟁에서 미국은 「UNCLOS」에 근거하여 이를 해석하고 있다. 「UNCLOS」의 Part II. ‘영해와 접속수역(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의 Section 3에 포함된 Article 17.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⁶⁶⁾’에는 설사 영해라 해도 Article 19. ‘무해통항의 의미(Meaning of innocent passage)’에 명시된 조건들을 지킨다면 외국의 선박 나아가 설사 군함과 잠수함⁶⁷⁾이라 할지라도 무해통항의 권리를 주고 있다. 물론 「UNCLOS」는 연안국이 해상 안전, 어업, 환경오염 등에 관해 자국의 법과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Article 21.에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국제법의 근거를 가지고 남중국해에서 지속적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을 실행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하며 미국 군함이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12해리 이내로 진입하는 것을 반대하며 특히 군함의 초계, 정찰 활동에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에서의 군사 활동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미국과의 현저한 군사력, 특히 해군력의 차이에 기인한 군사·안보적 입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중국의 주장에 동의하는 국가는 총 27개국이 지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 북한, 페루 등 3개국이 직접 EEZ 내에서의 타국 군사 활동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있다.⁶⁸⁾

중국의 이러한 주장과 미국과의 논쟁은 표면적으로 국제법에 대한 해

66) 「UNCLOS」 Part II Article 17. “Right of Innocent Passage. Subject to this Convention, ships of all States, whether coastal or land-locked, enjoy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through the territorial sea.”

67) 「UNCLOS」 Part II Article 20. “Submarines and other underwater vehicles. In the territorial sea, submarines and other underwater vehicles are required to navigate on the surface and to show their flag.”

68) Ronald O’Rourke, *Maritime Territorial and Exclusive Economic Zone (EEZ) Disputes Involving China: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y 31, 2016), pp. 10~11.

석과 적용의 차이로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는 군사력, 특히 해·공군력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안보적인 입장과 조치이다. 하지만 향후 중국의 해·공군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간다면 현재에 나타나는 ‘무해통항권’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유항행의 권리에 대한 중국의 해석과 입장은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 중국 해양정책의 진화

중국 내에서 해군력 증강과 관련하여 해양정책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논의,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이다. 대표적으로 1982년 류화칭(劉華淸) 제독이 제시했던 항공모함 전단 운용의 필요성과 2000년경에 제1열도선, 2020년경에 제2열도선을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며 기존의 연안 방어 중심에서 근해와 원양 모두에서 작전이 가능한 해양 방어 전략의 수립을 주창한 것을 들 수 있다.⁶⁹⁾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양에 대해 관심과 정책을 구체화해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초반부터이다. 1991년 ‘전국해양업무회의(全國海洋工作會議)’가 처음으로 개최되며, 이를 통해 「90년대 중국 해양정책과 업무요강(九十年代中國海洋工作和工作綱要)」이 공개되었다. 이어 1992년 10월, 제14차 당 대회에서는 최초로 ‘해양권익’을 당 대회 보고서 내용에 포함시켰다.

2000년대 들어 중국 정부는 해양정책을 점차 구체화 시키면서 공식문서를 통해 ‘해양강국’의 목표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이러한 해양정책을 다룬 대표적인 정부 공식 문건으로는 2001년 발표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0차 5개년 계획요강(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個五年計劃綱要)」과 2002년의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 보고’ 등이 있

⁶⁹⁾ 劉華淸, 『劉華淸回顧錄』(北京: 解放軍出版社, 2005), pp. 432~439; 劉華淸, 『劉華淸軍事文選(上卷)』(北京: 解放軍出版社, 2008).

다. 특히 2003년 발표된 「전국 해양경제발전 계획요강(全國海洋經濟發展規劃綱要)」에서는 중국이 공식문건을 통해 최초로 ‘해양강국’을 전략적 목표로 거론하였다.⁷⁰⁾

2006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에서 비준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요강(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綱要)」에서는 해양과 기후자원 이용과 관련된 내용이 제6편의 제26장에서 분리되어 다루어졌다.⁷¹⁾ 이어 2008년에 발표된 「국가 해양사업 발전 계획요강(國家海洋事業發展規劃綱要)」에서는 중국은 “해양대국이며 해양문제는 국가근본이익과 관련된다(我國是海洋大國, 海洋問題事關國家根本利益)”고 기술했다. 또한 2020년까지 ‘해양강국’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 국민의 해양인식 증강, 해양 법규 체제, 해양산업과 기술, 해양 권익과 안보, 해양 생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능력 제고를 강조하였다.⁷²⁾

이어 2012년은 중국의 해양정책 진화 과정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해였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시 후진타오 주석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해양강국’의 용어가 당의 공식문서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통해 중국의 해양정책은 국가전략의 차원으로 격상된다.

후진타오에 이어 2012년 11월에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되고 2013년 3월 국가주석에 취임한 시진핑은 2013년 7월 거행된 제8차 중앙정치국 집체학습에서 중국은 “육상대국이자 또한 해양대국이며, 광범

70) 하도형, “중국 해양전략의 양면성과 공세성: 국가정책적 추진 목표 및 방식과 현황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5권 4호 (2015), pp. 78~79.

71)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綱要,” 『人民網』, 2006.03.16. <<http://politics.people.com.cn/BIG5/1026/4208451.html>> (검색일: 2017.09.10.). 특히 제26장(第二十六章 合理利用海洋和氣候資源) 제1절(第一節 保護和開發海洋資源).

72) 國家海洋局, “國務院關於國家海洋事業發展規劃綱要的批復(國函[2008]9號),” 2009.09.17. <http://www.soa.gov.cn/zw/gk/fwjgwywj/gwyfgwj/201211/t20121105_5264.html> (검색일: 2017.09.10.).

위한 해양 전략 이익을 가지고 있다(我國既是陸地大國, 也是海洋大國, 擁有廣泛的海洋戰略利益)”고 정의했다.⁷³⁾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해양대국’을 목표하면서, 주변국과의 남동중국 해에서의 영토·영해 분쟁으로 인한 갈등과 ‘재균형 정책’을 통한 미국의 개입을 염두에 두고 경제 이익을 고려한 해양정책에 안보이익도 고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공식적인 해양정책에서는 경제발전을 앞세우지만 중국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면서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기류는 2013년 4월에 발간된 중국 국방백서인 『중국 무장역량의 다양화 운용(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運用)』, 2015년 5월 발간된 중국 국방백서인 『중국의 군사전략(中國的軍事戰略)』, 2017년 1월 발간된 중국 국방백서인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안전협력정책(中國的亞太安全合作政策)』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거론하며 해양정책을 통한 국가주권, 안전, 영토의 완정성, 국가의 평화발전 보장, 그리고 ‘해양권익’을 보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⁷⁴⁾

실제로 최근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고조에 따른 새로운 해양 전략의 수립 과정에서 해군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자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호가 포함된 함대를 서해에서 동중국해를 거쳐 서태평양에 진입시킨 후 남중국해에서 랴오닝호의 주력 함재기인

73) “習近平: 進一步關心海洋認識海洋經略海洋,” 『中國共產黨新聞』, 2013.07.31, <<http://cpc.people.com.cn/n/2013/0731/c64094-22399483.html>> (검색일: 2017.09.10.).

74)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國防白皮書: 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運用(全文),” 2013.04., <http://www.mod.gov.cn/regulatory/2013-04/16/content_4617811.htm> (검색일: 2017.09.10.);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軍事戰略(全文),” 2015.05., <http://www.mod.gov.cn/regulatory/2015-05/26/content_4617812.htm> (검색일: 2017.09.10.);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亞太安全合作政策(全文),” 2017.01., <http://www.mod.gov.cn/regulatory/2017-01/11/content_4769725.htm> (검색일: 2017.09.10.).

젠(殲)-15의 이착륙 훈련을 시행하였다.⁷⁵⁾

해군의 위상 강화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2015년 중국 국방백서의 내용을 들 수 있다. 제4장 ‘군사역량 건설 발전(軍事力量建設發展)’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은 해양 관련 국가로서 장기간의 질서 안정 그리고 지속발전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군을 중시하고 해군을 경시하는 전통적인 사상을 타파”해야 하며, 전략적으로 해양을 다스리고 ‘해권(海權)’을 보호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⁷⁶⁾ 또한, 2017년 초 해군 중장인 위안위바이(袁譽柏) 북해 함대 사령관 겸 북부 전구(戰區) 부사령관이 남부 전구 사령관으로 임명됨으로써 군 인사에서도 해군이 중용되었다. 이는 육군 출신이 5개 전구 사령관 자리를 독점하던 상황에서 처음으로 해군 출신의 전구 사령관이 나타난 인사였다.

결론적으로 중국 해양정책의 진화, 특히 해군의 중시와 해군력의 강화 추세는 향후 미중 간의 국제해양 질서에 관한 긴장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중 간의 국제해양 질서를 놓고 긴장이 고조되기 쉬운 지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등 크게 3지역을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 북한의 연이은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북핵 위협

⁷⁵⁾ 중국의 해군력이 최근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다수의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아직 중국 해군에 일정한 한계와 약점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중국 해군이 육군, 공군 등 다른 군종과의 합동작전, 반(反)잠수함 전투(ASW), 해군 함선 부품의 해외 의존도, 장거리 타격 등에서 여전히 한계와 약점이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y 12, 2017), p. 4; Christopher Bodeen, "China aircraft carrier capabilities tested on latest mission," *AP*, January 14, 2017; "How does China's first aircraft carrier stack up?" CSIS China Power, <<http://chinapower.csis.org/aircraft-carrier/>> (검색일: 2017.03.20.); Minnie Chan, "Why China still can't beat US to become the world's most powerful navy," *South China Morning Post*, May 22, 2017.

⁷⁶⁾ 四、軍事力量建設發展 이하 “海洋關係國家長治久安和可持續發展。必須突破重陸輕海的傳統思維，高度重視經略海洋，維護海權。建設與國家安全和發展利益相適應的現代海上軍事力量體系，維護國家主權和海洋權益，維護戰略通道和海外利益安全，參與海洋國際合作，為建設海洋強國提供戰略支撐。” 『中國的軍事戰略(全文)』(2015.05.)

에 대한 확장 억제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에 따른 미국의 첨단 전략 기제가 전개되는 한반도 주변도 새로이 긴장이 고조되는 지역이다.

현재는 미국이 압도적인 해군력의 우세를 보이며 해양에서 중국의 행보를 가능한 견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점차 해군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미중 간의 해군력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곧 국제해양 질서는 물론 중국이 주장하는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놓고 미중 사이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서 양국 간에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다. 테러리즘과 사이버안보

(1) 미국 입장

테러는 비국가 행위자의 폭력으로 항시 존재해왔던 것이지만 탈냉전기 미국 단극 체제하의 테러는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게 되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어도 단극을 이루는 국가가 세계 모든 안보 문제를 필요에 따라 관리하기는 무리이다.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소위 불안정의 호(arc of instability)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다양한 안보 문제가 발생했다. 테러는 물론이고 내전, 인권 탄압, 마약 거래, 인종 분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문제는 미국의 국익과 유리되어 소위 버림받은 분쟁이 되는가 하면, 어떤 문제는 미국의 국익에 따라서만 처리되어 문제의 근본이 고려되어 해결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미국에 반대하는 세력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고 폭력과 연결된다. 또한 이런 세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이나 세력 역시 폭력을 동반하게 되어 단극 체제하에서도 많은 무력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중동의 다양한 테러와 내전, 이란과 같이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외교정책, 북한의 핵 개발 모두가 단극 체제에 대한 불만과 연결되고 또 이러한 나라에 대처하는 국가들 역시 군비를 증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접하게 되었다.

단극 체제의 자체 논리 때문에 미국은 점차 개입의 부담을 느끼게 되고 안보 위기, 정당성의 위기,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매우 선별적인 개입전략을 사용하게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 당시의 일방주의적 개입전략을 비판하면서 소위 후방으로부터의 리더십, 다자주의적 리더십을 강조하였다. 유럽과 중동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핵심이익이 걸려 있는 아시아에 대한 개입을 증시했다. 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많은 국가가 과도한 개입을 줄이는 정책을 단행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국제사회 전체 및 다른 강대국들과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지구 차원의 문제에서 미국이 중국과 협력을 도모하는 다른 분야는 테러리즘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테러의 위협을 겪고 있다. 1997년 베이징 버스 폭발사건, 2013년 베이징 천안문 광장 차량폭파 사건, 2014년 3월 쿤밍 철도역 습격사건, 2014년 5월 신장 야외시장 차량폭파 사건, 2015년 8월 방콕에서 중국 시민 습격사건, 2015년 9월 광시성 폭발사건, 2015년 11월 말리에서 중국인 습격사건 등 다양한 테러가 일어난 바 있다. 2012년 이후 중국 내에서 테러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테러 문제를 주로 국내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테러의 정의와 대응 형태도 국제 기준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나 중국 시민에 대한 습격이 최근 해외에서 빈번히 일어나면서 중국은 반테러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2003년 이후 미국의 지구적 대응과 유사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2014년 4월 시진핑 주석의 국가 안보 및 사회 안정에 관한 연설이나 2015년 중국의 국가안보전략 가이드라인 등에서도 반(反)테러가 중요한 문제로 확인된 바 있다. 이후 중국의 중국 정부는 다양한 반테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요 대응 방식은 첫째, 각 지역별 경제성장을 증진하고, 둘째, 내부적으로 안전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셋째, 민족 및 종교 분쟁을 통제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테러가 진행되면서 중국 정부는 자연스럽게 이슬람 세력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신장테러세력과 연계에만 집중하다가 점차 지구적 차원의 이슬람 테러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 가능성이 발견된다. 미중 양국은 이슬람 국가에 대한 정보 교환, 파키스탄과의 대화, 아프가니스탄 정부와의 공동협력 등의 어젠다를 발견하여 보다 광범위한 양자적, 다자적 협력의 계기를 창출해가고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미중 간 대테러 협력이 협력의 가능성을 증진하기도 했지만 매우 복잡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 양국은 법적, 이념적, 안보이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력에 걸림돌이 있다고 미국은 인식한다. 인권 개념과 종교 자유 역시 양국의 개념이 다르며, 중국은 미국의 대테러 정책이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는 노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의심하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까지 선박, 컨테이너 안보 등을 둘러싼 협력이 진행되었으나 테러와 인터넷의 연계에 대한 정책, 정보 교환 등의 문제에서는 양국이 여전히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협력이 원칙 기반이라기보다는 상황에 기반한 것으로 인식한다. 미국은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협력, 양국의 반테러 국제환경 조성, 중국 내 법적·정책적·제도적 변화 유도, 미중 간 갈등 이슈 최소화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중국 입장

중국은 반테러리즘의 정책적 방향에 미국과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해외로부터 ISIS(이슬람국가) 등 이슬람 테러집단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다양한 테러 공격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한족과 소수 민족의 갈등으로 야기되는 테러는 심각한 사회치안 문제로까지 떠올랐다.

대표적인 예로 2014년 3월 1일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의 기차역에서는 10여 명의 괴한이 무차별로 칼을 휘두르며 승객들을 공격하여 29명이 사망하고 143명이 부상하는 테러 사건이 일어나 중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이로 인해 이틀 후부터 개최되는 중국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의 안전을 위해 베이징의 경비가 강화되었고, 북경 주변의 6개성에 머물렀던 경비 지역도 간쑤성(甘肅省), 산시성(陝西省), 칭하이성(青海省), 닝샤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 등으로 확대되기까지 하였다.

이에 더하여도 중국은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자치구(西藏自治區)의 분리주의자들이 국외 테러집단들과 연계하거나 중국 정부를 향한 테러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 테러집단을 포함해 국제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모습에서는 미국과의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미중 사이에 사이버 안보와 테러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 갈등이 표면화되어왔다. 미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이 사이버 해킹을 통해 정부와 기업들의 기밀에 접근해 왔음을 지적해 왔다. 결국 에릭 홀더(Eric H. Holder Jr.) 미 법무부 장관은 2014년 5월 19일 자국의 정보인프라에 대한 해킹혐의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소속 왕둥(王東) 등 5명의 장교를 산업스파이와 기업비밀절취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 대배심의 공소장에 따르면 상하이 61398부대 소속인 이들 중국군 장교들은 웨스팅하우스와 US스틸 등 미국 기업의 컴퓨터를 해킹한 혐의를 받았다.

중국은 이에 대해 정쩌광(鄭澤光)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또한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기소내용에 대해 “조작됐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중국 정부나 군, 그리고 관계자들은 온라인 기업비밀 절취에 절대 연관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미국의 기소가 양국의 협력관계와 상호 신뢰 관계를 손상시킬 것”임을 강조했다.⁷⁷⁾

⁷⁷⁾ “5 in China Army Face U.S. Charges of Cyberattacks,” *The New York Times*,

미중 간의 사이버 해킹 이슈는 비단 중국의 미국을 향한 해킹 혐의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 또한 2013년 6월의 ‘스노든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의 광범위하고도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비하는 사이버 안전망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우선 큰 틀에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국가의 주권이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실제로 국가 주권의 합법적인 적용과 국가 안보를 위해 제도적인 노력을 계속해왔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2014년 2월 27일 시진핑 주석을 조장으로 하는 ‘중공중앙네트워크안전과 정보화 영도소조(中央網絡安全和信息化領導小組)’를 성립하였다.⁷⁸⁾ 이어 중국 국무원의 공안부와 공업정보화부가 사이버상의 보안과 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어 중국은 사이버 안전 문제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조치를 취해나갔다. 대표적으로 2015년 7월 1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를 통해 「신국가안전법(中華人民共和國國家安全法)」을 통과시켰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신국가안전법」은 총칙과 부칙을 포함하여 국가안전의 임무 보호, 국가안전의 직책 보호, 국가안전 제도, 국가안전 보장, 국민과 조직의 의무와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⁷⁹⁾ 특히 인터넷 및 정보안보 분야에선 국가 네트워크 및 정보안전 보장 시스템 건설, 안보 능력 제고를 통한 사이버 공간의 주권 수호 규정이 언급되었다.

이어 2016년 11월 7일에는 「중국 네트워크안전법(中華人民共和國網絡安全法)」(일명 사이버보안법)이 전국인대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2017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국 정부의 법률적인 사

May 19, 2014; “美, 中장교 5명 해킹혐의 기소…中, 美대사 불려 항의(종합2보),” 『연합뉴스』, 2014.05.20,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5/20/0619000000AKR20140520132800009.HTML>> (검색일: 2017.09.09).

78) 中共中央網絡安全和信息化領導小組辦公室, <<http://www.cac.gov.cn>>.

79) “中華人民共和國國家安全法,” 『全國人大網』, <http://www.npc.gov.cn/npc/xinwen/2015-07/07/content_1941161.htm> (검색일: 2017.09.10).

이러한 통제의 기제를 더욱 강화하였다.⁸⁰⁾ 또한 2016년 12월 27일에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중국 내 주요 정보 기반시설의 안전과 인터넷 공간의 통제를 위한 정부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국가 인터넷 공간 안전전략」을 발표하였다.⁸¹⁾

중국 정부는 또한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사이버 안전 규범과 협력 분야에서의 리더십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2017년 3월 1일 중국 외교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이 공동으로 ‘네트워크 공간 국제협력 전략(網絡空間國際合作戰略)’을 발표하였다. 동 전략은 국제 평화발전과 협력상생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사이버 공간 운명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⁸²⁾

결론적으로 중국은 미국과 반테러리즘에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반면 사이버 안보와 해킹 문제에서는 갈등이 점차 불거지고 있다. 이제 미중 사이의 사이버 안보 문제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점차 미중 간의 21세기 리더십 경쟁을 놓고 경쟁하는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정보 인프라와 지적 재산권의 안전을 내세우며 중국의 해킹 행위를 비판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사이버 안전과 규범을 주도해 나가려고 한다. 반면 중국은 사이버상에서의 주권과 국내 인터넷망에서의 ‘정치적 안전’⁸³⁾과 제도적 통제를 추구하고 있다.

⁸⁰⁾ “中華人民共和國網絡安全法,” 『全國人大網』, <http://www.npc.gov.cn/npc/xinwen/2016-11/07/content_2001605.htm> (검색일: 2017.09.12.).

⁸¹⁾ Eva Dou, “China’s Cyber Strategy Stresses Securing Infrastructure,” *Wall Street Journal*, December 27, 2016; “中, 외국기업 검열강화 우려 커진다…첫 인터넷 안전 전략 마련,” 『연합뉴스』, 2016.12.2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8/0200000000AKR20161228068700074.HTML>> (검색일: 2017.09.12.).

⁸²⁾ “網絡空間國際合作戰略(全文),” 『新華網』, 2017.03.01,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7-03/01/c_1120552767.htm> (검색일: 2017.09.12.).

⁸³⁾ 김상배, “사이버 안보의 주변4망(網)과 한국,” 『국제정치논총』, 제57권 1호 (2017). p. 128.

라. 기후 변화와 환경

(1) 미국 입장

기후 변화 역시 미중 간의 중요한 협력 사안이다.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요국인 양국은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부터 의견을 달리해왔지만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맺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공동서명하면서 협력의 기회를 만들었다. 총 195개 국가가 서명한 이 협약으로 산업화 이전 대기 평균 기온 상승 폭을 2도 이하로 유지하는 목표에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유럽 방문 과정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발표하면서 미중 간 협력의 방향은 불확실성으로 빠져들었다.

중국은 미국을 대신하여 선도적 위상을 맡겠다고 자처하고 있고, 중국이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으로 유엔 기후변화정부 간 패널에서 분류된 바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중국은 신에너지 개발, 저탄소 사업에 매진하고 있었고, 국제기후변화협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맡아왔다. 중국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610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2016년에도 88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지출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까지만 해도 시진핑 주석과의 협력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편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정책이 급변하였다. 중국과 유럽은 미국의 탈퇴와 무관하게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로 하여 향후 중국의 리더십이 더욱 향상될 수 있다.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다른 나라보다 미국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재정적 이익을 얻고 있어 탈퇴를 결정했으나 미국 내 민주당과 많은 세력들이 반대하고 있어 향후의 미국 정책 변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 중국 입장

중국은 자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명명하면서도 일반적인 개발도상국의 모습과는 다르게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 왔다. 미국의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은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의 시기에 따라 대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은 비교적 일관되게 적극적인 참여라는 정책적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대국'으로서의 위상과 책임을 다하려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 이룩한 빠른 경제성장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타난 심각한 환경오염과 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에 대응하는 국내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사회 기후 변화 레짐(regime)에서 나타난 미국의 리더십 공백과 이를 파고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요인들이 자리 잡고 있다.

먼저 기후 변화에 관한 저탄소산업(低碳産業)의 발전과 환경오염 문제는 중국에 국내정치적으로도 많은 요구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스모그를 포함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왔다.

예를 들어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한 지 약 1년 후인 2014년 3월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양회' 기간 중 열린 전국인대 2차 회의를 통한 정부업무 보고서에서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등에 대한 투자와 원자력 발전소 건립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리 총리는 환경 기준 미달의 차량 600만 대와 석탄 연료의 보일러도 5만여 개를 폐쇄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이 외에도 화력발전설비에 탈황, 탈진, 분진 제거 시설을 장착, 그리고 약 500만 모(畝)의 경작지를 삼림이나 초원으로 복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서 우샤오칭(吳曉青) 중국 환경보호부 부(副)부장은 리 총리의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보호를 위해 2015년까지 2조 5,000억 위안(약 434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라 발표했다.⁸⁴⁾

대외적으로도 중국은 2017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

⁸⁴⁾ 김한권, "2014 양회 이후의 중국 대(對)내·외 정책 분석과 함의,"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4-11 (2014.03.28.), pp. 4~5.

협약」 탈퇴선언 이후 기후 변화 이슈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간 국제사회에서 나타난 기후 변화에 대한 주요 논쟁 중 하나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의무이행 조항이다. 최근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7년 11월 제22차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 총회(COP22)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되었다. 동 총회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협상을 2018년 폴란드에서 개최될 24차 당사국 총회(COP24)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2017년 5월 8일~18일 사이 독일의 본에서 실무협상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후속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약」상의 의무이행에 관한 조항에서 뚜렷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개도국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의무이행에 있어 선진국들과는 분명한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러한 차별화에 대한 조항과 규정들이 분명하게 구체화되고 명문화되는 것을 후속협상에서의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향후의 후속협상에서 자신들과 개도국 사이의 차별화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왔다.⁸⁵⁾

현재 개도국들의 입장은 ‘유사입장 개도국 그룹(Like-Minded Developing Countries: LMDC)’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 협상연합이 대변하고 있다. 특히 LMDC는 중국을 포함하여 인도, 파키스탄, 일부 중남미 국가 등이 포함된 협상그룹으로 강경하게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LMDC는 「파리기후변화협약」상의 의무이행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대로 선진국과 차별화된 조항과 규정들을 구체화하는 것을 후속협상의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방안을 위한 세부 의

⁸⁵⁾ 이에 대한 연구로는 최원기,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후속협상 평가와 전망: 2017년 5월 협상회의를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2 (2017.06.12.).

제 협상에서 이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논쟁이 격화된다면 중국은 LMDC의 핵심국가로서 최소한 기후 변화에 관한 한 리더국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기후 변화에 부정적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결국 「파리기후변화협약」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또한 그는 향후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며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재 기후 변화 국제레짐 내에서 벌어지는 「파리기후변화협약」 후속협상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또한 미국의 탈퇴와 무관심은 향후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 논의와 후속협상의 향배와 실질적인 효과에서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⁸⁶⁾

이러한 전망은 중국에 기후 변화 국제레짐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리더십이 커질 공간이 넓어짐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발표 이후 중국은 EU 및 대다수의 협정 참여국과 함께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확대될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의 유지 여부는 결국 중국이 얼마만큼 미국의 빈자리를 메우며 「파리기후변화협약」 후속협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느냐에 달려있다.

마. 인권

(1) 미국 입장

미국은 세계전략과 지역전략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요한

⁸⁶⁾ Ben Adler, "Trump's withdrawal from the Paris agreement accomplishes nothing," *The Washington Post*, June 01, 2017; Matthew J. Kotchen, "Trump will stop paying into the Green Climate Fund. He has no idea what it is," *The Washington Post*, June 02, 2017.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왔다. 과거 백악관이 발행한 『국가안보전략서』에는 안보와 민주주의가 빠짐없이 전략 항목으로 등장해왔고, 개별 국가들과의 관계를 논할 경우에도 인권은 중요한 전략 목표였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가 정당한 주권국가로서 행위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여왔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사안으로 인식해왔다. 미국은 특히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고, 냉전 종식 이후 중국, 북한, 중동 독재국가, 라틴아메리카의 권위주의 국가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양자관계에서 인권을 정책사안으로 간주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 문제도 다양한 기회에 거론하였는데, 중국의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탄압, 구금된 인사들에 대한 고문, 인정되지 못한 종교 활동 처형, 정보의 표현과 유통에 대한 국가 통제, 강제적인 가족계획, 탈북자에 대한 통제 등이 중요한 사안들이다. 티베트, 신장지역의 이슬람 인구, 파룬공 신자들에 대한 중국의 탄압과 간섭 역시 미국의 주목을 끌어들였다.

미국은 중국이 인권에 대해 모순적 정책을 추구해왔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중국공산당이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을 추구하는 데 열의를 보이면서도 보편가치, 개인의 권리, 입헌민주주의 등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본다. 2014년 이래 중국공산당은 사법부에 대한 정부 간섭, 특히 지방 차원에서의 정부 간섭을 개선하고자 정책을 발표했지만 특별히 변화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시진핑 주석의 등장 이후 반체제운동과 사회 분야의 운동에 더 강력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미국은 본다. 정부 비판자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 인권활동가, 블로거, 언론가 및 학자들, 시민사회 지도자와 소수민족 지도자에 대한 탄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본다. 그 결과 2013년 정부 비판의 명목으로 체포된 이는 1,384건에 달하고 이는 2008년 티베트 사건 이후 최고에 이른 것으로 본다.

중국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교차함에 따라 중국 시민

들은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고 다층적인 법률가, 언론가, 활동가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공공의 비판과 시위가 확산되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공유와 정부의 역할 제한의 모습도 눈에 띄게 확산되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중국의 인권 향상에 힘쓴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정책 분야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어 왔다. 미국의 의회가 중국 인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 마련에 가장 앞장서 있는 집단이다. 의회는 중국 내 인권 신장을 위해 양자적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국제사회의 동참을 끌어내고자 해왔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해왔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공개 비판, 조용한 외교, 의회의 청문회 개최, 중국 내 법치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을 위한 다양한 지원, 중국의 체제 비판자와 민주주의 지향 그룹들에 대한 지원, 중국에 대한 제재, 국제압박 조율정책, 양자 대화, 인터넷 자유 증진 노력, 공공외교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⁸⁷⁾

(2) 중국 입장

중국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논의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왔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맞대응해왔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해 내정 간섭이며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기류이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매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한다. 최근의 예를 들어보면 2017년 3월 3일 미 국무부는 세계 199개국의 인권실태를 평가하고 수록한 『2016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공개하였다. 내용 중에는 당연히 중국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중국에 관한 내용은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시민사회 단체를 압박하고 있으며, 또한 홍콩의 자치권과 사법체계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비판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중국 정부도 이에 대해 비판의 입장을 표명하고 반박하고 있다. 경상

⁸⁷⁾ Thomas Lum, *Human Rights in China and U.S. Policy: Issues for the 114th Congres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eptember 17, 2015).

(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월 6일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미국이 발표한 인권보고서는 편견에 가득 차 있다고 비판하면서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중국은 신정부 수립 이래 인권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였다.⁸⁸⁾

이에 더하여 미 국무부가 『2016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공개한 지 6일 만인 3월 9일 중국 국무원 판공실이 『2016년 미국의 인권 기록』을 발표했다. 미국의 인권보고서에 대한 중국의 반박 대응이었다. 중국이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에는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693명이 수감돼 있어 이 분야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내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총 5만 8,125건의 총기 사고가 발생해 1만 5,039명이 죽고 3만 589명이 다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치러진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금전정치가 거짓과 웃음거리로 가득했으며, 선거 결과에 대한 보이콧과 시위가 나타났음을 비판했다.⁸⁹⁾

하지만 인권 관련 미중의 논쟁과 별도로 국제사회가 중국의 인권을 바라보는 대체적인 시각이 곱지 않은 점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인권 문제의 분석과 평가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기관인 Freedom House 보고서를 들 수 있겠다. Freedom House가 바라보는 중국은 비판적이다. Freedom House는 전 세계 195개국을 조사하고 평가하고 발간한 『Freedom in the World 2016』에서는 ‘Free’ 그룹으로 미국을 포함한 86개국을, ‘Partly Free’로는 59개국을, ‘Not Free’ 그룹에는 중국을 포함하여 50개국을 분류하였다. 또한 최근 발표한 『Freedom of the Press 2017』에서는 언론 자유의 평가를(0: Most Free, 100: Least Free) 미국은 23으로 평가한 반면 중국은 87로 평가하였다.⁹⁰⁾

88)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17年3月6日外交部發言人耿爽主持例行記者會,” 2017.03.06, <<http://www.fmprc.gov.cn/ce/cees/chn/fyrth/t1443469.htm>> (검색일: 2017.09.15.).

89) “중국 “미국이야말로 인권 후퇴” 맞짱 뜬 보고서 내,” 『중앙일보』, 2017.03.10.

90) Freedom House Website,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press>>

중국은 이에 대해 이러한 인권 관련 평가 기관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다는 시각을 표출하며 객관적인 평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저명한 인권과 민주화 관련 시민운동가인 류샤오보(劉曉波)의 구금과 더불어 간암으로 인해 감옥에서 나와 치료를 받다 결국 2017년 7월 13일 사망하자 또다시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중국은 사법기관의 판결에 의해 형벌을 받는 죄인을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노벨상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이는 서방국가의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당시 수상을 결정한 노르웨이를 향해 노르웨이산 연어의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시각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미중 간의 인권 문제로 인한 논쟁은 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국내적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 티베트, 홍콩에서의 민주화와 인권 요구와 국제사회의 중국 내 인권과 민주화 신장 요구를 주권침해로 반박할 것이다. 이는 주권의 문제와 함께 중국공산당의 정통성과 리더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미국이 인권과 민주화 이슈를 중국에 대한 전략적 카드로 사용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민감하게 대응할 것이다.

2. 지역 차원

가. 대만 문제

(1) 미국 입장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을 소위 핵심이

/freedom-press-2017>.

익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는데, 그중 최우선의 과제는 역시 대만 문제이다. 미국이 중국을 유일한 정부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해 지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문제는 미중 간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양안관계의 변화는 8년간 대만총통이었던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물러나고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취임하면서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차이 총통은 대만의 형식적 독립, 혹은 통일 모두에 찬성하지 않는 실용적인 현상유지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프레임워크에 대해 찬성하지는 않는다. 베이징은 차이 총통을 압박하는 다양한 수단을 고려하고 있어 양안관계에 많은 도전이 예상된다. 차이 총통은 대만의 대외경제관계를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중국의 군사현대화에 대응하여 억제력을 증강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대만의 대중경제의존도가 증가하고 양안의 군사력 균형이 서서히 중국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국면 속에서 미국과 대만 관계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양자 간의 경제, 안보 관계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향후 미국은 마 총통 임기 중 증가된 대만의 국제활동을 더욱 지지하면서 일본, 유럽, 이스라엘 등 다른 국가들과의 다자 협력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과거 제2포병군단을 인민해방군 로켓군으로 재편성하여 대략 1,200기에 달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며 200에서 500기에 달하는 지대지 크루즈미사일도 배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만의 공식 독립 선언을 막고 군사충돌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 전력이 급격하게 증강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미사일 도입으로 군사력이 증가했다. 중국의 해공군 역시 대만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대략 2,100기의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다. 330기의 대만 전투기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2015년 35기의 수호이 전투기를 러시아로부터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양안의 경제력 격차는 국방력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2005년

부터 이후 10년간 두 자릿수의 국방비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대만은 2016년 국방비로 약 98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전년도 대비 1.3% 증가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과 대만 간의 국방력 격차는 약 1,3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중국은 2016년 2010년 이래 최초로 한 자리 숫자 국방비 증가율을 공표했지만 전년도 대비 7.6% 증가를 보이고 있어 1,467억 달러에 이른다.

차이 총통은 2015년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만은 미국의 충실한 파트너로 남을 것이며 미국을 대만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칭찬 바 있다. 또한 미국과의 전면적 협력을 약속하고 있어, 미국 역시 차이 총통 당선 이후 대만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차이 총통과의 파트너십을 환영하고 있다. 2016년 2월 미국의 당시 국무부 아태담당 부차관보였던 수잔 손튼(Susan Thornton)은 대만이 번영되고 자유롭고 질서 있는 사회를 건설하였고, 대선을 지지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미국은 대만과의 경제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고, 2015년 대만은 미국의 9번째 중요한 교역대상국으로, 인도, 이탈리아, 브라질 등의 국가를 앞지르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관련 교역이 증가하고 있고, 무역 기반 파트너에서 상호 기술협력 파트너로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과 대만은 군사와 안보파트너로 오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무기 판매, 훈련, 군사고문, 교환, 장비 유지 등에 관한 다면적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2015년 12월 16일 미국의 국방부는 대만에 대한 18억 3,000달러의 무기 판매를 승인받은 바 있다. 무기판매는 미국의 의지에 달린 것이기도 하지만 대만의 구입예산에도 제한받는 바 있어,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비교적 단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군사 교류 역시 최근 매우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어, 최근 수년간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만은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차이 총통은 TPP 협상의 두 번째 라운드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선언한 바도 있다. 결국 미국은 대만을 지역

평화와 안보에 필수적인 협력국으로 보고 있고 일본, 필리핀 등의 국가와도 규범 기반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미국의 지역 안보 비전과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다.

(2) 중국 입장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과 관련된 문제는 절대 미국에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의 사안이다. 특히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통성과 리더십을 한 번에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는 ‘1995-1996 대만해협 위기(Taiwan Strait Crisis)’ 당시 현저한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최고지도부가 미국과의 무력 충돌을 각오하며 대만의 독립 기조에 강경하게 대응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21세기 들어 ‘중국의 부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신형대국관계’를 통해 새로운 미중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더욱 강조하고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사실 중국 정부는 ‘핵심이익’이라는 용어를 이전부터 사용해 왔지만 ‘핵심이익’의 정의를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은 2010년대에 들어서이다. 2010년 12월 다이빙궈 당시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통해 ①공산당 리더십과 사회주의 체제의 중국 정치 안정, ②주권 안보, 영토의 완전성, 그리고 국가 통일, ③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와 사회 발전이라는 자국의 ‘핵심이익’의 정의를 미국을 포함한 국제관계에 제시하였다.⁹¹⁾ 이러한 다이빙궈의 정의는 2011년 9월 발간한 중국 국방백서 『중국의 평화발전(中國的和平發展)』의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정의되었다.⁹²⁾

⁹¹⁾ Wang Jisi, “China’s Search for a Grand Strategy: A Rising Great Power Finds Its Way,” *Foreign Affairs*, vol. 90, no. 2 (March/April 2011), p. 71.

⁹²⁾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和平發展』(2011.09.) “...中國堅決維護國家核心利益, 中國的核心利益包括: 國家主權, 國家安全, 領土完整, 國家統一, 中國憲法確立的國家政治制度和社會大局穩定, 經濟社會可持續發展的基本保障, ...,”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1-09/06/c_121982103.htm> (검색일: 2017.09.20.).

하지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만을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언급한 것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해 1월 당시 중국의 외교부장이었던 탕자쉬엔(唐家璇)은 20일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유엔 안보리 반테러 문제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전날인 19일 저녁 콜린 파월(Colin Powell) 국무장관과 회동하였다. 이 자리에서 탕자쉬엔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에 관해 대화하며 중국 관료로서는 처음으로 ‘핵심이익’을 외교용어로 공개적으로 사용한다.⁹³⁾ 또한 그는 대만 이슈는 중국의 ‘핵심이익’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안정적인 미중관계 발전을 보장하는 열쇠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대만에 대한 입장은 미중 ‘신형대국관계’와 연결되며 더욱 강조된다. 2008년 12월 다이빙궈 당시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의 강연을 통해 미중관계가 영합(zero-sum)이 아닌 상생 관계이며, 라이벌이 아니라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미중 사이의 “조화와 공동 발전을 특색으로 하는 21세기의 신형관계(a new type of relationship featuring harmony and common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를 제안하였다.⁹⁴⁾ 이후 중국은 ‘신형대국관계’의 개념을 발전시키다 2012년 5월 후진타오 주석이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미중 전략과 경제대화(S&ED)에서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통한 미중관계의 발전을 위해 서로의 ‘핵심이익’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대만 이슈가 중국의 핵심이익임을 지속적으로 밝힌다. 예를 들어 2011년 1월 미국을 방문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중 경제 공동체

⁹³⁾ “唐家璇會見美國務卿,” 『人民日報』, 2003.01.21; Michael D. Swaine, “China’s Assertive Behavior Part One: On “Core Interest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4 (2010), p. 3에서 재인용.

⁹⁴⁾ Dai Bingguo, “Address at the Dinner Marking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China-US Diplomatic Relations Hosted by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December 11, 2008.

모임(“U.S.-China Business community Luncheon on U.S.-China Relations” at Marriott Wardman Park Hotel, Washington, D.C.)의 연설을 통해 대만과 티베트는 중국의 ‘핵심이익’임을 표명했다.

다음해 2월 13~17일 당시 중국의 부주석이었던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였다. 당시 그는 미국의 주요 인사들에게 ①서로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며 대화를 통한 소통강화(坦誠相待, 加強對話溝通), ②시대와 같이 전진하며 실질적 협력을 확대(與時俱進, 擴大務實合作), ③상호 존중하며 전략적 신뢰의 강화(相互尊重, 增進戰略互信), ④미래를 지향하며 밀접한 민간교류 제고(面向未來, 密切人民交往), ⑤협력을 강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加強協作, 攜手應對挑戰) 등 미중관계 발전을 위한 5가지의 건의를 하였다. 시는 특히 3번째 항목인 상호존중과 신뢰를 위해 미중은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하여야 하며 후진타오와 마찬가지로 대만과 티베트는 중국의 ‘핵심이익’임을 다시 한번 밝혔다. 당시 시는 또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하에 대만과 티베트의 독립 문제를 분명히 반대하여 주기를 바라며 이것은 중국의 ‘핵심이익’임을 또다시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기 대만에는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이 2008년 5월부터 취임하며 친(親)대륙정책을 펼친다. 특히 2010년 6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이 체결되며 양안 간 경제협력이 강화된다. 또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에 큰 논쟁을 벌이지 않아 중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양안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2014년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대만의 대학생들이 입법원과 행정원 건물들을 점거하는 해바라기 시위가 일어난다. 이들은 광범위한 서비스업 분야를 중국에 개방하려는 마잉주 정부의 무역 정책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저지한 시위였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홍콩에서 ‘우산시위’가 벌어졌다. 2014년 8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가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을 발표하며

친(親)중국계로 구성된 후보 인사 2~3명으로 행정장관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홍콩의 대학생들은 9월 22일 홍콩 중문대에서 집회를 열고 24개 대학교 학생들이 일주일간 동맹휴업을 선언하며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에 더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5주년 국경절이었던 10월 1일에는 타이베이 증정기념당 앞 자유광장에서 마카오 재대만 민주동맹(港澳在台民主同盟) 주최로 대만 전역의 34개 민간단체 인사들과 학생들 3,000여 명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게다가 10월 10일에는 마잉주 총통이 대만 건국 기념일 연설에서 홍콩 우산 시위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하였다.

다음날인 1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는 1989년 6월의 천안문 사태를 규정했던 것과 같이 홍콩의 시위를 ‘동란(動亂)’으로 규정하며 우산시위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하지만 대만의 해바라기 시위에 이어 홍콩의 우산시위까지 연이어 터지고 대만에서 우산시위에 대해 지지 집회와 선언이 이어지자 중국이 통일을 위해 내세운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결국 해바라기 시위를 정점으로 2016년 대만 총통선거는 민진당의 우세가 지속되었다. 차이잉원 민진당 후보는 결국 2016년 1월 16일 실시된 총통 선거에서 승리하고, 같은 해 5월 20일 총통에 취임하게 된다. 국민당에 비해 독립 성향이 강한 민진당 출신의 차이 총통의 취임 이후 불거진 양안관계의 퇴조 또한 중국에 커다란 골칫거리이다. 차이 총통은 2016년 6월 존 매케인(John McCain) 미 상원 군사위원장의 대만 방문 시 무역과 투자, 안보 분야 등에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게다가 대만의 방어를 위한 미국산 무기판매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만이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하여 2016년 7월 21일 차이 총통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92공식(九二共識, 1992년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은 인정하되 해석은 각자가 하기로 한 합의)’

을 부정하는 의미의 해석과 함께 “대만은 국가(a country)이다”라고 발언하였다.⁹⁵⁾

차이 총통에 대한 중국의 불만과 압력의 결과로 2016년 들어 중국에서 대만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약 1/3이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2016년 9월 12일 타이베이에서 여행 관련 업체 노동조합원 2만여 명이 대규모 대중국(대륙)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2017년 초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중국이 미중관계에서 느끼는 대만 이슈는 그 우려를 더하여 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2016년 12월 2일 트럼프 당선자와 차이 총통사이의 통화가 성사되며 중국을 긴장시켰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미중이 공식적으로 인정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이후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전화통화를 통해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할 것이란 점을 확인하였지만, 여전히 미국이 언제든지 대만 이슈를 중국을 견제할 전략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심의 눈길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제재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2017년 6월 말에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온적인 대북 제재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실망감을 표현하였다.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데, 대만과 관련하여 6월 28일에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미국 군함이 가오슝항을 비롯한 대만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허용하고 대만 잠수함과 기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 국방부가 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을 가결했다.⁹⁶⁾ 이 법안이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트럼

⁹⁵⁾ “Taiwanese President Tsai Ing-wen: Beijing must respect our democratic will,” *The Washington Post*, July 21, 2016.

⁹⁶⁾ “美군함, 40년만에 대만 입항 예고…홍콩반환 20돌 中 잔칫상 찬물,” 『매일경제』,

프 대통령까지 서명한다면 1979년 대만과 단교한 이후 처음으로 미 해군 함정이 대만에 정박할 수 있게 된다. 이어 다음날인 29일에는 미국무부가 조기경보레이더 관련 부품과 대(對)레이더 미사일, 어뢰, SM-2 미사일 부품 등 7개 품목이 포함된 14억 2,000만 달러(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⁹⁷⁾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의 결정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대만 문제 처리 방식과 관련해 미국이 미중 사이의 '3대 공동성명(1972년 미중 데탕트를 열었던 상하이 코뮌iqué, 1979년 1월 1일 미중 수교를 앞두고 1978년 12월에 발표한 제2차 공동성명, 1982년의 제3차 공동성명)'에 따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줄기를 강조하고 있다.

나. 남중국해

(1) 미국 입장

현재 동아시아 국면에서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남중국해 문제이다. 중국은 2009, 2010년 미중 갈등 국면을 넘으면서 남중국해 전체가 중국의 해양영토라는 구단선 주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11월 동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데 이어, 2014년 5월에는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지역인 남중국해의 시사군도에 원유시추 시설을 설치하는 정책을 단행했다. 또한 필리핀과 분쟁 지역인 난사군도의 산호초섬인 피어리크로스에도 활주로와 부두 등 새로운 인공 시설을 설치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⁹⁸⁾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가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적으로 다룰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아세안

2017.06.30.

⁹⁷⁾ “美, 대만에 무기판매 첫 승인…항모 ‘가오슝 입항’ 현실화 조짐(종합),” 『연합뉴스』, 2017.06.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30/0200000000AKR20170630014151071.HTML>> (검색일: 2017.08.18.).

⁹⁸⁾ 김옥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정치·경제적 함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18권 1호 (2015), pp. 289~307,

의 다자적 대응을 막고 아세안 중심성을 약화시키려 시도해왔다.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항행의 자유 작전을 더 자주 수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중국 해군의 활발한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의 해군력 증강을 추진한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자 2015년 8월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전략(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해양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미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분쟁당사국의 무력사용 및 무력시위 금지를 강조하며, 항행의 자유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자유로운 군사활동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왔다. 미국은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 연례적으로 합동해상훈련을 추진해왔는데 1995년에 최초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등 6개국과 시작하여 2012년 동티모르 참가, 2016년에는 총 9개국이 함께 참가하고 있다. 또한 2002년 만들어진, 「남중국해 당사국의 행동에 대한 선언」에 따라 협력적인 신뢰구축조치의 해양 전략을 추진해나간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⁹⁹⁾ 보다 구체적인 추진 방법으로 미국은 항행의 자유작전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0월 27일 미국의 해군 7함대 소속인 라센함이 난사군도에 출동하여 중국이 매립을 진행하던 7개의 암초 중 수비환초의 12해리 이내로 진입하여 항행하였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한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양국의 의견차를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미국은 공해에서 무해통항의 권리를 계속 주장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군사활동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려 하고 있다.¹⁰⁰⁾

99) 정구연, “긴장국면의 남중국해: 미국의 남중국해 분쟁 접근법과 전망,” 『성균차이나브리프』, 제4권 1호 (2016), pp. 106~110.

100) 김태성·김현승,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전략 분석 및 영향,” 『동북아연구』, 제31권 1호 (2016), pp. 61~91.

미국은 동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다. 즉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일본의 영토이기 때문에 미일 간의 「상호방위 조약」의 대상이 되며 군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동맹을 발동하여 군사적으로 일본을 지원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안보공약을 확인해왔다.¹⁰¹⁾

미국은 또한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견제하려 한다. 2015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를 방문하여 아시아·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의 합동전략비전을 발표하여 경제와 안보 영역의 협력방안을 구체화했다. 일대일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안보 통합을 이루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연결하여 에너지 수송과 자유무역,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해양안보를 수호하고 특히 남중국해를 포함한 지역의 자유항행의 원칙을 수호하자고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6월 인도의 모디(Narendra Modi) 총리를 워싱턴에 초청하여 미국은 방산기술 공유, 항공모함 기술 협력, 해양안보 대화 개시, 사이버안보 및 우주 협력, 경제, 무역 연대 확대 등 중요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인도를 주요 안보파트너로 삼아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동일한 수준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을 연결한 지리적 개념을 제안하면서 인도가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포함되는 핵심 국가이며 점차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역 구도를 추구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¹⁰²⁾

(2) 중국 입장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주변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논쟁과 갈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1970년대 들어서이다. 남중국해 인근의 국

¹⁰¹⁾ 위의 글, p. 65.

¹⁰²⁾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6 Report to Congress of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가들은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독립 정부를 정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던 중 1960년대 들어 남중국해 지역에 많은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1968년 남중국해에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 보고서』가 제출되고 내용이 알려진 것을 들 수 있다. 이후 남중국해 인근 국가들은 영토, 영해, 또는 관할권 문제에 관심을 표시했으며 점차 본격적인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1970년대 초부터 주변국들은 자원개발과 관할권을 놓고 본격적인 갈등이 수면위로 부상하게 된다.

관련국들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지역 내에서 팽팽한 긴장이 이어지다 결국 지역 내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1974년 베트남전의 혼란기를 틈타 중국이 시사군도(Paracel Islands)의 도서들을 점령한 사건을 들 수 있다. 다음해 베트남 전쟁이 끝나갈 무렵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이 소유했던 난사군도(Spratly Islands) 환호초를 점령하였으며, 전쟁이 끝나고 통일을 이룬 직후인 5월에는 난사군도 일부 도서를 점령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며 중국과 베트남 간의 긴장이 고조된다.¹⁰³⁾

1980년대도 중국과 베트남 간의 긴장은 이어지다 결국 1988년 난사군도의 적과초(Johnson Reef, 赤瓜礁)에서 양국 간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중국 해병대는 난사군도에서 베트남이 차지하고 있던 6개의 암초를 점령하였다.¹⁰⁴⁾ 1990년대 들어와서는 자원 개발과 관련된 갈등으로 인

¹⁰³⁾ 김동욱, “남사군도를 둘러싼 관련국의 대응과 그 해결방안,” 『영토해양연구』, 제3권 (2012), p. 94.

¹⁰⁴⁾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교전이 발생하였으며, 베트남 해군 함정 3척이 파괴되고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중국은 영토 표식과 해양관측소 설치, 그리고 점령한 6개의 암초 중 하나인 화양초(華陽礁)와 적과초에 수년에 걸쳐 군사시설을 건설하였다.

해 양국 간 논쟁이 계속된다.¹⁰⁵⁾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남중국해 당사국들 간 평화적인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의 노력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이루어 내지는 못하던 차에 2000년 12월 25일 중국과 베트남 사이 「통킹만 어업협약 협정(Agreement on Fishing Cooperaton in the Gulf of Tonkin)」과 「통킹만 영해·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Demarcation of Waters, Exclusive Economic ones and Continental Shelves in the Gulf of Tonkin)」을 체결하게 된다. 이어 2002년 11월 4일에는 ASEAN 국가들과 중국 사이에 10개항으로 이루어진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the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DOC)」에 합의하며 남중국해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2009년 들어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각각 또는 공동으로 대륙붕 외측한계자료를 제출하였다. 중국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9단선 내에서의 주권 및 주권적 권리와 해양 관할권을 주장하자 이들 국가 간의 갈등은 다시 깊어지기 시작하였다.

¹⁰⁵⁾ 예를 들어 1992년 중국의 국가연안석유회사와 미국의 크레스톤 에너지사(社)가 남사군도 인근 해역에 대한 석유채굴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베트남 정부는 이는 자국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심각한 주권침해라고 항의하였다. 1994년 5월에는 베트남이 시사군도 인근 해역에 탐사 구조물을 설치하자 중국은 이러한 행위는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베트남의 탐사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항의하였다. 1995년 1월에는 필리핀이 남사군도 동쪽 해역의 Mischief Reef에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발견하였다. 필리핀은 이를 중국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였다고 항의하였다. Yann-Huei-Song and Zou Keyuan, "Maritime Legislation of Mainland China and Taiwan: Developments, Comparison, Implications, and Potential Challenges for the United States,"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1, issue 4 (2000), p. 321; Barry Wain, "Beijing and Hanoi Play with Fire in S. China Sea,"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July 20, 1994, p. 5; Nayan Chanda, Rigoberto Tiglao and John McBeth, "Territorial Imperativ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February 23, 1995, pp. 14~16; 정갑용,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9단선'의 합법성 검토," 『독도연구』, 제16권 (2014), p. 51에서 재인용.

2010년대 들어와 중국과 필리핀,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갈등이 점차 확대되고,¹⁰⁶⁾ 남중국해의 분쟁 당사국들은 물론 미국, 일본, 호주 등 역외 관련 국가들이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고 직간접적으로 분쟁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이러한 남중국해의 분쟁과 충돌은 국제법의 사법적인 개입이 나타나는 상황까지 치달는다. 2012년 4월 11일 남중국해 스카보러섬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8척의 선원들을 필리핀 해군이 ‘불법 조업’으로 간주하여 체포하려 하자, 중국 측 초계정이 이를 가로막으며 양국 군함이 3일간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촉발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필리핀은 스카보러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국제법원을 통해 사법적으로 해결하자고 중국에 제안했다. 하지만 중국은 주권 국가의 영토를 국제법원에 회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필리핀의 제안을 거부한다. 결국 필리핀은 2013년 1월 22일 “서필리핀해(남중국해)에서의 해양 관할권에 대한 중국과의 분쟁”을 「UNCLOS」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 절차에 일방적으로 회부한다.¹⁰⁷⁾

¹⁰⁶⁾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대표적인 예로는 2011년 3월 난사군도 인근에 위치한 팔라완(Palawan) 섬 주변의 리드 뱅크(Reed Bank) 부근에서 영국의 포럼 에너지(Forum Energy)사와 공동으로 해저 가스 탐사 및 개발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던 필리핀의 과학조사선을 향해 중국의 경비정이 중국의 관할해역이라는 이유로 탐사활동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필리핀은 이에 대응하여 전투기와 경비정을 급파하는 등 양국 간에 무력 시위가 벌어졌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 간에도 자원개발로 인한 충돌이 나타났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2011년 5월 26일 국영 베트남 석유가스공사(Petro-Vietnam) 소속의 석유 탐사선 빈민(Binh Minh) 2호가 베트남 중남부 나짱 동북쪽 120km 지점의 남중국해에서 작업 중 설치한 해저 탐사케이블이 중국 순시선 3척에 의해 절단 당했다고 필리핀 외교부가 발표한 사건이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 측의 이런 행위가 자국의 주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베트남이 분쟁지역의 일부 도서에 부두, 방파제, 활주로, 정수 시설 등의 건설을 강행했다. 당시 이러한 베트남 측의 강경 태도가 나타나자 중국은 그 배후에 미국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김동욱, “남사군도를 둘러싼 관련국의 대응과 그 해결방안,” pp. 94~95; “베트남 ‘우리 대륙붕서 中이 주권 침해’,” 『연합뉴스』, 2011.05.29.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05/29/0701000000AKR20110529043400084.HTML>> (검색일: 2017.09.05.).

¹⁰⁷⁾ Arbitral Tribunal, “Arbitration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First*

이후에도 중국과 필리핀·베트남과의 충돌은 계속된다. 2014년 5월에는 중국이 파라셀 제도에 석유굴착장치를 설치하자 이에 대해 베트남이 항의하며 양국이 대치하는 사건이 생겨났다. 하지만 남중국해 논쟁이 불거지며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이 된 것은 중국이 분쟁 지역인 스프래틀리 제도의 7개 도서에 인공섬을 건설하기 위한 매립을 하면서부터이다.¹⁰⁸⁾ 특히, 피어리 크로스 산호초(Fiery Cross Reef)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활주로와 부두를 건설하며 분쟁 관련국들은 물론 이로 인해 미중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충돌과 논쟁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미국의 비판에 대해 역사적 유래와 주권적 행동임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박하였다. 예를 들어 2014년 6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에서 척 헤이글(Chuck T. Hagel) 미 국방장관과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의 행위를 비판하자 중국 인민해방군 부참모장 왕관중(王冠中)은 중국이 2000년 전인 한(漢)대부터 남중국해의 인근 해역을 발견하고 점진적으로 관리체계를 완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비판을 일축하였다. 왕 부참모장은 또한 필리핀과 미국이 영유권 분쟁에서 근거로 삼는 「UNCLOS」에 관해 이 협약은 1994년에 발효되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미중의 이러한 설전은 2015년 5월 말에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애슈턴 카터(Ashton Carter) 미 국방장관이 인공섬 건설에 대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중단을 요구하자 중국의 쑨젠궈(孫建國) 인민해방군 부참모장은 중국의 인공섬 조성은 “정당한 주권 행사”라며 받아쳤다. 또한 쑨 부참모장은 중국이 해상 수색 및 구조, 재난 예방, 해양 과학 연구, 기상 관측, 환경 보호, 항해 안전, 어업 보호 등과

Press Release, August 27, 2013, <<http://www.pca-cpa.org>>.

¹⁰⁸⁾ 중국이 난사군도에서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한 산호초들은 수비(Subi Reef), 게이븐(Gaven Reef), 피어리 크로스(Fiery Cross Reef), 콰테론(Cuarteron Reef), 존슨 사우스(Johnson South Reef), 휴스(Hughes Reef), 미스치프(Mischief Reef) 등이다.

관련한 국제적인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FONOP)’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15년 5월 11일 미 해군 포트워서함(LCS)이 스프래틀리 군도 난웨이(南威)섬 근처를 항해하자 중국 해군의 054A형 호위함인 연청(鹽城)함이 붙어 한때 대치하였다. 그러자 12일에는 미국이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다음날인 13일 미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군사적 목적이 분명해지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발언하여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물러서지 않으며 2015년 6월 3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부 인공섬의 매립 작업이 마무리됐으며, 앞으로 관련 기능을 충족하는 시설 건설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인공섬 관련 건설을 중단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남중국해 문제로 인해 양국 간의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다. 남중국해에서 미중의 갈등이 높아지던 2015년 6월 판창룡(范長龍)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중국군 고위 방문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하여 레이먼드 오디어노(Raymond T. Odierno) 미 육군참모총장과 미 국방대에서 미중 ‘대화 메커니즘’을 체결하였다. 이외에도 미중은 ‘중요군사행동 상호통보 메커니즘’과 ‘해상·공중 안전행동준칙’의 상호신뢰 메커니즘과 더불어 ‘공대공(air-to-air) 부속문건’을 논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문제는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실행되며 갈등이 다시 불거져 나왔다. 2015년 9월 17일 미 태평양사령관 해리 하리스(Harry Harris)는 중국이 건설 중인 남중국해 상의 인공도에서 부근에 군사 순찰함을 파견하여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견제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인 홍레이(洪磊)는 9월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발언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표하였다. 그는 중국은 난사군도 및 그 부근 해역에 대해 충분한 역사적, 법적적 근거가 있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중국도 미국 측과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수호를 주장하지만, 어떤 국가라도 항행자유 수호를 이유로 중국의 영토 주권 및 안전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미국은 2015년 10월 27일 남중국해의 수비 환초(Subi Reef) 12해리 이내에 자국의 구축함 라센함을 파견해 초계 작전을 실행한다. 이어 11월 8일과 9일에는 2대의 B-52가 각각 미국의 괌에서 남중국해에 진입하였으며, 중국은 자국의 항공 교통 관제사를 통해 구두 경고를 하였다. 이후에도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 실행하였으며 중국 또한 물러서지 않고 이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¹⁰⁹⁾

중국에 미국의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에 대한 논쟁과 ‘항행의 자유 작전’에 이어 2016년 7월 12일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발표되며 또 다른 갈등과 논쟁에 접어들게 된다. 2013년 1월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UNCLOS」 제7부속서 하에서 구성된 중재재판소는 2015년 10월 29일 필리핀의 중재재판에 대해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이어 중국은 원치 않았던 상설중재재판소의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게다가 2016년 7월 PCA가 발표한 판결은 중국이 주장해온 구단선을 포함하여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¹⁰⁹⁾ 하지만 중국은 2015년 9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방문했을 당시 인근 베링해의 알류산 열도 내의 미국 영해 12해리 이내에 사전통지 없이 5척의 군함을 진입하게 한 뒤 ‘무해통항(innocent passage)’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2015년 10월 구축함 라센호를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 내의 인공섬 주비자오(渚碧礁) 12해리 이내에 진입시키고 전략폭격기 B-52를 근접 비행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까지 PCA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동 판결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수차례 ‘항행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을 펼쳤다.¹¹⁰⁾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미국은 태평양 국가의 일원으로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항행과 상공 비행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분쟁 지역에서의 일방적 행위를 반대하고 군함의 무해통항(innocent passage)과 초계, 정찰을 포함한 비위협적 군사 활동은 당연히 항행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과 남중국해 관련국들은 중국이 9단선에 근거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PCA의 판결로 국제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중국의 일방적인 인공섬 매립은 남중국해의 안정과 주변국들을 위협하는 행위라 주장하며 영구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남중국해와 관련하여 국제해양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자국의 주권, 권리 및 관련된 주장은 역사를 통해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역대 중국 정부가 모두 일관되게 이를 견지해왔음을 주장하고 있다.

제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약 2000년 전인 한(漢)대부터 남중국해의 인근 해역을 발견하고 점진적으로 관리체계를 완비하기 시작한 반면, 필리핀과 미국이 영유권 분쟁에서 근거로 삼는 「UNCLOS」는 1994년에 발효되어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13년 필리핀이 유엔해양법재판소에 영유권 분쟁의 강제 중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중재안을 수용하지도 재판 절차에 참여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분명히 하고 있다.

¹¹⁰⁾ 예를 들어 미 국방부의 게리 로스 대변인은 2016년 10월 21일(현지시각) 미군 구축함 디케이티호가 남중국해 시사군도(西沙群島)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국의 개입에 대해서도 중국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미국이 「UNCLOS」의 비준국도 아니면서 유리할 때만 이를 내세운다며 비판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미국 측에 약속을 준수할 것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일을 처리해 주기를 촉구하고 있다.¹¹¹⁾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국내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남중국해에서 물러설 수도 없는 입장이다. 냉전 이후 중국은 애국·민족주의를 사용하여 중국의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을 계속해서 하나로 묶고 공산당의 정통성과 리더십을 유지해왔다. 2008년 이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같은 해 말에 터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의 인민들은 미국의 퇴조와 중국이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기대하였다.

특히 중국 내 민족주의 그룹들은 공산당 지도부에 국제사회에서 강한 중국의 모습을 요구해왔고, 중국공산당 지도부로서는 공산당의 정통성과 리더십 유지를 위해 이러한 국내정치적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힘에 눌려 중국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 현재 중국 지도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물리적인 충돌을 바라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강한 외교적 반발과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국내외에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남중국해와 관련하여 외교적인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7월 12일 PCA 판결 발표 직후인 같은 해 7월 25일 ASEAN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이어 27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서도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나 PCA 판결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동시에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당시 ARF에서 존 케리(John Kerry)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

¹¹¹⁾ 이는 1995년 중국이 난사군도의 팡가니방 산호초의 간척사업을 실시하며 필리핀과 대립하자 미국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일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한 PCA 판결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PCA 판결 이후 중국이 이를 무시하는 모습은 계속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2016년 7월 25일 베이징에서 수잔 라이스(Susan Rice)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는 길을 걷지 않으며 현행의 국제질서와 규칙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시 주석의 유화적인 메시지와는 대조적으로 판창룡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라이스와의 만남에서 중국은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겠다는 것이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이며 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언급했다.

이러한 중국의 남중국해 관련 외교적 노력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물론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입장이 전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지만 외교적으로 분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대표적인 예로는 2017년 8월 8일 필리핀에서 개최된 ARF 의장성명을 들 수 있다. 2016년 의장성명에서는 “남중국해 간척과 활동 확대”에 일부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표명한 우려에 유의한다는 표현이 포함되었다.¹¹²⁾ 또한 2017년 8월 5일 발표된 ASEAN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신뢰를 훼손하고 긴장을 높이는 간척 등의 활동에 일부 장관들이 표명한 우려에 유의한다”는 표현과 함께 “비군사화와 자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중국과 연관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¹¹³⁾ 하지만 2017년 ARF 의장성명의 내용에서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 논쟁과 관련된 ‘간척과 활동 확대’의 표현이 사라졌다.¹¹⁴⁾ 또한 남중국해와 관련하여 중국의 외교 분야에서

¹¹²⁾ “Turning Vision into Reality for a Dynamic ASEAN Community,” Chairman’s Statement of the 23rd ASEAN Regional Forum, Vientiane, Lao PDR (July 26, 2016).

¹¹³⁾ “Partnering for Change, Engaging the World,” Joint Communique of the 50th 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 Manila, Philippines (August 5, 2017).

¹¹⁴⁾ Chairman’s Statement of the 24th ASEAN Regional Forum, Manila, Philippines (August 7, 2017).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최근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Roa Duterte)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지만 미국을 비판하고 친중정책을 펴는 모습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의 관계 진전되는 모습이다. 중국은 이러한 현상을 미중 간의 남중국해 상에서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영국과 일본이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동참의 의지를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던 ‘항행의 자유 작전’이 5월 이후 재개된 점에는 긴장하며 다시금 추이를 살피는 형국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미국과 남중국해에서 논쟁과 갈등을 이어가는 이유는 군사·안보적인 문제이다. 중국은 자국과 ASEAN 일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영토 분쟁의 문제에 당사국이 아닌 미국이 끼어들어 간섭하며 분쟁을 키우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와 같은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의 틈새를 파고들어 미국이 ASEAN 국가들과의 군사·안보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은 당사국들 사이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제3국이 간섭해서는 분쟁과 논란만 커진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당사국들이 2002년 서명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에 이어 국가들 간 구속력을 지닌 「행동수칙(Code of Conduct: COC)」의 제정 협상을 조기 타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중국은 ASEAN 국가들과의 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정한 진전도 만들어내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 중국은 ASEAN 10개국 대표들과 구이저우성(貴州省)의 구이양(貴陽)에서 2일간의 회의 끝에 남중국해 COC 초안의 기본 틀에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고 중국 외교부 부부장 류진민(劉振民)이 발표하였다.¹¹⁵⁾ 이어 같은 해 8월 6일 중국

¹¹⁵⁾ Laura Zhou, “China and ASEAN agree to draft code of conduct in South China Sea,” *South China Morning Post*, May 18, 2017.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과 ASEAN 10개국의 외교부 장관들이 협상을 통해 COC의 기본 틀을 채택하였다고 발표하였다.¹¹⁶⁾

이렇듯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COC의 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이유는 우선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의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당사국들 사이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중국의 역내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생각된다.

다. 북핵

(1) 미국 입장

북핵 문제는 1992년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을 비롯한 남북 협력 속에서 생존을 추구하다가 결국 핵프로그램을 통한 생존 방향을 전환한 후 발생한 문제이다. 이후 북한은 핵프로그램, 더 나아가 핵무기를 수단으로 생존 및 대남 주도권을 위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한반도 정치 상황은 발전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과거 핵프로그램에서 핵탄두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북한은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과 함께 잠수함탑재 핵탄두 미사일 개발과 핵·미사일 양산, 더 나아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대공 요격체제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곧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북중관계 역시 탈냉전기 최악이라고 분석되기 때문에 미중관계 속에서 북핵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제 북핵 문제는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강대국들의 안보 및 동북아 전략, 그리고 핵무기 확산방지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지구적 문제가 되었다.

¹¹⁶⁾ "Southeast Asia, China adopt framework for crafting code on South China Sea," *Reuter*, August 06, 2017.

미국 북핵 전략의 기본 원칙은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 및 핵무기 비확산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 먼저 신뢰할 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압박을 가하면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북핵 문제 전략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이 전개되었지만 여기서 관심의 주요 대상인 미중관계에서 볼 때, 핵심은 중국의 협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북한의 대외수출의 90%를 수입하고, 대북 원유수출을 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의 협력은 오바마 정부부터 더욱 긴밀해졌다. 소위 신형대국관계의 근간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오바마 정부 당시의 북핵 전략은 소위 전략적 인내 전략으로 압박과 제재, 군사적 억제, 제재를 병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2016년 4차와 5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개발을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면서 유리한 입장에서 전체적인 협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부정되었다. 취임 이전 유세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 정리되지 않은 정책 발언을 했다. 그러나 동아시아 전략 구도 속에서 북핵 및 북한 문제, 그리고 한미동맹의 위상을 총괄적으로 정의하고 한미동맹 및 양자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포괄적 정책 검토를 거쳤고, 군사옵션의 사용 문제가 4월 내내 한반도 위기설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정부의 북핵 전략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근본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 강화된 압박과 제재를 추구하고지만 군사적 옵션의 사용은 여전히 큰 위험부담을 동반하고 중국의 도움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점에 문제의 지속성이 있다.

트럼프 정부의 북핵 전략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으로 요약된다.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되 북한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어 대북압박을 가하고, 독자적 압박과 제재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 대화를 추구한다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중국에 대한 경제압박의 수위를 낮추면서 미중 협력 가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했다. 4월 초 미중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압박 협력의 대가로 미국의 대중 경제압박 완화의 가능성을 비치기도 하였고, 미중 간의 전략 협력의 긴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하였다. 중국은 북핵 문제가 악화될 경우 미국 단독의 대북 2차 제재로 중국의 기업과 은행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하는 한편, 한미 군사동맹 강화, 한·미·일 전략 협력 강화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을 피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결국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석유 수송을 부분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북한을 압박하였고 북중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향후 미중관계의 전반적 변화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협조를 지속하겠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보답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당장은 미국의 대중 무역 관세 부과 정책 후퇴, 환율조작국 미지정의 정책에 만족하겠지만 북핵 문제가 지속될 경우, 양안관계, 해양 영토 분쟁, 미중 간 동아시아 지정학 경쟁 등에서 미국의 협력, 더 나아가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당장은 사드 배치를 묵인하더라도 한미동맹의 강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견제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북한의 버티기 전략에 대해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려면 미국의 대중 양보가 필요할 텐데, 미국 내 대중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눈초리가 매우 날카롭다. 미중 신형 대국관계를 약속했던 오바마 정부의 대중 자세가 유화적이라는 비판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지속적인 미사일 실험으로 문재인 정부 역시 트럼프 정부의 대북압박 기조에 동조하면서 대화의 원칙을 강조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사드의 정상 작동 개시 및 미국의 전략무기 순환 배치 강화,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대미 협상 등 군사적 수단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더 나아가 전략 핵무기 도입, 독자적인 핵무장까지도 사회 일각에서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이 모두가 한미 동맹의 군사적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향후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놓고 한미 간의 정책 조율이 심화될수록 중국은 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

(2) 중국 입장

북한의 핵 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의 접근법에 기인하여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국제사회의 ‘책임대국’으로서 핵의 확산에 반대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 중인 북한에 비판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응하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에 동의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는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하에서 북핵 문제에 접근하는 전략적, 군사·안보적 계산법이다. 물론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인접 국가의 핵무장은 자국의 군사·안보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한다.

하지만 역내에서 점차 뚜렷해지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로 본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수준의 제재, 즉 실질적으로 김정은 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대북 제재 조치를 실행하는 것에는 적극적이지 않다. 북한 총무역량의 90%,

그리고 생필품과 에너지 공급의 목줄을 쥐고 있는 중국이다. 하지만 만약 중국이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이행하면 자칫 김정은 체제의 붕괴 또는 북한 내에 커다란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대를 사라지게 하는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지렛대가 현저하게 약해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핵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러한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중국의 미묘한 입장 변화의 추이는 그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발표되었던 외교부 공식성명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먼저 중국의 공식성명서의 글자 수가 줄어들고 표현이 순화되는 모습을 확연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 핵실험 후 공식성명서에서는 “제멋대로(悍然)”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난했으나 2차 핵실험 이후에는 이러한 표현이 사라졌다. 또한, 1차와 2차 핵실험에 대한 성명서에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를 무시(無視)하고”라는 표현을 썼으나 3차 성명서에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不顧)”라는 표현으로 완화되었다.¹¹⁷⁾

또한 6자회담 관련, 1, 2차의 경우에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강력하게 요구(強烈要求)’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3차의 경우에는 북한을 빼고 각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6자회담의 틀에서 한반도의 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표현으로 바뀌었고, 4차 성명에서는 “대화과 협상을 통해”라는 표현 대신 “6자회담의 틀을 통해 한반도의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견지한다(堅持通過六方會談框架解決半島核問題)”라고만 적혀있다. 이러한 추세는 6차 핵실험에 대한 외교부 공식성명까지 이어진다.

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와

¹¹⁷⁾ 김한권,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02 (2016), p. 11.

범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중국 외교부 공식성명과는 대조적이다. 비록 여전히 빈틈이 나타나고 있지만 점차 제재의 내용이 강화되고 제재 조치의 항목이 구체화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⁸⁾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북핵 문제를 다루며 한반도 주변의 군사·안보적 긴장 고조를 감소하고,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의 역내 군사·안보적 영향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6차례의 핵실험 동안 중국은 일관되게 관련 각국이 냉정하게 대응(冷靜應對)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근본적 입장은 미국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2016년 1월 6일의 4차 핵실험 이후 ①‘쌍궤병행(雙軌並行)’, 즉 비핵화-평화협정 동시 논의로 제재국면에서 탈피하여 대화국면으로 전환, ②대북제재와 북중 우호관계의 분리 접근, ③UNSC 결의에 따른 제재 조치 준수하는 한편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원조 견지의 양면 정책이라는 크게 세 가지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은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고려는 2014년 말부터 북중관계의 회복 시도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2015년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 류윈산(劉雲山)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차 방북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2016년 6월 1일에도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을 방문한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¹¹⁸⁾ 김한권, “4차 핵실험과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고민,”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2월호), pp. 5~7.

하지만 최근 중국은 북한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한미의 강경한 대북제재 조치를 수용할 수 있는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미 국제사회가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심각한 비판과 제재 조치 강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북한을 전략적 계산에 의해 감싸기에는 증가하는 국제사회의 눈총을 감수해야 한다. 더욱이 북한이 2017년 7월 성능이 개선된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감행하자 미국의 입장도 변화하였다. 이제는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핵 공격 위협을 받게 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라는 대중국 압박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중국으로서는 만약 미국이 중국의 주요 기업과 은행을 향해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한다면, 자국의 주요 기업과 은행을 보호하며 경제적 이익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라는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지킬 것인지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최근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과 미국의 대응을 인식하며 2016년 초에 제안한 ‘쌍궤병행’의 카드에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임시 중단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임시 중단 후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자는 ‘두 개의 임시 중단(雙暫停)’ 카드를 내세우며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에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라. 사드(THAAD)

(1) 미국 입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강화되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은 이에 대처할 다양한 군사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2014년 6월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Michael Scaparrotti)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한국에 사드

전개를 요청했다고 발언한 이후 사드와 관련된 사안이 주목을 끌었다. 한국 정부는 사드에 대한 요청, 협의, 결정을 부인하는 소위 '3No' 정책을 추구하다가 2016년 7월 8일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게 되었다. 2017년 9월 들어 경북 성주에 4기의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고 정상가동하기로 함에 따라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가지고 있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로서 거부에 의한 억지를 실현함과 동시에 북한의 공격의지를 억제하는 한국 방어용 무기체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x-band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북한의 미사일에 맞추어 설정하고 요격 미사일 역시 북한의 미사일에만 사용하겠다는 원칙이다. 둘째, 사드는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것으로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대략 1조 원에 달하는 배치 비용은 미국이 전부 부담하며 이는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된 바 있다. 셋째,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사드는 아시아, 태평양의 지역미사일 방어체계와는 무관하다는 원칙이다. 주한미군의 사드가 미국의 지역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미국은 대북 방어용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지만, 이들이 통합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중국은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그간 유럽의 전장에서 지역미사일 방어체계를 추진해왔고 유럽의 동맹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러시아는 미국에 미사일 방어에 대한 조약을 맺고자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지역미사일 방어를 위해 힘써왔다.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러시아의 억제전략을 훼손한다고 하여 강하게 비판해왔다. 유럽에 비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역미사일 방어체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지역미사일 방어체계에 기본이 되는 무기체계 도입과 지휘, 명령체계 추진을 시도해왔

지만, 단계별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은 아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보다는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러다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행보를 비판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비공식적 경제제재를 단행함과 더불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을 가해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동맹국을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중국은 해양 기반 JL-2 잠수함탄도미사일과 DF-41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고, 미국의 중간단계 미사일요격을 회피하기 위한 탄도 개발 기술 등을 추진해왔다. 중국은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역내 사용을 추구하고 있고 현재 1,200기에 달하는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거리 크루즈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향상하여 대지, 대함 능력을 향상시켜왔다. 2015년 9월에는 DF-26이라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광 공격능력을 갖추었다. 이와 같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의 사태에 개입하려 할 경우 중국이 이를 봉쇄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향후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미사일 방어체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문제는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려고 설치된 한국의 사드가 이에 어떠한 방법으로 관계를 맺을지, 혹은 맺지 않을지에 관한 것이다. 미국은 양자가 상호운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작전상 통합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굳이 한국의 사드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우려하는바 대중국 탐지, 요격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한국이 북핵 사태를 기하여 점차 미국의 대중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닌지, 혹은 그러한 미래의 필요에 대비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결국 사드 배치는 현재 배치된 무기체계를 둘러싼 미중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미중 간의 군사경쟁에 한국의 사드가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¹⁹⁾

(2) 중국 입장

역내에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점차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2016년 7월 8일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을 알리는 한국과 미국의 공식 발표는 한중 간 문제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안보적 이슈로 떠올랐다. 중국 측은 사드의 한국 내 배치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며, 한중관계에도 커다란 손상을 입힐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나날이 증가하는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의 전략적 우려는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가) 유럽으로부터의 함의

냉전 이후 러시아는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ional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의 동유럽 확장을 반대해왔다. 사실 러시아는 냉전이 끝나갈 무렵 유럽 내 미군의 주둔과 NATO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NATO의 확장을 추구했고, NATO의 확대는 점차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해 갔다.

미국과 NATO 동맹국들은 1999년 체코, 헝가리, 폴란드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며 확대를 시작했다. 이어 2004년에는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¹¹⁹⁾ Thomas Karako, "FPI Analysis: The Future of Missile Defense in the Asia Pacific," *The Foreign Policy Initiative*, May 31, 2017.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가 NATO에 가입하며 두 번째 확대가 나타났다. 2008년 4월 NATO의 정상회의에서는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는 NATO의 회원국이 될 것임을 발표하였다.

당시 프랑스와 독일의 우려대로 러시아는 접경국인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안보적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러시아는 결국 2008년 8월 그루지야를 침공하였다. 러시아는 그루지야의 압하지야(Abkhazia)와 남오세티야(South Ossetia) 지역을 장악하며, 미국과 NATO에 더 이상의 러시아를 향한 NATO의 세력 확대를 묵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였다. 그러나 NATO의 확대는 계속되어 2009년에는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인다.

2014년 2월 22일 우크라이나의 친(親)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축출되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크림반도를 점령한다. 나아가 미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의 경고와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우크라이나의 자치공화국이 된 크림반도는 러시아와의 합병을 결정하는 주민투표에서 90% 이상의 찬성을 통해 결국 러시아와 합병된다.

이러한 NATO의 확장과 함께 유럽 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적 갈등을 야기했다. 2002년 미국은 「ABM 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의 해체를 선언하고, 자체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와 해외 각 지역에 소재한 미군 기지의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추구하였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2010년 2월 『탄도미사일 방어 심의 보고서(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Report)』를 공표하였다. 미국은 이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4단계로 이루어지는 유럽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에도 군사·안보적 우려로 다가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탄도미사일 방어 심의 보고서』를 통해 유럽, 중동, 그리고

북한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에 걸쳐 각 지역의 안보 위협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 과정과 중국의 대응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대만에 엑스밴드(X-band) 레이더가 설치되고 한국에 사드 포대 배치의 움직임이 나타나자 중국은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2014년 7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한국 측에 직접 사드 배치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2016년 1월 13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안보국익에 따라 사드 배치를 검토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사드 배치 논의가 공식화되었다. 이어 같은 해 2월 7일 한미 양국은 ‘주한 미군 사드 배치 공식 협의’를 선언하였다. 2016년 2월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했던 왕이 외교부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어떤 나라든 한반도 핵 문제를 빌미로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려는 데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항우가 칼춤을 추는 의도는 유방을 죽이는 데 있다(項莊舞劍, 意在沛公),” “사마소의 야심은 길 가는 사람도 다 안다(司馬昭之心 路人皆知)”는 고사를 인용하며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반대하였다.

2016년 7월 8일 사드의 한국 내 배치 결정이 공식 발표된 직후 중국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의 공식성명과 관영언론의 논평을 통해 강한 비판과 불만을 표출했다. 중국이 이렇게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크게 국내정치적 이유와 대외전략적 우려의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로 동북아 지역에서 미중 간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진 것과 함께 지도부의 체면도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왕이 외교부장과 창완취엔(常萬全) 국방부장은 물론 시진핑 주석까지 직접 반대 의사를 전했음에도 결국 사드 배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중국 언론들이

한국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어찌 보면 자국 지도부의 위신과 정당화를 위한 당연한 수순의 반응으로 볼 수도 있다.¹²⁰⁾

둘째로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으로 인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졌다는 주장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로 동아시아에서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가 한국으로 확장되고 한국의 참여도 가시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중국은 냉전 후 유럽에서 미국이 사실상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안보적인 우려와 격렬한 반대를 목격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추구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이미 일본과 대만에 총 3대의 탐지 레이더를 배치한 데 이어 이제 한국으로 확장되어 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내 사드 배치를 포함한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은 ‘반(反)접근/지역거부(Anti-Access, Area Denial, 이하 A2/AD)’로 불리는 중국의 대미 방어 전략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최악의 경우, 중국은 미국과의 상호확증 파괴 능력을 중심으로 균형을 유지했던 최소한의 핵 방어 전략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해야 할 수도 있다.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의 목적이 북핵 대응이며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을 견제하는 데 있지 않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불필요해진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게다가 2016년 11월 23일 한일 간에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이 체결되

120) 李婷婷, “亞球行與‘薩德’: 韓國的兩難選擇?” 『世界知識』, 第9期(2015); 楊希雨, “‘薩德’入韓與半島安全博弈,” 『軍事文摘』, 第19期(2016); 金強一, “韓國部署‘薩德’必將陷入新的困境,” 『延邊大學學報』, 第5期(2016); 石源華, “‘薩德’入韓與韓國的國家主權,” 『世界知識』, 第5期(2017); 虞少華, “重新審視朝鮮半島無核化問題,” 『國際問題研究』, 第2期(2017); 王俊生, “面對朝鮮半島局勢中國需保持戰略定力,” 『東北亞學刊』, 第3期(2017).

자, 중국은 한국이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제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로 편입되는 것이라 의심을 더하였다. 이어 일본이 자국 내 사드 포대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자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사드 배치 검토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¹²¹⁾

결론적으로 중국은 냉전 후 유럽에서 발생했던 NATO의 확장 정책과 미국의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해 터져 나온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충돌과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등을 목격하였다. 따라서 냉전 후 NATO의 동진정책과 유럽에서 본격화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아시아에서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바라보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일본의 사드 배치 검토 등 일련의 모습들이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제와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체계의 단계별 구축 과정으로 인식하는 모습이다.

마. 다자안보협력 및 동맹

(1) 미국 입장

트럼프 정부 등장 이전까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오바마 정부가 내세운 아시아 재균형 전략으로 특징지어지며 그 틀 속에서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과 동맹관계 강화를 추진했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비판해왔지만 구조적 틀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존재한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초를 놓고 국제법과 규범에 기초한 안정된 질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재균형 전략을 제시했다고 언명했다. 개방적인 국제경제를 만들어 규범을 정착시키고

¹²¹⁾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16年11月28日外交部發言人耿爽主持例行記者會,” 2016.11.28, <http://www.fmprc.gov.cn/web/fyrbt_673021/t1419307.shtml> (검색일: 2017.07.28).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어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논리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강하고 현대화된 군사 배치를 유지하고 예산감축 조치와 무관하게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며 기존의 동맹들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과 보다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경제파트너십을 강화해가며, 민주국가들과 거버넌스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맹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이다.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등 주요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다자협력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2009년과 2010년 미국이 인지한 중국의 공세전략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은 재균형 전략이 탈냉전기 대중국 전략의 연속성 속에서 전략적 변화라기보다는 전술적 재조정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냉전 종식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계속 정책적 투자를 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론을 불식시키고 미국의 경제발전과 안보이익, 중국 부상에 대한 대응을 위해 아시아 지역을 중시해야 한다는 정책이 연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0년까지 미국 해군력의 60%를 아시아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가장 발전된 포드급 항공모함,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 줌왈트급 스텔스 구축함 등과 F-35 등 최신편 전투기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더불어 동남아 국가들과의 전략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다자협력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외교·안보 관계를 강화한 바 있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분석하면서 처음에는 대체로 조심스러운 환영의 입장으로 시작했다고 보지만 후에는 부정적으로 변화했고 점차 미국의 아시아 진출을 대체하는 대안적 규범과 질서를 시도해왔다고 본다. 2012년 시진핑 당시 부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아시아 지역 역할을 환영한다고 언급하고 이후에도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지만, 중국 전체의 공식 입장을 보면 미국에 대한 조심

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고 본다. 2013년 중국의 국방백서를 보면 이 지역의 긴장을 높이는 경향이 있고, 2015년에는 미국의 재균형 전략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미국이 전통적인 동맹을 강화하고 안보와 군사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재균형 전략이 내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¹²²⁾

또한 미국의 재균형 전략이 남중국해 문제를 미국이 다루는 데 핵심적 요인이며 미국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을 재균형 전략의 개입적 요소로 삼고 있다는 인식을 비치고 있다. 더 나아가 재균형 전략을 중국에 대한 신봉쇄전략으로 보고 중국에서 재균형 전략이 전반적으로 환영받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지난 20년간 경제발전에 힘입어 군사력 증강에 매진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중국은 소위 반접근/지역거부전략(A2AD)을 추진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기지를 통상미사일전력으로 공격할 전력을 비축해나가고 있다. 2015년 미국은 중국이 미국 지역 기반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며 괌을 공격하면서 반접근/지역거부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미국은 괌을 재균형 전략의 군사부문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 중국군은 괌을 미군 진출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군사갈등이 빚어질 경우 중국은 괌에 주둔하는 미국의 군사자산을 통상전력으로 우선 공격하고 지역투사력을 거부한 후 미군의 전장 투입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중국은 DF-26 중거리 탄도미사일, DF-26 대함탄도미사일, 공대지 크루즈미사일, 공대함 크루즈미사일, 함대함 크루즈미사일, 함대지 크루즈미사일 등의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된다.

¹²²⁾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6 Report to Congress of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p. 486.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대안적인 안보, 경제 질서를 추구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대해 중국은 대안질서를 모색해왔는데, 예를 들어 시진핑 주석은 2014년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CICA)에서 대안적 지역안보아키텍처를 언급하면서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다루어야 하며 아시아의 안보를 지켜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4월 『인민일보』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아시아에 평화를 가져오기보다는 불확실성을 증가시켰고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동맹 체제는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적절한 대안이 아니며 따라서 중국이 제안하는 아시아 안보체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안보전략을 기초로 지역다자경제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2014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APEC회의에서 일대일로를 통하여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TPP에 대항한다는 속내를 비치고 있다. 자유무역 영역에서도 메가 FTA로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추진하여 30억 이상의 인구와 지구 무역의 40%를 포괄하는 자유무역지구를 주도하고자 한다. RCEP는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인하 효과보다는 중국식 발전모델을 확산하는 데 더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은 평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TPP 타결 이후 미국이 지역 경제의 원칙과 규칙을 제정해나가겠다는 전략의 중국식 대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은 TPP가 발동될 경우 2020년까지 중국 GDP의 0.3%가 감소하며 2025년까지 수출의 1.2%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RCEP가 타결될 경우 이러한 손해가 벌충되고 중국의 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일대일로 계획은 중국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 44억 명에 이르는 인구를 포괄하고 육로와 해상을 통해 경제영토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 차원에서 중국은 2015년 AIIB를 창설하여 57개국의 회원국으로 새로운 계획을 출범시켰다. 이로써 중국은 개발재정의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 IMF의 개혁이 지연되면서 중국의 대안 모색이 더욱 활발해졌다. AIIB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연결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등장 이후 동아시아 안보 문제 및 미중 군사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모두 소위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소위 신형대국관계를 받아들여 핵심이익을 상호존중하고 윈윈의 양자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본 방향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 역시 2017년 4월 6~7일의 정상회담에서 기본적인 상호이익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소위 100일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아시아 안보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핵 문제가 시급한 사안으로 떠오른 데다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이 긴요하게 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안보전략 전반을 새롭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중관계 속에서 중요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향후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 양안관계, 남북관계,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문제, 해양안보 문제 등 다양한 사안들이 미중 간의 전략 사안인데 트럼프 정부는 이에 대한 전반적 전략 비전과 동아시아 다자안보 및 동맹정책의 비전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은 지속될 것이다. 미중은 경제적 협력관계를 심화하는 가운데 향후 지구적, 지역적 패권 다툼을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협력과 경쟁 속에 세력전이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 내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경계의 분위기는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중요한 단기적 사안들을 다루고 나서 이러한 구조적 요인을 고려한 대중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2) 중국 입장

(가) 비동맹원칙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원칙 중 하나는 비동맹 원칙이며 이는 ‘평화공존 5개 원칙’ 중 하나이다. 중국 외교사에서 ‘평화공존 5원칙’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3년 12월 31일 저우언라이 총리가 중국과 티베트 문제를 논의하고자 방문한 인도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였다. 당시 저우 총리는 영토의 보전과 주권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으로 구성된 ‘평화공존 5개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티베트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인도대표단에게 제안했다. 이어 1954년 6월 중국의 저우 총리가 인도를 방문하여 인도의 네루(Jawaharlal Nehru) 총리와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평화공존 5개 원칙’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1세기 들어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자, 국제사회의 일각에서는 패권국과 도전국의 경쟁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연쇄통 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장을 포함한 중국의 현실주의자들은 미국과의 패권경쟁은 피할 수 없으며, 세계 중요 지역에 동맹국들이 존재하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그동안 지속해온 비동맹 외교원칙을 버리고 중국의 주변국 중 러시아, 파키스탄 등 주요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연쇄통 원장은 2013년 발간한 그의 저서 『역사적 관성(歷史的慣性)』에서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 중 태국과 한국과의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²³⁾ 특히 왕이웨이(王義桅) 인민대 국제사무연구소 소장, 리둔치우(李敦球) 전(前) 중국한국사연구회 비서장, 마카오 대학의 천딩딩(陳定定) 교수 등은 한미동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과 동맹 또는 동맹에 준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²⁴⁾ 하지만 한국과의 동맹을 포함한 비동맹 원칙의 파기 주장에 관한 논의는 이후 점차 사그라졌다. 이후 중국은 비동맹 원칙을 버리기보다는 전통적인 외교 원칙을 지키며 다자안보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나) 다자안보협력

중국의 다자안보협력의 두 축은 이하 CICA와 SCO이다. CICA는 1992년 10월 제47차 유엔총회에서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의 제의로 만들어진 지역협의체이다.

당시 CICA는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를 모델로 아시아 지역 내 상호 신뢰 구축과 분쟁 예방을 설립 목적으로 하였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¹²³⁾ 엔쉐통은 중국이 향후 다가올 미중의 양극 체제에 대비하여 그간 견지해온 비동맹 원칙을 버려야 하며, 미중 경쟁에서 중국의 편이 되어줄 우방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안보위협,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 유지를 한중 공동의 3가지 안보 이익으로 명명하며 이를 위한 한중 간의 동맹을 제안하였다. 그는 현재 동북아에서 나타나는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과 한미동맹의 존재를 지적하며 한중동맹 체결의 현실성에 의문을 표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고려와 조선이 보여주었던 ‘兩端외교(double alliance)’를 가리키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 모두와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閻學通, 『歷史的慣性: 未來十年的中國與世界』(北京: 中信出版社, 2013); 김한권, “중국의 주변국 정책과 한국: 한중동맹론 등장의 의미,” 『성균차이나포커스』, 제15호 (2014.11.01.).

¹²⁴⁾ “王義桅: 中韓可考慮締結陸隣友好合作條約,” 『聯合早報網』, 2014.07.01, <<http://www.zaobao.com.sg/special/zbo/story20140701-361076>> (검색일: 2017.08.10.); “傳家: 中韓結盟可能性不大 但不排斥同盟內涵,” 『環球網』, 2014.07.05, <<http://mil.huanqiu.com/observation/2014-07/5049052.html>> (검색일: 2017.08.10.); Dingding Chen, “Is a China-South Korea Alliance Possible?” *The Diplomat*, July 08, 2014, <<http://thediplomat.com/2014/07/is-a-china-south-korea-alliance-possible/>> (검색일: 2017.08.12.).

CICA의 설립을 제의할 당시의 국제정세는 구소련이 붕괴하고 동유럽의 공산국가가 몰락하는 등 냉전의 시기가 막을 내리며 국제사회는 또다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대외환경으로 인해 당시 신생 독립국이었던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연설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려 했던 유엔 회원국들의 관심을 끌었다.¹²⁵⁾

SCO는 1996년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참가한 가운데 상하이에서 열린 5개국 회담에서 '상하이 5국(Shanghai Five)'을 출범하였다. 이어 '상하이 5국'은 2001년 6월 15일 우즈베키스탄이 합류하면서 현재의 '상하이협력기구'가 되었다. 2017년 6월 9일에는 인도, 파키스탄이 가입하며 회원국은 8개국이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을 배제한 채 CICA의 국제기구화를 추구하는 한편 '아시아 신안보관'을 주창했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SCO를 통해 미국의 군사·안보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을 배제하며 새로운 지역 안보 질서의 구축을 시도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 5월 21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CICA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기초연설을 통해 CICA의 역할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아시아안보협력기구로 만들자고 공식 제안하였다. 나아가 시 주석은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천명하며 '아시아 신안보관'을 주창했다. 이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아시아에도 평등하고 개방적인 안보기구가 필요하다며 시 주석의 주장에 즉각적인 호응을 표시하였다.

중국의 주창에 앞서 카자흐스탄은 이미 2012년 CICA 외교장관 회의에서 CICA의 국제기구화를 제안하였으며, 시 주석 제안이 있었던 제4차

¹²⁵⁾ Mu Chunshan, "What is CICA (and Why Does China Care About It)?" *The Diplomat*, May 17, 2014.

CICA 정상회의에서도 CICA의 국제기구화 주장을 계속하였다. 또한 2015년 10월에는 이와 관련된 콘셉트페이퍼를 회람하였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회원국들은 CICA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은 국제기구화하기에는 아직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중국은 역내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외교원칙인 비동맹주의를 견지하면서 대신 CICA와 SCO를 통한 다자협력을 중심으로 주변 우방국들을 형성해가려 한다. 또한 역내에서 미국 나아가 미일동맹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러시아와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CICA를 국제기구화하기에는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으며, SCO에는 아시아의 라이벌인 인도가 가입함으로써 다자안보협력을 통해 역내 외교·안보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도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마주하고 있다.

바. 일대일로(一帶一路)

(1) 미국 입장

중국은 국력 신장과 더불어 우선 동북아와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것을 최우선 사안으로 삼았지만 점차 서부로 관심을 돌려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더 나아가 중동과 유럽을 잇는 중국의 영향권을 설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단은 중국의 막강한 경제력이다. 중국은 소위 일대일로 정책과 AIIB를 통해 아시아 전체와 유럽까지 포괄하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네트워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아시아 정책이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던 것만은 아닌데, 이와 관련하여 2011년 6월 미국의 당시 국무장관이던 힐러리 클린턴

(Hillary Clinton) 장관은 이미 2014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철수 이후 중앙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전략 개념으로 ‘뉴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주장한 바 있다.¹²⁶⁾ 그 목적은 무역과 에너지, 교통에서 지역 협력을 촉진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터키, 중국,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제시하는 다른 계획들과 경쟁관계에 놓인 바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이를 공고화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뉴실크로드 이니셔티브는 아프간의 주변국, 즉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이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경제에 가장 덜 통합된 국가들로 인프라 제공과 무역 촉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또한 경제적 필요와 더불어 인권, 법의 지배 등 정치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연결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고려되었다.

미국은 2010년과 2012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이미 5억 2,000만 달러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였고 테러리즘과 마약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이를 사용했다. 또한 동기간 중 미국은 3억 8,000만 달러의 개발협력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1992년 이후 총 39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여 자유시장과 민주주의, 보건과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온 것이다. 미국은 다양한 사업을 이미 시작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었는데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전기 지원, 아프간에 대한 건설 사업, 철도 연결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전체적으로 40여 건의 인프라 지원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TAPI(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의 파이프라인 사업은 이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핵심사업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의 자금으로 1,078마일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아프간과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¹²⁶⁾ Hillary Clinton, “Progress Noted, but Questions Remain Over ‘New Silk Road’ Initiative,” U.S. Department of State, July 2011.

이 구상은 2018년경에 마감되도록 되어 있다. 다른 중요 사업은 CASA- 1000으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수력을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연결하는 사업이다. 그밖에 미국은 이들 국가와 다양한 양자협력을 통해 지역협력을 촉진시키면서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비단 경제적 측면에서만 유용한 것은 아니며 미국의 군사물자 수송과 장비 제공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이니셔티브가 활발하게 진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가치 증진, 인권 보호 등 정치적 차원에서 일정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은 이들 지역과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으므로 일본 등 동맹국을 통한 지원 확대 및 중국과의 경쟁이 중요한 안건으로 떠오르고 있다.¹²⁷⁾

(2) 중국 입장

중국이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구상이란 고대 중국과 유럽을 이어주던 통상루트였던 실크로드에서 유래되었다. 시진핑 시기에 모습을 드러낸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의 중서부 개발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중국 남부 지방에서 동남아와 인도양을 거쳐 중동과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의미한다.

‘일대일로’ 구상이 최초로 제기된 것은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한 대학에서 강연을 통해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구상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시 주석이 의회 연설에서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공동 건설을 제안하였는데,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에서 발표한 시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은 단순히 주변 외교를 위한 경제협력 청사진이 아닌 중국의 국가전략임

¹²⁷⁾ Vladimir Fedorenko, “The New Silk Road Initiatives in Central Asia,” Rethink Institute, Rethink Paper 10 (2013).

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13년 11월의 중국공산당 18기3중전회에서 ‘접경지역 교통인프라 투자’가 천명되었고, 2014년 4월 10일 보아오 포럼에서 리 커창 총리가 일대일로 구상을 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전략으로 강조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7년 5월에 중국은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베이징에서 개최하였는데, 시 주석이 직접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했던 이 포럼에는 각국 정상과 정부 각료 29명을 포함한 130여 개 국가와 70여 개 국제단체 대표 약 1,500명이 참석했다.

물론 아직은 ‘일대일로’ 구상의 실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중국은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 40년 운영권 확보, 미얀마,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와의 항만과 고속철 연결, 투자 확대 등 중국의 주변 외교정책이 ‘일대일로’ 구상을 통하여 점차 구체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대일로’ 구상은 현재 중국-몽골-러시아, 중국 장강삼협-싱가포르,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중국-파키스탄, 중국-카자흐스탄-이란-터키, 신유라시아 대륙교(중앙아시아와 유럽 등 총 40여 국 포함) 등 6개의 경제회랑 건설로 나타나고 있다.

(가) 국내 정치·경제적 요인

이렇듯 중국의 최고지도부가 ‘일대일로’ 구상을 직접 강조하는 이유는, 일대일로 구상이 정치·경제적 의미와 함께 대외전략적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정치와 경제는 빈부, 도농, 지역의 ‘3대 격차’ 문제에 빠져있다. 실제로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당면한 ‘3대 격차’로 인해 중국인민들 사이에서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불만이 높아지는 기류에 정치적으로 긴장하고 있다. 또한 도시에 비해 농촌의 발전이 느리고 농가의 삶이 어려우며, 농민들이 더 나은 소득을 위해 대

도시로 몰려와 ‘농민공’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동부 연안 지역에 비해 중서부의 발전이 뒤쳐져있다.

이러한 중국 내 ‘3대 격차’를 탈피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노력 중 하나가 ‘일대일로’ 구상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내부의 호구제도와 토지제도의 개혁과 서부 지역을 주변국과 연결하는 대외적 돌파구가 필요했다. 연해 지역인 동부는 바다를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용이한 편이나, 내지에 위치한 서부지역은 해외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아 대표적인 저개발 지역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시켜 공동 발전을 모색하려는 ‘일대일로’ 구상을 국가 차원에서 제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교통, 정보, 에너지 등의 인프라 건설(Infrastructure), 투자 확대(Investment), 주변 국가 개발 계획들과의 상호연결(Interconnectivity), 인터넷을 포함한 긴밀한 정보 교류(Information) 등 크게 네 개의 I(4 Is)를 함축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¹²⁸⁾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국내경제의 과잉공급 문제, 새로운 성장 엔진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와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먼저, 중국은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산업 인프라 투자와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이룩해왔다. 비록 중국의 이러한

¹²⁸⁾ 최근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조금씩 진전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8월 중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1~7월 사이 중국기업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관련 48개 국가(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라오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태국 등)에 대한 직접투자현황은 전년대비 29.5% 증가한 85.9억 달러의 직접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 하청공사 계약은 총 60개 국가와 1,786건을 새로 체결하였으며 총 계약규모는 49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6% 증가하였다. 한편 “일대일로” 관련국들과의 해외무역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 태국,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각각 9.8%, 16.3%, 12.5%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유다형, “2015년 상반기 중국 경제 주요 현황 2,” 『인천발전연구원 최신중국동향』, 제164권 (2015), p. 2.

경제발전 계획은 고도성장을 실현해왔지만 산업 인프라의 중복 투자와 과잉생산을 초래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인프라 관련 산업의 과잉 공급은 최근 중국 경제에 심각한 디플레이션의 압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철강업은 최소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80%의 가동률을 유지해야 하나 최근 과잉 공급 현상으로 인해 72.5%의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다. 철강업 이외에도 시멘트, 알루미늄, 판유리 업계의 중복 투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 업계의 가동률은 최근 60~70%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 내 일부 산업들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변국에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동반하는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며 이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둘째로는 중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모색하기 위한 국가적 경제발전 전략이다. 중국은 시진핑 지도부의 시기에 들어와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로 명명된 중·저성장 시대에 진입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경제 상황에 직면하여 중국 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금융, 해외투자과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신창타이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내 일각에서는 ‘일대일로’ 구상을 1979년의 경제특구 건설의 시작,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에 이은 ‘제3차 대외개방’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셋째,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며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인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선을 해상과 육상을 통해 확보하고, 동시에 공급원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석유와 다양한 광물 등 에너지와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앙아시아의 가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해상운송 이외에 다양한 대체 운송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말라카 딜레마’로 불리는 과도한 남중국해를 통과해야 하는 기존의 에

너지 공급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일대일로’의 성공적인 추진은 중국 국내경제적 측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나) 대외 전략적 요인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앞에서 언급한 정치적, 경제적 요인 외에도 대외 전략적인, 특히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하에서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주변 외교정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 구상은 중국이 강조해 온 대국외교, 개도국 외교, 다자외교 등과도 관련된 대외 전략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베트남 등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 내지 견제 정책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 실제로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도와 ASEAN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역내 영향력 제고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대응,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다.

실제로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이르는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 강화와 안보협력 강화는 중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부상 및 진출을 억제하려는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자국 국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도 미일동맹의 강화는 군사·안보 측면에서 중국 견제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내각은 2015년 4월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한 것은 물론, 2015년 9월 집단자위권 행사와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용인하는 새로운 안보법안을 가결시키는 ‘보통국가’의 길을 걷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일본은 인도와의 경제와 안보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며 중국을 압박하였다.¹²⁹⁾

¹²⁹⁾ 당시의 대표적인 예로 아베 수상은 2014년 1월 인도를 방문하여 일본의 수륙양용기

또한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북한의 무력도발과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도 강화되었다. 더 나아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의 3국 지역안보협력체제의 확립을 추구하는 모습은 중국에 심각한 역내 안보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역내 군사·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지정학적 리더십 확대에 맞서 경제력에 기반한 지경학적 리더십을 구축해 대응하고자 한다. 미국에 비해 현저한 열세에 처해 있는 군사력보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경제력을 활용하려는 전략이 일대일로 구상으로 전개된 것이다. 즉, 중국은 군사·안보적인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맞서 주변국들과 교통과 통신 등 경협 망을 형성해 ‘운명공동체’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양회 기간이었던 3월 8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제12기 전국인대 3차 회의 기간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5년 중국 외교의 관건사(keyword)는 “하나의 중점, 두 개의 노선(一個重點, 兩條主線)”이라 대답하며 ‘일대일로’ 구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¹³⁰⁾ 이는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정책을 논하면서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一個中心, 兩個基本點)”을 주창하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었다.

인 ‘신메이화(新明和) US-2’를 인도에 수출하고 공동 생산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약 40년 만에 일본이 군사용 장비를 외국에 공급하는 사례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약 2조 1,700억 원(약 2,089억 엔)의 차관을 인도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해 인도는 일본에 중국과의 영토 분쟁 지역인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주(州)를 포함하는 동북부 지역에 도로 건설과 농업임업 등에 대한 투자를 요청함으로써 중국으로서는 일본과 인도의 경제·안보협력 강화를 불편하게 바라보아야 했다. 2015년 12월에도 아베 총리는 인도를 방문하여 일본 원자료를 인도에 수출하기 위한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과 방위장비 및 기술 이전에 관한 협정 체결에 관해 논의하였다. 또한 모디 총리와 경제협력 프로젝트와 함께 중국 견제에 대한 양자 간의 안보협력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¹³⁰⁾ “王毅：2015中國外交關鍵詞是“一個重點、兩條主線”，『新華網』，2015.03.08.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5lh/2015-03/08/c_134047710.htm> (검색일: 2017.08.28.).

왕이 외교부장에 따르면 하나의 중점은 ‘일대일로’에 대한 전면 추진 이고, 두 개의 노선은 ‘평화’와 ‘발전’을 가리킨다. 또한, 중국은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간의 공통이익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이어서 중국은 호혜합작의 방법을 탐구하여 상호 연결과 소통의 인프라 시설, 육상 경제 회랑, 해상 협력 거점의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¹³¹⁾

다른 한편 최근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군사·안보적 측면과 연결시키는 모습도 나타났다. 그간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의 성공을 위해 해상 수송로 확보와 수송로의 안전을 위한 해군력 강화의 의지를 나타내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2017년의 중국 『국방백서』에 2013년과 2015년의 국방백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한 기술이다. 2017 국방백서에는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언급이 총 두 번에 걸쳐 나왔다. 첫째, 제1장 ‘중국의 대(對)아태 안전협력에 대한 정책주장’에서 중국은 주변국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하고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을 위해 일대일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AIIB와 실크로드 기금의 건립을 강조하고 있다.¹³²⁾

두 번째는 제3장 ‘중국과 지역 기타 주요국과의 관계’의 제2절 ‘중러 관계’에서 양국의 우호 및 전략적 협력관계의 발전을 강조하며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ia Economic Union: EEU)’ 간 연계와 협력을 기술하고 있다.¹³³⁾

¹³¹⁾ “授權發布：推動共建絲綢之路經濟帶和21世紀海上絲綢之路的愿景與行動。” 『新華網』, 2015.03.28, <http://news.xinhuanet.com/2015-03/28/c_1114793986.htm> (검색일: 2017.08.28.).

¹³²⁾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亞太安全合作政策(全文),”; “一、中國對亞太安全合作的政策主張.” (2017.01).

¹³³⁾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亞太安全合作政策(全文),”; “三、中國與地區其他主要國的關係, (二) 中俄關係 이하 “...積極開展發展戰略對接和“一帶一路”建設與歐亞經濟聯盟建設對接合作...” (2017.01).

결론적으로 본다면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 (rebalancing policy)’의 실행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지정학적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¹³⁴⁾ 실제로 역내에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점차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경제적 수요창출을 위한 ‘신창타이’ 시대를 맞이하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정책의 일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중국포위’에 대응하는 중국의 전략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3. 한반도 차원

가. 한미동맹

(1) 미국 입장

한반도는 동북아의 지리적 요충지임이 틀림없다. 냉전기에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대립하는 최전방의 전선이었고, 더구나 분단국으로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달해있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탈냉전 초반의 단극 체제에서 한반도는 긴장의 수위가 낮아졌지만, 미중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북한이 핵무기를 본격 개발하면서 생존을 모색하게 되면서 한반도는 다시 미중 경쟁과 대립의 최전선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한미동맹의 유지 근거를 북한의 위협과 한미동맹의 포괄적 목적에 두었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동아시아를 미국의 주도하에 두고, 또한 지구적 위기에 한국과 공동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근거를

¹³⁴⁾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로는 Christopher K. Johnson, “President Xi Jinping’s “Belt and Road” Initiative: A Practical Assessment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Roadmap for China’s Global Resurgence,” *A Report of the CSIS Freeman Chair in China Studies* (March 2016); 이호철, “중국의 부상과 지정학의 귀환,” 『한국과 국제정치』, 제33권 1호 (2017); 이영학, “중국의 주변국 외교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의,” 『IN China Brief』, vol. 289 (2015).

존속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를 두고 중국은 한미동맹이 과거 냉전의 유산이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도구라고 비판해왔다. 중국은 한미동맹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특히 중국에 대한 견제 전략에 이용될 것을 우려하여 선제적으로 비판의 수위를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동시에 일본 및 미국에 안보위협이 되는 한 한미동맹의 존속과 발전에 대해 중국도 근본적인 비판을 하기는 어렵다. 강력한 한미동맹이 대북 억제력을 제공하는 한에서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중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동맹을 둘러싼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북핵 문제에 대처하는 한국·미국·중국 간의 정책조율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하면서 한미 양국은 우선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점증해왔고, 주한미군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했으며, 한국은 미국의 군사무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대량보복과 길체인을 완성하려는 군사적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한일 간의 양자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지속적으로 긴밀해져 왔다. 결국 북핵 문제 때문에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면서 중국은 북핵 문제가 정체되는 것을 막고 북핵 문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면서 한미동맹의 군사적 고도화를 막아 향후 한미동맹이 중국에 대한 견제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

한미동맹의 군사적 고도화를 막기 위한 목적은 중국이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중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북핵 문제 해결방안에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변화하는 한중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 중국 입장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한국전쟁과 냉전 시기의 미중 데탕트 이전까지의 적대적 대응, 미중 데탕트 이후 2008년까지 한미동맹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인정, 2008년 이후 현재까지로 나타나는 비판적 입장 등 크게 세 가지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물론 한중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의 국내외적인 상황, 중국 자체의 국력 신장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영향력의 변화, 그리고 미중관계의 변화에 주로 기인하여 변화하여왔다.

(가) 적대적 대응: 한국전쟁에서 미중 데탕트까지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국공내전을 승리로 이끌고 1949년 10월 1일에 신중국을 건국한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미국에 대한 외교적 불만과 군사·안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국민당이 지배하는 ‘중화민국’을 지지하고 있었으며, 유엔에서도 장제스의 중화민국이 중국을 대표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공군력이 미약했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보유한 공군력과 일본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위력에 커다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중국은 건국 다음 해인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과 그해 10월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하게 되었다. 결국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된 중국은 소련과 동맹을 맺으며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려 했다. 하지만 1960년대 들어 중소분쟁에 이어 소련과 국경 분쟁까지 일어나자 ‘반소반미(反蘇反美)’의 고립주의 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러한 중국의 대미 적대인식과 비판적인 한미동맹의 시각은 1972년 2월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마오쩌둥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중 데탕트를 성사시키기까지 지속되었다.

(나) 한미동맹의 존재와 역할 인정: 미중 데탕트 이후 2008년까지 소련으로부터의 군사·안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미중 데탕트 이후 미군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을 취하였다. 1992년 한중수교까지 한국과의 공식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수교 이후 2008년까지 냉전 시기의 구조상, 냉전 이후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의 입장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미군의 주둔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냉전 말 소련 붕괴와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하자 미중 데탕트 이후 유지되었던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특히 1989년 6월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고 중국 정부가 시위자들을 유혈 진압하자 미국은 중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주도하였다.

당시 중국의 최고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은 1992년 초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해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의 ‘도광양희(韜光養晦)’를 중국의 대외전략으로 제시하며 국내외적으로 마주한 난관들을 헤쳐 나갔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국력 차이를 인정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에 관한 군사·안보적 대응보다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우선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은 한미동맹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한국과의 우호협력을 강화시켜 중국 견제를 공공연히 나타내는 미일동맹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는 논쟁이 계속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소원해진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모습과 이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 비판적 입장: 2008년 이후 현재까지

2008년 5월 이후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2008년 5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3박 4일의 국빈 방문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당일 오후 곧바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한중관계를 기존의 ‘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과 다음 날인 28일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한중관계 격상은 물론 이외에도 외교 당국 간 고위급 전략대화 체제를 구축하고, 기존 양측 간 ‘한중 외교·안보 대화’의 정례화, 양국 지도자 및 정부 각 부처, 의회와 정당 간의 교류 강화,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도착 당일인 27일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08년 5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군사동맹이 동북아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는 “역사가 남긴 산물(美韓軍事同盟是一個歷史遺留的產物)”로 냉전 시기의 군사동맹으로는 세계와 지역이 당면한 안보 문제를 보고 평가해 처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¹³⁵⁾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중국 정부는 28일 오전 주중 한국대사관에 “한미동맹이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은 역사적 유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역사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란 뜻이며, 한미동맹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또 “한미동맹은 양자 차원의 문제로 중국 정부로서는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¹³⁶⁾

¹³⁵⁾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08年5月27日外交部發言人秦剛舉行例行記者會,” <<http://www.fmprc.gov.cn/zflt/chn/fyrth/t458969.htm>> (검색일: 2017.09.15.).

¹³⁶⁾ “냉전 산물” 발언 물의…중정부 해명도 아리송, 『동아일보』, 2008.05.29.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낮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台)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면서 “한미관계나 한일관계의 발전과 한중관계의 발전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강화로 한중관계가 멀어지는 일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¹³⁷⁾ 그러나 친강 대변인은 같은 날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동맹이 역사적 산물이라면 「북중우호조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북중우호조약은 상호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조약으로서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며 군사 관계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다.

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표현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역사가 남긴 산물’을 “한미 군사동맹은 특정 역사의 조건하에 형성된 양자 간 안배(美韓軍事同盟是在特定歷史條件下形成的雙邊安排)”로 다르게 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 대변인은 27일 한미동맹에 관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완전하고 체계적인 서술이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我在上次記者會上做了完整、系統的表述，中方在這一問題上的立場沒有變化)”고 강조했다.¹³⁸⁾ 그는 이어 미국과 일본과의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한미 군사동맹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특수한 상황에서 생겨난 양국 간의 문제라고 평가하고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신뢰 증진에 마땅히 부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결론적으로 한미동맹과 한중 우호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한국의 노력을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도 계속되었다. 하지만 중국이 한미동맹을 보는 시각은 바뀌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에서 한국의 선택을 압박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137) “이대통령 “한미·한중관계는 상반 아닌 보완,” 『노컷뉴스』, 2008.05.29.

138) “2008年5月29日外交部發言人秦剛舉行例行記者會(組圖),” 『和訊』, 2008.05.29, <<http://news.hexun.com/2008-05-29/106325849.html>> (검색일: 2017.09.15.); “친강 “北中 우호조약은 우호협력 위한 것,” 『연합뉴스』, 2008.05.29.

중국이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입장은 시대적 변화, 중국의 국력 증진과 위상의 변화, 그리고 주변 환경의 변화, 특히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왔다. 최근 들어 미중사이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점차 뚜렷해지고, 남·동중국해 갈등 고조, 북핵 문제 접근과 해결방안에 대한 전략 이해관계의 차이,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 간의 군사·안보적 협력 강화로 인해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은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나. 남북관계

(1) 미국 입장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의 본토를 위협하게 되면서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최우선의 과제로 놓고 북핵 문제를 간주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없게 하는 군사전략과 남북한의 관계 발전이 과연 미국 내 전략 담론에서 어떻게 연결될지가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의 비핵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한국이 단계적, 포괄적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은 강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 발전이나 남북대화를 경시하면서 발전된 핵능력을 바탕으로 북미 간의 직접 타결을 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 본토를 타격할 핵무기 능력을 동결하는 대가로 주한 미군의 철수 혹은 한미동맹의 약화를 추진하여 향후 한반도의 상황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취할 전략을 추구한다는 관측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사회의 각계각층은 다양한 담론과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에서는 남북관계 및 한국의 안보를 경시하면서 미국 본토의 안보만을 중시하는 의견이다. 미 본토의 위협을 무릅쓰고 한국을 지지해

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한미동맹 회의론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안보는 물론 남북관계, 북한의 생존 보장과 같은 정치적 해결과 함께 북한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관계, 한반도 미래의 정치적 상황이 결국 북한의 생존과 연결되며, 북한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으면 비핵화는 논리상 어렵다는 생각으로 남북관계와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한편 중국은 쌍궤병행과 쌍중단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남북관계, 혹은 북한의 생존 보장과 북한의 비핵화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병행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간 군사훈련 중단을 시발점으로 제시해왔다. 사실 중국은 북핵 문제가 북한 정권과 체제의 미래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하여 왔다. 미국 역시 중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며, 원칙적으로 대북압박과 더불어 관여 및 대화의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군사적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을 강하게 주장하던 미국은 5월 들어 점차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비치기 시작했다. 킬러슨(Rex Wayne Tillerson) 국무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정권과 체제를 위협하거나 교체할 의도가 없으며 급속한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38선 이북에 대한 군사공격 등 군사적 옵션도 다른 압박 수단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소위 네 가지 노(no)의 정책을 언급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이 충족되면 관여로 평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킬러슨 장관은 북한의 불신을 의식하여 북한이 위협을 무릅쓰고 미국에 신뢰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6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유지되거나 혹은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경제압박을 버티면서 미국의 양보를 최대

화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매진할 것이다. 미국 본토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트럼프 정부의 압박감도 가중될 것이며 북미 간의 갈등도 강화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반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지만 미국이 대북 관여 및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안을 고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한국의 노력을 지지할 뿐이다. 미국은 북한의 생존 및 체제 불위협, 군사적 공격 불고려 정도의 입장을 보이고 있을 뿐이며, 남북관계 발전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2) 중국 입장

중국 내부에서는 냉전 시기는 물론 냉전 후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이 정식 수교를 맺었음에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군부 강경인사들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중시하고 북한 중심의 한반도 정책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며 1980년대 이후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1990년대 초에 들어와 동서 이념 경쟁을 펼치던 냉전이 종식되자 점차 중국 내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게다가 1990년 초 제1차 북핵 위기를 포함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하자 북중 사이의 불신과 불만은 점차 고조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은 자주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0년 6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한 당시 장쩌민 주석은 한중관계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발전하였다고 발언하였다. 이어 2005년 11월 후진타오 주석은 한국 방문 당시 한중관계는 최상의 시기에 들어섰다고 언급하였다. 물론 외교적인 수사 또는 북한의 행동을 견제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의미가 내포된 발언으로 일정 부분은 걸러들어야 할 부분도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이 중국 최고지도자가 사용한다는 그 자체도 한중관계의 발전을 엿볼 수 있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중 간에는 1961년 7월 체결된 「조중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을 토대로 한 동맹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중 간 군사동맹의 실질적인 역할과 효력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도 의문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논쟁은 물론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部長助理)는 2014년 6월 17일 베이징의 외교부 청사에서 7월 초 시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기자단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류 부장조리는 “중국과 북한은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중국은 어떤 국가와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고 있다. 이것은 중국 외교부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그는 북중관계가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임을 강조하였다.¹³⁹⁾

반면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한중관계의 발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1992년 수교 당시 한중은 우호협력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어 1998년에는 김대중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중 시에는 “전면적(全面的)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었으며,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방중을 맞아서는 “전략적(戰略的) 협력 동반자 관계”로 올라섰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¹³⁹⁾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일문일답,” 『아주경제』, 2014.06.19, <<http://www.ajunews.com/view/20140619122703198>> (검색일: 2017.09.09.); “시진핑 방한 여파…북중조약 행사 ‘올스톱,’”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7.11,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7/11/0505000000AKR20140711086351014.HTML>> (검색일: 2017.09.28.).

하지만 ‘중국의 부상’이 이어지고 미국이 ‘재균형 정책’과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추진을 통해 중국을 전략적으로 압박하자 점차 북한이 가진 전략적 완충지대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한반도에서 남북이 균형을 유지한다면 한반도에서 전략적 완충지대 유지,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현안에서의 중국의 리더십과 역할 강화, 그리고 남북한 모두에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 따른 계산으로 인해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발전은 물론 북한의 이어지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불만과 불신이 분노에까지 이르렀지만 여전히 북핵 문제와 북중관계를 분리하여 대응하고 있다. 북중동맹을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북한 김정은 체제를 흔들거나 북한 내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제재 강화에는 반대하고 있다.

다. 평화체제

(1) 미국 입장

현재 미국이 추구하는 압박과 제재 전략은 중국이 전적으로 참여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이 경우 중국이 중시해온 한반도 평화체제는 다시 북미 간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북한은 정권 안보나 김정은 개인의 안보가 위협받기 전에는 비핵화로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이 정도의 압박을 가하려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무릅써야 할 텐데, 중국은 미국과의 미래 경쟁을 의식하는 상태에서 북한의 붕괴를 국제적인 지정학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의 미래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관여의 정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협조를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만약 중국이 적극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군사력 행사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미국의 주요 인사들 역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큰 전략이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을 천명하였다. 미국 외교·안보라인 인사들 역시 군사적 대안은 여전히 사용 가능하며 다만 최우선의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단서로 붙이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대안은 역시 한국에 치명적인 안보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대안이다. 매티스(Jim Mattis) 국방장관은 여러 차례 한반도 전쟁은 최악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부정적 인식을 보인 바 있다.

결국 미국은 군사적 억제, 방어태세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도움을 극대화하려면 미국 역시 북한과의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을 예상하여 대비해야 한다. 평화체제에 대한 미국의 진지한 자세가 있어야 중국 역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대한의 협력을 적극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당면한 자국 안보의 위협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핵 문제의 본질인 한반도 상황 및 북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점차 미국 내에서 평화체제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는 다양한 담론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전 국방장관이었던 게이츠 장관 역시 미중 간의 전략적 협력하에 중국에 북한 정권 인정, 정권 교체 포기, 평화협정 체결, 한국 내 군사구조(주한미군) 일부 변경 등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¹⁴⁰⁾ 미국이 북한 문제 자체, 그리고 이를 해결할 동북아 구도와 대북 관여에 대한 전략이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북한은 핵 포기 시 정권의 생존과 체제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과 주변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압박과 동시에

¹⁴⁰⁾ “미국 前국방 ‘북핵 동결론’ 제안…“중국과 먼저 담판지어야”, 『연합뉴스』, 2017.07.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5/0200000000AKR20170715034800009.HTML>> (검색일: 2017.09.12.).

비핵화된 북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관여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여태까지 북한을 정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인식을 보이고,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협상하고, 중국과 더불어 북한의 정상국가 노선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보장책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한계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미국에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와 북한의 미래 및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전략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다. 비핵화된 북한과 한국이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공동발전을 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야 북한 역시 비핵화를 전제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2) 중국 입장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다. 먼저 중국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함으로써 점차 강화되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중국이 일정 수준의 전략적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이익 외에도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한반도 당사국들 사이에 평화체제가 합의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간 중국은 일관되게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안보적인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예를 들어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을 맡고 있는 푸잉(傅瑩)은 한국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남북 간에는 ‘정전협약(停戰協議)’만 존재하고 ‘평화협약(和平協議)’는 타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 평화협약을 체결하고 정식으로 한국전쟁을 끝내야 하며, 6자회담을 통해 평화담판으로 북핵 문제와 평화협정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2016년 2월부터 ‘비

핵화-평화협정'의 병행을 주장하는 '쌍궤병행(雙軌並行)' 정책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고려하여 북핵과 북한을 분리해 대응할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6년 2월 17일 왕이 외교부장은 베이징을 방문한 줄리 비숍(Julie Isabel Bishop) 호주 외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진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병행 논의하자는 제안을 처음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로부터 5일 후인 2월 22일, 미 국무부 대변인 존 커비(John Kirby)는 4차 핵실험 직전인 2015년 말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는 비공식 접촉을 해왔음을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제안을 주의 깊게 검토한 후 비핵화가 이러한 논의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고 발언했다.¹⁴¹⁾ 다음 날인 23일에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장관회담의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협상하는 테이블로 온다면 국제사회에 다시 합류하고 궁극적으로 미국과 평화협정도 맺을 수 있다"고 발언하며 중국이 제시한 '쌍궤병행'의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을 엿보이기도 하였다.¹⁴²⁾

하지만 이어진 3월 3일 존 커비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병행 논의의 가능성을 배제한 적이 없지만 미국은 이러한 논의가 '무엇보다도 우선인(first and foremost)' 비핵화와 따로 떨어져서 다루어질 수 없으며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정책은 변한 것이 없다고 발언했다.¹⁴³⁾

¹⁴¹⁾ Elise Labott and Nicole Gaouette, "North Korea offered -- then rebuffed -- talks with U.S.," *CNN*, February 23, 2016.

¹⁴²⁾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With Chinese Foreign Minister Wang Yi," (February 23, 2016), <<http://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6/02/253164.htm>> (검색일: 2017.09.06.).

¹⁴³⁾ The U.S. Department of State, "John Kirby Spokesperson Daily Press Briefing," (March 3, 2016), <<http://www.state.gov/r/pa/prs/dpb/2016/03/253948.htm>>

이러한 미국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쌍궈병행’을 통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카드를 이어갔다. 대표적인 예로 왕이 외교부장은 3월 3일 존 커비 대변인의 공식 언론 브리핑이 있는 지 5일 후인 3월 8일 중국의 양회¹⁴⁴⁾ 기간 중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북핵 문제와 ‘쌍궈병행’을 연계시켜 답변하였다. 왕 부장은 “제재와 압박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의 기제로 전환하는 병행 논의를 추진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실행 가능한 해결책”임을 주장했다.¹⁴⁵⁾

또한 왕이 외교부장은 이어 3월 1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중러 외교장관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은 “합리적이며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6자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최대 공약수”라고 발언하며 중국의 입장에 대한 러시아의 협조를 확인했다.¹⁴⁶⁾ 중국은 이러한 ‘평화협정’에 관한 입장을 2017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평화협정, 특히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비핵화가 추진된다면 한반도에서의 남북 간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자칫 한미동맹 중심의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도 있다.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완충지대를 잃는 것은 물론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전략

(검색일: 2017.09.06).

¹⁴⁴⁾ 중국 양회(兩會)는 매년 3월경에 개최되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중의 하나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의미한다.

¹⁴⁵⁾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王毅談半島核問題: 制裁是必要手段, 維穩是當務之急, 談判是根本之道,” 2016.03.08, <http://www.fmprc.gov.cn/web/wjdt_674879/wjbxw_674885/t1345891.shtml> (검색일: 2017.08.20.).

¹⁴⁶⁾ “中 왕이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 구체적 방안 도출할 것,” 『매일경제』, 2016.03.12.

적 국익을 위해 ‘평화협약’이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핵화와 연계하여서는 ‘평화협약’이 먼저 체결되거나 최소한 동시에 체결되어야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이 ‘쌍궈병행’을 제시하는 이유는 미국의 단호한 입장과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과 핵확산의 우려를 고려한다면, ‘평화협약’의 선제적 체결보다는 ‘비핵화’와 ‘평화협약’ 체결이라는 ‘쌍궈병행’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라. 통일

(1) 미국 입장

북핵 문제가 한반도의 주요 사안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을 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협력을 다지는 한편,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 한국의 주도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로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 냉전이 종식되면서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이라는 3단계의 평화적·점진적 통일을 공식 통일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1단계의 화해협력 단계에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이 험난한 현재 상황에서 한국 통일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지지와 동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은 현재까지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해 원칙적인 지지 입장을 약화시킨 바는 없다. 한국 주도의 통일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의심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망이 지속적으로 불투명해질 경우 미

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하나의 대안으로 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정권 교체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과 중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대안이 가능한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은 5월 24일 ‘코리아 임무 센터(Korea Mission Center)’를 신설하였고 이후 폼페오 CIA 국장은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소진했을 때 북한의 정권 교체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다양한 기회에 한 바 있다.

북한의 정권 교체 전략이 과연 가능한지, 정권 교체가 북한의 급변사태 및 한국 주도의 통일로 이어질지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상하기 매우 어렵다. 다만 미국은 현재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반적 전략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제적인 정책 대안의 하나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담론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중국 입장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찬성하지만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를 고려한다면 한반도에서 남북이 일정한 수준의 균형을 이루는 시나리오가 중국에 가장 바람직한 상황일 수 있다. 물론 건국 후 한국전쟁과 냉전 시기의 중국은 한반도에서 북한이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여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 국가가 되는 것을 지지했다.

냉전 후에도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를 준비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북한과 경제적으로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남북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하였다. 1992년 한국과의 수교 이후 중국은 1999년까지 북한과 단교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과는 경제 협력이 빠르게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다.

1992년 수교 이후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의 공식 입장은 평화(和平)

적이고 자주(自主)적인 통일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것이었다. 수교 이후 한중 국가정상들의 공동성명, 주요 언론 인터뷰와 발언들을 살펴보면 한반도 통일이 언급될 때마다 ‘평화적’인 통일은 항상 등장해왔다.

다른 한편으로 ‘자주적’인 통일은 수교 후 노태우, 김대중 정부 시기까지 공식적으로 한중 정상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꾸준히 언급되어 왔었다.¹⁴⁷⁾ 하지만 이후 공동성명에서는 ‘자주적’이란 표현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자주적’ 통일에 관한 논의는 중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나타났었다.¹⁴⁸⁾ 시진핑 지도부 등장 이후에도 한중 간의 공동성명에는 여전히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정상회담 후의 공동 기자회견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서울대 강연 등을 통해서 ‘자주적’인 통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모습은 ‘자주적’ 통일을 강조하며 통일 후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한미동맹을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으로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주적’ 통일을 중국과 같이 강조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중국은 이외에도 갑작스러운 김정은 체제의 붕괴로 인한 한국의 흡수 통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평화적인 교류에 의한 점진적인 통일을 원한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대외적인 공식 입장일 뿐이다. 중국이 가장 선호하는 한반도의 정세는 남북한의 평화공존으로 보인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국가 목표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동북아 지역에서 갈수록 높아지는 미일동맹과 중국 사이의 역내 전략적 경쟁 구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우선 무력과 흡수에 의한 통일은 예상 못한 혼란을 한반도는 물론 중국 동북 3성에까지 끼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한반도 주변에서

147) “...支持朝鮮半島南北雙方通過對話協商實現半島的自主、和平統一...;” 『新華網』, 1998.11.13.

148) 陳向陽, “中國對朝鮮半島統一政策淺析,” 『亞非縱橫』, 第5期(2012); 于迎麗, “中國周邊戰略與朝鮮半島統一前景,” 『遼東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15卷 第5期(2013).

의 혼란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인식한다. 설사 남북한 교류에 의한 점진적 평화통일이라 하더라도, 미국과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통일한국의 대미 외교적 편향성, 즉 한미동맹에 기반한 미국의 군사·안보적 영향력의 확대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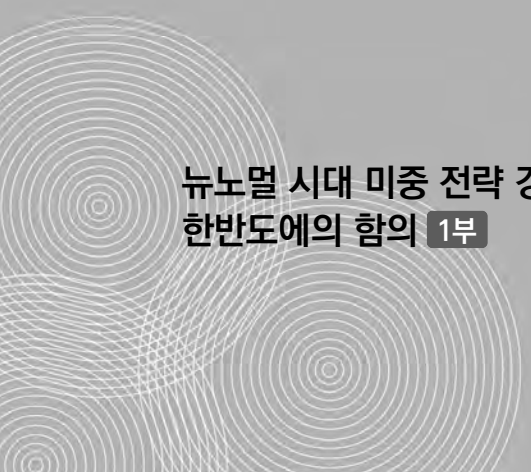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이 한반도 통일 관련 한국과 대화의 폭을 넓히고 한반도 통일에 반대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미일동맹과 중국의 경쟁적인 지역 구도를 감안한 한중관계의 전략적 협력 강화 필요성, 한국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 시기의 ‘통일대박론’과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증가, 김정은 체제의 정치, 경제적 모순과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등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역시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대비한 하나의 정책일 뿐 중국이 유지해온 남북한 균형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중국 내 일각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 동북 3성의 경제 발전의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고, 안정되고 비핵화된 한반도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 중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타났다.¹⁴⁹⁾ 하지만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점차 뚜렷해지면 동북 3성의 경제발전과 안정보다는 미국과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북한이 가지는 전략적 완충지대로서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

¹⁴⁹⁾ 대표적인 글로는 金景一·金強一, “朝鮮半島的地緣政治意義及其對我國的影響研究,”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4期 (2008); 진징이·진창이·삐야오인저,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IV. 미중관계의 쟁점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 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 **1부**

2010년대 미중관계는 경쟁과 협력이 반복되는 가운데, 경쟁이 더욱 증가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왔다. 주된 쟁점은 최근 양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북핵 문제를 비롯하여 남중국해 갈등,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같은 안보 이슈는 물론 국제경제 질서에 관한 문제까지 다방면의 사안들을 포괄한다. 이러한 쟁점들의 지리적 범위도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물론 지구적(global) 차원에 걸쳐 있다. 다차원적으로 갈등과 협력이 반복되는 뉴노멀 시대 미중관계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촉진하고 일상화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장은, 우선 앞에서 검토한 미중관계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양국이 가지는 입장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선 차원별 분석으로서 한반도, 동아시아, 범세계적 영역에서 전개되는 경쟁·갈등의 양상과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쟁점별 분석으로서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들과 상대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이슈들을 구분하여 비교·검토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쟁점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미중관계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한국의 대외관계 및 경제적 번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하고 전망한다.

1. 미중관계의 쟁점 평가

가. 차원별 분석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협력은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물론 지구적 수준에서 다차원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지구적 영역은 미중 간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우선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이슈는 테러리즘이다. 미중 양국이 공통으로 테러리즘을 중요한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예, 군사적 개입 여부) 등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안보 위협에 대한 공통의 인식은 갈등보다 타협과 협력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 변화는 지구적 영역에서 미국

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했으며, 향후 미중 간 기후 변화에 관한 협력 전망이 어두워졌다. 중국이 미국의 공백을 메우면서 기후 변화 관련 국제적 리더십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다.

지구적 경제 질서, 해양 질서, 그리고 인권 문제는 미중 간 입장 차이를 뚜렷하게 드러내며, 경쟁과 갈등을 촉진하는 이슈들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면서 보호무역 색채가 강한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시진핑 정부는 자유무역 질서 수호를 강조하면서 지구적 경제 질서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국제경제 측면에서 중국의 리더십/영향력 증대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해양 질서에 관한 양국의 입장 차이는 군사·안보적 경쟁을 반영하며,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권은 전통적으로 미중 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사안이며 갈등의 요인이지만, 대외정책에서 인권을 중요시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인권이 미중 간 갈등의 요인으로 부각되지 않을 수 있다.¹⁵⁰⁾

둘째, 동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이 가장 뚜렷하게 전개되는 지역이다. 남중국해, 대만, 사드와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에서 양국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동맹 체제와 다자안보협력을 둘러싼 이견도 분명하다. 이 쟁점들은 지역적 영향력 또는 지역 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그 경쟁은 오바마 행정부가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면서 더욱 심화되어왔다. 미국의 재균형의 핵심적 수단인 동맹 강

¹⁵⁰⁾ 트럼프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미국무장관은 2017년 5월 3일 국무부 전 직원 대상 연설에서 자유와 인권은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아니라고 표명했다. Rex W. Tillerson, "Remarks to U.S. Department of State Employees," U.S. Department of State, May 3, 2017, <<https://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7/05/270620.htm>> (검색일: 2017.07.08.).

화이며, 사드 배치도 중국 견제 목적을 포함한다.¹⁵¹⁾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개입도 중국의 팽창을 차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재균형에 대응하면서 남중국해, 사드 배치 등의 이슈에 비타협적 입장을 고수해왔고,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와 같은 다자안보협력 체제를 구축·강화하고,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면서 주변국과의 정치·경제적 협력을 강화해나갔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은 지역적 영향력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여왔다. 이러한 미중 간 경쟁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북)·중·러의 대립구도 형성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경쟁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다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서 동아시아 지역 질서 주도권 확보 및 관리에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갖지 않는 대신에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¹⁵²⁾ 이에 따라 북핵 문제가 미중 양국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의 공유는 양국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지만, 북핵 문제 해법에 관한 이견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예,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발동에 대한 중국의 반대). 향후 미중관계 그리고 동북아의 대립구도는 북핵 문제 진전/해결 여부와 밀접하게 상호 연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의 협력/타협 그리고 동북아 대립구도의 완화가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역으로 북핵 문제의 진전 또는 해결이 미중의 협력을 촉진하고 동북아 대립구도를 완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셋째,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국 그리고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¹⁵¹⁾ 김상기, “기로에 선 한반도: 2010년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전략,” 『한국정치학회보』, 제48권 5호 (2014), pp. 229~247.

¹⁵²⁾ 김상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7-12, 2017.05.24.), <http://kinu.or.kr/www/jsp/prg/report/report_view.jsp?menuIdx=351&category=000 CO&thisPage=1&contId=1478619> (검색일: 2017.08.01.).

적 경쟁이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공간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은 우선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에서 드러난다. 중국은 한미동맹을 냉전의 유산이자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도구로 인식한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미동맹이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 수단이라 강조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의미는 최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서도 잘 드러난다. 또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적인 한 가지 이유는 한미동맹의 역할과 의미 축소와 관련된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평화체제 구축에 소극적이며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입장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 모두 공식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자국의 영향력 혹은 이익이 침해되는 통일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평화체제 구축 또는 통일 이후 한반도가 중국에 경사될 가능성에 매우 유의하며, 중국은 통일 한반도가 미국의 영향권에 포함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 북부까지 진출하는 상황을 매우 경계한다.¹⁵³⁾

이와 같이 한반도는 미중 양국의 전략적 이익이 엇갈리는 영역이지만, 동시에 미중 간 타협과 협력의 동기를 유발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북미 간 갈등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군사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상황은 누구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평화협정 및 평화체제 논의에 대해서도 미국은 중국에 비해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그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세부적인 견해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의 공유 그리고 평화적 문제 해결을 선호하는 공통의 입장은 향후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미중 간 협력

¹⁵³⁾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인식 관련 상세한 설명은 다음 참조. 박종철 외, 『주요국의 한반도 통일연구 분석』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6).

이 증진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쟁점별 분석

미중 간 갈등과 협력을 촉진하는 이슈는 매우 광범하다. 전통적 안보 이슈로서 남중국해 갈등을 포함한 해양영토 문제, 대만 문제,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동아시아 동맹 체제와 다자안보협력 등이 있다. 비전통적 안보 이슈로서는 테러리즘과 기후 변화가 양국의 주요 관심사이다. 또한 국제경제 질서에 관한 인식과 정책 그리고 인권 문제도 양국 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어왔다.

양국 간 입장 차이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며, 갈등을 촉진하는 쟁점은 주로 전통적 안보와 관련된 이슈들이다. 특히 해양영토 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남중국해는 원래 중국이 베트남 및 필리핀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지역이었지만, 2010년대 중반에 이르러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이 서로 대립하는 핵심적 갈등 지역이 되었다. 미국이 1994년 발효된 「UNCLOS」에 근거하여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부인하는 반면, 중국은 「UNCLOS」가 발효되기 훨씬 전부터 역사적으로 남중국해가 자신이 관리해온 주권 영역임을 강조하면서, 2016년 7월 PCA의 중국 영유권 부인에 관한 판결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대립하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에 대한 미중 간 입장 차이도 뚜렷하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달리, 미국은 센카쿠 열도가 미일동맹 방위선 안에 포함된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주변 해역이 미중 간 갈등의 영역이 되는 이유는 이 지역이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팽창을 차단하고 지역패권을 구축·방어하기 위한 핵심공간이며, 중국에 있어서는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 투사 및 봉쇄를 막기 위한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는 표면적으로 국제법 해석 및 적용의 차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욱 중요한 미중 간 군사·안보 전략상 갈등에 속하는 사안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주변 해양영토와 관련한 미중 간 입장 차이는 향후에도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며, 양국 간 갈등을 촉진하는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사드와 미사일 방어체제도 남중국해 문제만큼이나 미중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며, 갈등의 주된 요인이다. 미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며, 따라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중국은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는 무기 체계이며, 따라서 즉각 철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특히 사드의 레이더(radar) 시스템이 중국의 군사력 동향을 탐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계 및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에 편입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¹⁵⁴⁾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북핵 위협을 사드 배치의 명분으로 강조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견제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때, 사드 배치 문제는 미중 간 전략 경쟁의 산물이며, 한반도가 그 경쟁의 한복판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드와 미사일 방어체계에 관한 미중 간의 타협은 매우 어려울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갈등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추진한 유럽 내 미사일 방어체계 확장이 러시아의 반발을 야기하고 미러관계가 악화된 점은 동북아시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해협도 미중 간 전략적 이해가 맞부딪히는 영역이다. 중국은 대만이 자신의 영토의 일부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며, 이는 양보 불가능한 ‘핵심이익’이다. 반면 미국의 입장은 일관되지 않으며, 종종 대만을 대중

¹⁵⁴⁾ 사드 관련 논쟁에 대해 다음 참조. 김동엽, “사드 한반도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과 한반도 미래,” 『국제정치논총』, 제57권 2호 (2017), pp. 291~327.

국 견제·압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 반면,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뒤 통상압박을 위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¹⁵⁵⁾ 2017년 6월 미국 의회는 미국 군함이 대만에 정박할 수 있도록 하고 대만의 군사 기술을 지원하는 법안을 가결했고, 7월 행정부는 대만에 미사일, 레이더, 어뢰 등을 포함한 대규모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했다. ‘하나의 중국’에 부정적인 대만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 그리고 무기 수출에 대한 관심이 크며 대중국 경제압박을 추진 중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에 그동안 잠복해있던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시아 동맹 체제 및 다자안보협력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은 견해차를 뚜렷하게 가진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미국 주도 패권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재균형 정책을 추진했고, 안보 측면 재균형을 위한 핵심적 방편은 동맹과 파트너십의 강화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일본·한국·필리핀·호주와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미·일·호 삼각협력을 추진하였으며, 베트남·미얀마·인도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중국은 미국의 재균형을 사실상 대중국 포위 전략으로 인식하였고, 미중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재균형의 퇴조에도 불구하고,¹⁵⁶⁾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 군사력 견제라는 목적을 함께 가진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비동맹 원칙을 견지하는 대신에 다자안보협력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CICA와 SCO가 핵심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중국

¹⁵⁵⁾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뒤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¹⁵⁶⁾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재균형 전략의 퇴조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폐기에서 잘 드러나며, 또한 동맹을 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에서도 드러난다.

은 미국과 일본은 배제하고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CICA를 아시아안보협력기구로 만들자고 공식 제안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항하는 대안적 안보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동맹 체제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며, 중국은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아시아 안보에서 자신의 주도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지역 안보 질서와 관련한 미중 양국의 전략적 경쟁 심화를 촉진해왔다.

전통적 안보 이슈는 아니지만, 인권 문제도 미중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이슈이다. 미국은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의 확산을 중요한 전략으로 간주해왔으며, 때로는 타 국가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목적 혹은 명분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중국도 예외적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미국이 중국 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비판하는 반면, 중국은 미국의 문제제기를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면서 맞대응해왔다. 이처럼 인권은 기본적으로 미중 간 갈등을 유발하는 이슈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인권 문제가 양국의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대국의 인권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은 분명한 입장 차이를 가지지만, 위에서 제시한 이슈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타협과 협력의 여지를 가진다. 우선 미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공유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국제평화를 위협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진다. 이 점이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관해서 양국이 타협점을 찾는 이유이다.¹⁵⁷⁾

¹⁵⁷⁾ 미국과 중국은 대북제재 수위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에 합의해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월 11일 유엔 안보리는 정유 제품의 대북 수출을 연간 200만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강조하는 초점은 다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제재와 압박에 방점을 찍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대화·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최근에는 군사 옵션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유엔 차원 제재에 동의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더욱 강조한다.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쌍잡정 그리고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는 쌍궤병행의 추진이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즉, 미국은 압박을 우선시하는 반면, 중국은 조속한 대화 재开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지속될지 또는 타협에 이를지 속단하기는 어려우며,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 중국은 분명한 지지 입장이다.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함께 논의하여 한반도 정전상태의 불안정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입장은 한반도 평화정착이 중국의 발전에 긍정적 환경이 되기 때문이며, 또한 평화협정 체결 없이 비핵화만 이루어지는 경우, 한미동맹 주도 한반도 통일로 연결되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은 중국에 비해서 분명하지 않다. 미국은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그러나 2016년 미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티러슨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 교체, 체제 붕괴, 통일 가속화, 38선을 넘는 북진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입장(4-No)을 분명히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향적 입장도 밝히고 있다.¹⁵⁸⁾ 따라서 북핵 문제 진전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에 합의했다.

¹⁵⁸⁾ Rex W. Tillerson, "Remarks to U.S. Department of State Employees."

체결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미중 간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통적 안보 이슈들에 비해서, 테러리즘과 기후 변화와 같은 비전통 안보 이슈들은 미중 간 입장 차이가 크지 않으며, 갈등보다 협력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탈냉전기 미국의 대외전략에서 테러리즘은 핵심적 안보위협으로 간주되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도 ISIS를 포함한 테러리즘의 제거를 핵심적 과제로 삼고 있다. 중국 역시 테러리즘 위협 해소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해왔다. 해외에서 자국민 보호 필요성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한족과 이민족 간 갈등으로 인해 테러리즘 위협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배경이다. 테러리즘 해소 및 방지는 미국과 중국이 공유하는 이익이며,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이슈라 볼 수 있다.

기후 변화도 미중 간 견해 차이가 크지 않은 이슈이지만, 미국 집권세력의 입장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국제협력을 통한 대응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았으며,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을 주도하였다.¹⁵⁹⁾ 미국과 더불어 양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중국이 국내적으로 스모그를 포함한 공해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도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에 관한 미중 간 협력의 중요한 배경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기후 변화 문제보다 자국 산업 부흥을 더욱 중요한 과제로 인식함에 따라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였다. 반면 중국은 유럽과 더불어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 레짐(regime)에서 중국의 리더십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양국 협력의 전망은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국제경제 질서 관련 양국의 쟁점은 주도권 경쟁에서 경제 질서 자체에

¹⁵⁹⁾ 김보람·안세현, “오바마 기후 변화 정책의 국제정치경제적 메커니즘: 미국의 환경·에너지정치와 파리기후 변화협약과의 연관성 분석,” 『동서연구』, 제28권 3호 (2016), pp. 95~124.

대한 이견으로 옮겨가고 있는 형국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국은 TPP를 체결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이에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를 추진하면서 경제적 영향력 및 주도력 확장을 추구하고, AIIB를 창립하여 미국 주도 금융질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처럼 국제경제 질서 주도권을 중심으로 전개된 미중 간 경쟁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다른 양상으로 전환되었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TPP를 폐기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과 「한미 FTA」도 재협상 또는 폐기를 주장하며, 중국, 한국, 일본 등에 양자적 통상압박을 가하는 등 중상주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유무역질서를 지지하면서, 2017년 5월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그리고 9월 BRICS(Brazil·Russia·India·China·South Africa) 정상회의에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보이면서 자국 이익을 강조하는 동안, 시진핑 정부는 미국과 달리 자유무역 수호를 강조하면서 국제경제적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대외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으로 요약된다. 이 목표의 달성은 미중관계가 협력의 방향으로 전개될 것을 요구하지만, 현실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미중 간에 입장 차이가 뚜렷한 다양한 쟁점들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다차원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미중관계의 쟁점, 경쟁과 협력의 반복, 그리고 경쟁 심화의 추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미중관계의 영향을,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 가능성 측면, 둘째 한국의

대외관계 및 경제적 번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전망한다.

미중관계는 오바마-시진핑 정부 시기에 접어들어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추진과 그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으로 경쟁이 더욱 촉진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국제정치 및 경제 질서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상했다. 또한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 대외전략이 추진되고, 북핵 문제가 미국 대외관계의 최우선적 정책과제로 다루어지게 됨에 따라 미중관계와 한반도는 과거와는 또 다른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따라서 우선 오바마-시진핑 정부 시기 미중관계의 쟁점들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평가한 이후, 트럼프-시진핑 정부 시기 미중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고자 한다.

가.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의 전망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대립성이 약화되고 안정성이 증진될 때 그리고 북핵 문제가 진전되거나 해결되고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가 이루어질 때 밝아질 수 있다. 따라서 미중관계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은 동아시아 국제질서 및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측면에서 분석될 것이며, 그 분석에 따른 전망이 제시된다.

(1) 오바마-시진핑 시기

2010년대 초·중반 미중관계는 미국의 재균형 전략 추진과 중국의 맞대응으로 인한 경쟁의 심화로 특징지어진다. 2000년대 미국은 중동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중동의 불안정은 해소되지 않고 군사적 과팽창 문제가 불거졌으며 2008년에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¹⁶⁰⁾ 그 사이에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2010년에

¹⁶⁰⁾ 김상기, “기로에 선 한반도: 2010년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전략,” pp. 229~247.

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였고 국방예산을 연 10% 이상 증가시키는 등 군사력 증강에도 나서면서 동아시아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시켜나갔다.¹⁶¹⁾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된 것이 미국의 재균형 전략이다. 미국은 2011년 말 대외정책의 주 무대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옮긴다는 재균형 전략을 발표했고, 주된 목적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 주도의 패권질서를 구축·방어하는 것이었다.¹⁶²⁾ 이에 중국은 한편으로는 신형대국관계 수립을 주장하고 미국과 협력을 도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공유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이익들에 대해 비타협적 혹은 공세적 대응을 추진해나갔다. 미국의 동맹 강화, 중국의 다자안보협력 강화, 남중국해 문제, 사드 배치 문제 등이 모두 오바마-시진핑 시기 미중관계의 핵심적 쟁점으로 부상한 이슈들이다.

이와 같은 쟁점들을 둘러싼 미중관계는 협력보다는 경쟁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그에 따라 발생한 결과는 한·미·일 대 중러의 지역적 대립구도 형성과 동아시아 질서의 불안정성 증대였다.¹⁶³⁾ 우선 미국의 재균형의 핵심 수단인 동맹 강화와 중국이 추진한 다자안보협력의 상호 경쟁이 지역적 대립 축진의 중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은 재균형을 위해 미일동맹과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을 비롯한 동맹 체제의 강화를 적극 추진했다. 오바마는 2014년 4월 일본 방문 시 집단적자위권 확보 및 군사력 증강을 지지했으며, 또한 한·미·일 삼각협력 차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지원했고, 필리핀 내 미군

¹⁶¹⁾ 박창희, “중국의 군사력 증강 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전략연구』, 제57권 (2013), pp. 237~270; 황재호,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군사력 평가와 전망,” 『전략연구』, 제62권 (2014), pp. 5~33.

¹⁶²⁾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박건영, “오바마의 주판과 긴 파장?: 재균형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3호 (2013), pp. 1~47; 이호철, “중국의 부상과 지정학의 귀환,” pp. 39~61.

¹⁶³⁾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저, 『동아시아 질서 변화와 한반도 미래』 (서울: 선인, 2015).

기지 재가동 및 미·일·호 삼각전략대화도 추진했다.¹⁶⁴⁾ 베트남, 미얀마, 인도 등 중국 접경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도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 확대 차단이라는 목적을 내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중국은 다자안보협력 강화로 대응했다. 중국의 다자안보협력은 CICA 및 SCO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CICA의 강화는 아시아 안보 질서에서 중국의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 방편이었다. 2014년 5월 시진핑은 (미국을 배제한) CICA를 아시아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하면서 아시아의 안보를 아시아인들이 책임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일대일로 구상도 국내경제적 배경 이외에 아세안, 인도,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견제와 포위를 극복하고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전략적 의미를 담은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재균형과 중국의 대응은 한·미·일 협력과 중러의 협력을 각각 촉진함과 더불어 양자 간 대립구도 형성을 야기했고, 아시아 지역 질서에서 대립과 경쟁의 심화를 촉진했다고 볼 수 있다.¹⁶⁵⁾

사드와 해양영토 문제는 지역적 대립과 불안정성을 더욱 증폭시켰다. 2014년 6월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의 한국 배치 필요성을 제기한 이래 미국은 북핵 위협이라는 명분을 강조했다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며 자신의 안보를 위협하는 무기 체계로 인식했으며, 특히 중국은 한국에 경제적 보복조치를 단행했다.¹⁶⁶⁾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미·일 대 중러의 대립은 더욱 촉진되었고, 특히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사실상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시진핑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인공섬을 건설하는 사이, 오바

164) 김상기, “기रो에 선 한반도: 2010년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전략.”

165)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동아시아 질서 변화와 한반도 미래』.

166) 김동엽, “사드 한반도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과 한반도 미래.”

마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고 일본, 필리핀, 호주와 함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고,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이 고조되었다. 동중국해에 위치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미일동맹과 중국의 갈등도 동아시아의 지역적 불안정을 증폭시켰다.

미국의 재균형과 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지역적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동안, 북핵 문제의 해결은 미중의 우선적 정책 과제가 아니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최우선적 목표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주도의 지역 질서를 구축·방어하는 것이었으며,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대북정책은 재균형 전략의 하위에 속하는 것이었다. 전략적 인내는 제재를 가하면서 북한의 입장 변화를 기다린다는 것으로서, 북한 붕괴에 대한 기대를 내포하는 정책이었다.¹⁶⁷⁾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적극적이지 않았고, 북한의 핵 개발은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강화 및 사드 배치 명분으로 활용되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를 용이하게 하였다.¹⁶⁸⁾ 중국은 동아시아 전략의 초점을 미국의 재균형에 대한 대응에 맞추고 북핵 문제를 북미 간의 문제로 인식하는 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정책 추진은 부족했다.

오바마 정부와 시진핑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공유하면서도 문제 해결 방

¹⁶⁷⁾ 북핵 문제를 자주 거론하지 않았던 오바마는 2015년 유튜브(YouTube)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 국가안보위원회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역임한 제프리 베이더(Jeffrey A. Bader)는 “우리(백악관 인사들) 중 다수는 장기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북핵 문제 해법은 북한의 붕괴와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이라고 믿었다”고 회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참조. “The YouTube Interview with President Obama.” (January 22, 2015), <<https://www.youtube.com/watch?v=GbR6iQ62v9k>> (검색일: 2017.09.18.); Jeffrey Bader, *Obama and China's Rise: An Insider's Account of America's Asia Strateg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1), p. 92; Jong Kun Choi, “The Perils of Strategic Patience with North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Winter 2016).

¹⁶⁸⁾ 김상기, “기로에 선 한반도: 2010년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전략.”

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졌다는 점에서 양자 간 협력과 갈등의 요인이 동시에 존재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갈등은 심각하지 않았고 협력이 있었지만 그 수준은 높지 않았다. 협력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합의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고, 그 합의는 북한 비핵화 관련 실질적 성과를 낳지 못했다.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추구하고 중국도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는 동안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2016년까지 세 차례의 추가 핵실험과 약 70여 차례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단행하면서 핵·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켰다.¹⁶⁹⁾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신장은 한반도 긴장 고조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단절로 이어졌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은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하고 북한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강화했으며, 그 이후 남북관계는 전면적 단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지속에 따른 대북제재 국제공조의 강화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구조적 제약조건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오바마-시진핑 시기 동맹 체제, 다자안보협력, 남중국해, 사드 배치, 북핵 문제 등의 쟁점들을 둘러싸고 전개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은 그 자체로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을 증대하고 또한 한·미·일 대 중리의 지역적 대립구도의 형성을 촉진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역적 협력의 가능성을 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미중 양국이 북핵 문제 해결보다 지역 질서를 둘러싼 전략적 경쟁에 더욱 몰두하는 동안, 북핵 문제는 악화되었고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었으며 남북관계는 단절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북핵 문제 악화 및 한반도 긴장고조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하나의 배경

¹⁶⁹⁾ 홍민,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KINU Insight』, no. 1 (2017), p. 33.

적 요인으로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 트럼프-시진핑 시기

2016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당선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면서 미국 대외전략의 변화를 야기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 재균형 전략은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주의 패권전략의 일환으로서,¹⁷⁰⁾ 주된 목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팽창을 차단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면서 미국 주도의 패권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동맹 체제와 파트너십의 강화 그리고 TPP를 통한 자유무역질서의 수립은 재균형의 핵심 방편이었고, 인권의 증진도 중요한 과제였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국제적 리더십을 증진하고 패권질서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미국 자신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의 증진을 우선시하는 전략으로서, 미국의 과거 동맹정책 및 무역정책이 미국 자신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인식한다.¹⁷¹⁾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주도 지역 질서의 구축이 미국의 이익으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면서, 동맹도 때로는 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중상주의적 무역정책을 추구하며 다자협력에는 큰 관심이 없고 인권은 대외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고 밝힌다.¹⁷²⁾

¹⁷⁰⁾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전략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 참조. G. John Ikenberry, *Liberal Leviathan: The Origins, Crisis, and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World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Barry R. Posen, *Restraint: A New Foundation for U.S. Grand Strateg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4); 김상기, “미국의 대안적 대전략: 자제?” 『KINU 통일플러스』, 제1권 4호 (2015), pp. 63~77.

¹⁷¹⁾ 이혜정, “어떻게 불구국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 미국 우선주의, 백인 우선주의, 그리고 트럼프 우선주의,” 『동향과 전망』, 제99권 (2017), pp. 9~50; 김상기, “트럼프 시대 미국 대전략의 전환과 동아시아·한반도 정세 변화,”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7-03, 2017.01.25.), <http://kinu.or.kr/www/jsp/prg/report/report_view.jsp?menuIdx=351&category=000 CO&thisPage=1&contId=1478095> (검색일: 2017.08.10.).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위와 같은 미국 대외전략의 변화가 미중관계의 쟁점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즉, 오바마-시진핑 시기 미국의 재균형 전략이 미중관계의 여러 쟁점적 의제들의 부상을 추동했듯이, 트럼프-시진핑 시기 미국 우선주의 대외전략이 미중관계의 주요 쟁점의 우선순위, 특성, 혹은 내용을 변화시키고 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북핵 문제가 미중관계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주로 기인하지만,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미국의 전략 변화와도 관계된다.

미국이 당면 안보 위협인 북핵 문제의 해결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는 동안, 패권 또는 지역 안보 질서 주도권과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남중국해 문제는 미중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의 쟁점이 되었다. 2017년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안보 의제는 남중국해가 아닌 북핵 문제였다. 미중 간 또 다른 쟁점인 동맹 체제와 사드 배치 문제도 북핵 문제와의 연계성이 더욱 강해졌다. 즉, 동맹과 사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유의하는 미국에 있어서 여전히 중국 견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미중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오바마 시기에 비해서 북핵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해졌다. 오바마-시진핑 시기 미중 갈등의 요인이었던 인권 문제는 트럼프-시진핑 시기에는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정책에서 인권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만 문제도 트럼프 취임 이후 시진핑과의 전화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언급한 이후 미중 간 갈등을 촉진하는 이슈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북핵 문제가 미중관계의 핵심적 의제로 다루어지는 동안, 문제 해결을 둘러싼 양자 간 갈등과 협력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실패로 규정하

172) 김상기, “트럼프 시대 미국 대전략의 전환과 동아시아·한반도 정세 변화.”

고,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명명된 대북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경제·군사·외교적 측면에서 북한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입장을 변화시켜 협상을 통해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¹⁷³⁾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수단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강조하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하면서 대북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북한 대외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은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중국을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¹⁷⁴⁾

반면 중국은 대북제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북핵 문제를 중국의 책임이 아닌 북미 간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는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또한 군사적 해법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중국의 입장은 앞서 언급했듯이 쌍중점을 통해 협상의 물꼬를 트고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는 쌍궤병행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북압박 강화를 통해 북한의 입장변화를 먼저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 조속한 대화·협상의 추진에 방점을 찍는 중국의 입장이 맞부딪히는 동안, 양자 간에 타협이 있었으며, 그 타협의 결과는 2017년에 유엔 안보리에서 합의된 세 차례의 대북제재 결의안이다(2356호, 2371호, 2375호). 이 결의안들은 기존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로서 북한의 철광석 및 석탄 수출 전면금지, 북한산 섬유제품 수출 금지, 정유제품의 대북 수출 200만 배럴 제한, 북한 해외 노동자 신규 허가 금지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트럼프-시진핑 시기 대북제재 강화를 중심으로 전개된 미중 간

173) 김상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

174) “美재무 “유엔제재 안 따르면 中 제재…달러시스템서 배제”, 『연합뉴스』, 2017.09.1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2/0200000000AKR20170912201451071.HTML>> (검색일: 2017.09.25.).

협력은 적어도 2017년 10월 현재까지는 실질적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고, 남북관계도 단절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2017년 한 해 동안(2017년 10월 현재) ICBM 2회 실험을 포함하여 총 15회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과 1회의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추진했다.¹⁷⁵⁾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트럼프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과 이에 대한金正은의 ‘초강경 대응 고려’ 관련 직접 성명 발표 등 북미 간 ‘말폭탄’ 교환이 잦아지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제적 입장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10월 2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핵 비확산 회의에서 최설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은 “미국이 핵을 가진 조선과 공존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한 조선의 핵무기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¹⁷⁶⁾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베를린 구상 발표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교류 협력 및 군사분계선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한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비판하고 자신의 대화상대는 미국이라고 밝히면서 남북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진전은 한·미·일 대 중·러의 지역적 대립 구도 형성을 더욱 촉진했다. 북핵 문제 악화는 사드의 한국 배치 현실화를 촉진하여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6기의 임시 배치가 완료되었으며,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은 북핵 문제 대응을 강조하면서 이례적으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강화의 내용을 담았으며, 곧이어 개최된 G20 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은 대북제재, 압박 강화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과 달리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쌍잡정·

175) 홍민,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p. 33.

176) “北최설희 “핵무기 대상 협상 안해…美, 북조선 핵지위 수용해야”, 『연합뉴스』, 2017. 10.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0/0200000000AKR20171020191652080.HTML>> (검색일: 2017.10.23.).

쌍궤병행 해법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삼기로 합의하였고,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함께 천명하였다. 결국, 트럼프-시진핑 정부 시기 북핵 문제가 미중 간 최대의 안보 이슈로 부상했지만, 북핵 문제, 남북관계, 지역적 대립의 수준 등 다방면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도 트럼프-시진핑 정부 시기 미중 간 최대 쟁점은 북핵 문제가 될 것이며, 남중국해는 후순위 쟁점으로 남고, 동맹, 사드 등의 이슈는 북핵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간 쟁점이 되는 의제는 주로 미국의 전략에 중국이 반응하면서 설정되어왔고, 트럼프 행정부가 동아시아에서 최우선적 안보 과제로 삼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시진핑 시기 향후 한반도 평화정착의 전망은 북핵 문제의 향방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진전되거나 해결될 때, 동맹, 사드, 한반도 평화체제를 비롯한 미중 간 쟁점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예를 들어, 북핵 문제의 진전 또는 해결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축소 또는 성격 조정, 사드 배치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등에 대해 타협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즉, 트럼프-시진핑 시기 안보 측면에서 미중관계의 가장 핵심적 의제가 북핵 문제라는 점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관한 미중 간 협력이 대북제재 공조에 그칠 때 공조 자체의 한계도 분명하며 한반도 평화의 전망도 밝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은 그동안 제재·압박 강화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왔으며 비핵화가 협상의 의제가 아님을 일관되게 표명해왔다. 또한 대북원유 공급 차단과 같은 강도 높은 제재에 미중이 합의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중국은 북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제재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유엔 대사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안 통과 이후 “유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거의 소진됐다”고 지적하였다.¹⁷⁷⁾ 미국이 대북제재, 압박 일변도 정책을 지속할 때 북핵 문제에 관한 미중 간 협력은 한계가 뚜렷할 것이며, 북핵 문제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한반도 평화정착 전망은 어두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가능성은 중국이 제안하는 쌍잠정 혹은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화·협상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미중이 공감대를 이루고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결을 추진하는 시나리오이다. 이 방법은 물론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제재·압박 일변도 방식보다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압박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고 밝혀왔으며, 적절한 조건에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 적절한 조건의 내용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며,¹⁷⁸⁾ 이 조건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비해서 뚜렷하게 완화된 것이다.¹⁷⁹⁾ 이 조건은 북한이 2014년 말부터 제기해왔고 중국과 러시아가 지지하고 있는 쌍잠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비핵화 의지 표명 없이도 북한이 먼저 핵·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또는 미국과 한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 축소 혹은 중단할 때, 상호적 반응을 유발하면서 협상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화·협상 시작 조건과 더불어 협상 의제도 중요한 논쟁적 사안이다. 미국은 비핵화 대화를 추구하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협상 의제로 삼는 것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핵 동결(freezing)과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을 협상 의제로 삼는 것이 현실적 방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¹⁸⁰⁾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을

177) 『중앙일보』, 2017.09.18.

178) 킬러슨 미 국무장관은 2017년 8월 6일 아세안지역포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대화를 위한 적절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Reuters*, August 7, 2017.

179) 오바마 2기 행정부 시기 대북 대화의 사전 조건은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를 포함한 북한의 핵 동결이었다.

180) 최근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핵 동결 협상론 또는 북핵 제한적 인정론이 대두되고

이론다면, 그 자체만 가지고서도 미국 본토 위협을 해소하는 중요한 성과 일 수 있으며, 북한으로서도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¹⁸¹⁾ 핵 동결을 시작으로 북미 간 관계정상화를 도모하면서 비핵화를 지향하는 단계적 방법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을 동시에 추구할 때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나. 한국의 대외관계와 경제적 번영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협력은 한반도의 평화정착 가능성뿐만 아니라, 최근 한중관계 악화에서 뚜렷하게 보이듯이 한국의 대외관계를 변화시키면서 경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의 대외관계와 경제 측면에서 오바마-시진핑 정부 시기 각종 쟁점들을 둘러싸고 전개된 미중관계의 영향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의 영향을 분석·전망하고자 한다.

(1) 오바마-시진핑 시기

미중관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전략 추진 이후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미중 간 경쟁으로 한국의 대외관계에 나타난 중요한 결과로 우선 한국 외교의 한미동맹 중심주의 강화 및 한·미·일 삼각협력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이 결과는 물론 북핵 위협의 증가와도 관련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의 주된 목표는 중국의 지역적 팽창을 억제하고 미국 주도 패권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한 핵심적 방편이 동맹의 강화와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의 증진이었다. 북핵 문제는 오바

있다. Richard N. Haass, "Where to Go From Here: Rebooting American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June/August 2017).

¹⁸¹⁾ 김상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

마 행정부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미국은 전략적 이익의 증진을 위해 한국의 대외관계를 자신에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한 시도를 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고위 관료들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2013년 12월 방한한 미 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미국의 반대편에 베티하는 것은 좋은 베티가 아니다”라고 한 바 있으며,¹⁸²⁾ 이 발언은 한국의 대중국 경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침과 더불어 한국이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 국무부 차관은 2015년 3월 미국 카네기 재단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에서 위안부 문제 관련 한국의 대일 정책을 민족주의에 기대어 값싼 박수를 얻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고 비판하면서, 한·중·일 과거사 갈등은 3국 모두의 책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¹⁸³⁾ 이 발언은 과거사 문제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가 한·미·일 삼각협력을 증시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결국 오바마-시진핑 시기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동맹 체제와 사드 배치라는 쟁점을 둘러싸고 증폭되면서 한국의 대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이 한국의 대미·대중 외교의 중요한 변수령이 되었는데, 이 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한 것이었으나, 중국에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합류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삼각협력에 동참하면서, 2015년 12월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합의하고 2016년 11월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한일 간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 채 봉

182) “바이든 “美 반대편에 베티 인종아·美는 한국에 베티”, 『연합뉴스』, 2013.12.06.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12/06/0501000000AKR20131206102051001.HTML>> (검색일: 2017.07.17.); 김상기, “기로에 선 한반도: 2010년대 미중 관계 변화와 한국의 전략.”

183) 『연합뉴스TV』, 2015.03.02.

합되었다. 한국 외교에서 한미동맹 중심주의가 강화되고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이 증진되는 사이에 한중관계가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한러관계도 소원해지게 되었다. 한러관계의 위축은 한국이 한미동맹 중심 외교를 펼치는 동안 한러관계가 미러관계 악화와 동조화되었기 때문이며, 사드 배치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도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¹⁸⁴⁾

한중관계 악화는 한국 경제에 뚜렷한 손실을 초래했다.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보복이 본격화되었다. 우선 『환구시보(環球時報)』, 『인민일보』 같은 중국의 관영매체들이 한국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내는 가운데 중국인들 사이에 반한 감정과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었다.¹⁸⁵⁾ 또한, 중국 정부는 전면에서 보복조치를 공식화하지는 않으면서도 한국 기업의 중국 활동에 ‘합법적’ 절차와 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중국의 개인 및 기업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 한국 기업에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가했다.¹⁸⁶⁾ 경제보복의 결과는 광범위하다. 중국 내 한류의 위축,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입국 급감, 중국 내 한국 유통업체의 매출 감소, 그리고 화장품,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제품의 중국 판매 감소 등이 현실화되었다.

한러관계의 위축도 한국의 경제적 번영 전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러관계의 위축은 2013년 11월 푸틴의 방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모스크바 답방이 없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푸틴 방한 시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지만, 그 이후 양국 간 협력은 오히려 축소되었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은 유명무실해졌다.¹⁸⁷⁾ 특히 박근혜 정부의 주요 대외정책 중 하나였으며 경제적 기회 증

184) 현승수, “새 정부의 대러정책: 새로운 한러 협력을 위한 제언,” 『한반도포커스』, 제39호 (2017), pp. 33~40.

185) 유현정·주재우,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보복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5권 2호 (2017), pp. 167~186.

186) 위의 글, pp. 167~186.

187) 현승수, “새 정부의 대러정책: 새로운 한러 협력을 위한 제언.”

진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에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경색뿐만 아니라 한러관계의 위축도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북방 진출을 한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전기로 삼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다. 그러나 한국이 한미동맹 중심의 외교정책을 펼치고 사드를 배치하면서 한러관계가 소원해지는 동안, 한국 경제의 영역을 북방으로 확대하고자 했던 정책은 실제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2) 트럼프-시진핑 시기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바마-시진핑 정부 시기 미중관계가 한국의 대외 관계 및 경제에 미친 영향은 주로 동맹 체제와 사드 배치 문제와 같은 안보 이슈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트럼프-시진핑 시기에는 안보와 관련된 미중 간 쟁점들이 주로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이슈화되면서 한국의 대외 관계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경제적 영역에서의 미중 간 쟁점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 체제와 미사일 방어체계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견제를 넘어서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 팽창을 차단하고 미국 패권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지역 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에 큰 관심을 갖지 않으며, 북핵 문제가 미중관계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는 동안, 미국의 동맹과 사드 배치는 북핵 문제와의 연계성이 더욱 뚜렷해졌다. 즉,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과 사드 배치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대응으로서 여전히 의미를 갖기는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비해서 지역패권질서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서의 의미는 상당히 약화되었고, 대북압박, 억지, 방어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시진핑 시기 미중관계에서 동맹 체제와 사드 배치의 의미가 이전에 비해 북핵 문제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지만, 그 쟁점들이 한국의 대외관계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과 유사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가에 따라 한국의 한미동맹 중심 외교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며, 한·미·일 삼각안보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2017년 7월 북한의 ICBM 발사 실험 이후 사드 발사대 6기의 임시배치도 완료되었다. 한국 외교의 한미동맹 중심주의가 지속되고 사드가 배치되는 동안, 한중관계는 악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사드 보복으로 인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0.5%에서 최대 1%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¹⁸⁸⁾ 러시아와의 협력도 아직 분명한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여 푸틴 대통령과 한러 경제협력 증진에 대해 논의했지만,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확인하기도 했으며, 아직 한러관계 개선을 위한 뚜렷한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트럼프-시진핑 시기 미중 간 경제적 노선 차이도 한국의 대외관계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오바마-시진핑 시기 미국과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질서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였지만(예, TPP vs. RCEP), 그 경쟁은 한국의 대외관계 및 경제적 기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시진핑 시기 새롭게 부상한 대외경제정책 관련 양자 간 쟁점은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 시진핑 정부가 한국과 유사하게 자유무역 질서를 추구하는 반면,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에 가까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가 미국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대통령 취임 후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또는 폐기할 것이라고 공

¹⁸⁸⁾ 『세계일보』, 2017.03.08.

언해왔다. 2017년 10월 현재 한국과 미국은 FTA 재협상에 관해 논의 중이다. 재협상이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점에서 한국보다는 미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는 한미 FTA가 폐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미동맹 혹은 한미관계의 상대적 이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내에서 대미인식이 악화될 수 있으며 또한 이명박-오바마 정부 시기 이후 안보, 경제, 그리고 공통의 가치 측면에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천명했던 한미관계의 한 축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그 자체만으로는 한중관계의 상대적 증진을 촉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이슈화되는 미중 간 안보 쟁점들이(예, 동맹, 사드) 한중관계의 우선적 걸림돌이 됨으로 인해서 한중관계의 회복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향후 한국의 대외관계 및 경제적 기회에 관한 전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북핵 문제가 될 것 같다. 북핵 문제가 뚜렷하게 진전되거나 또는 해결될 때 한국의 외교정책이 한미동맹 우선주의에서 탈피하여 보다 균형적인 대외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증진될 것이며, 한중관계의 복원 그리고 한러관계의 개선의 전망도 더욱 밝아질 수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도 북핵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한·미·중 간 타협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예, 북핵 위협 해소에 따른 사드 철수). 주변국 외교에 있어서 어느 일방에 편중된 정책이 아닌 균형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때 한국의 경제적 번영의 기회는 더욱 증진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북핵 문제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의 대외관계는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경제적 기회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북핵 문제, 동맹, 사드의 도전을 우회하여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시도는 필요하지만, 성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한국 대외정책의 최우선적 과제인 이유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저. 『동아시아 질서 변화와 한반도 미래』. 서울: 선인, 2015.
- 박종철 외. 『주요국의 한반도 통일연구 분석』.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6.
- 세이시엔 지음. 정재남 옮김. 『신중국 외교이론과 원칙』.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5.
- 세이시엔 지음. 한인희 옮김. 『중국외교사』. 서울: 지영사, 2000.
- 전병곤 외. 『한·중·일 간 외교안보협력관계 비교분석과 전망(2015년 한·중·일 역학관계 대응 종합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정재호 엮음. 『미·중 관계 연구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퍼트리샤 오언스 편저. 하영선 외 옮김. 『세계 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5.
- 해리 하딩 지음. 안인해 옮김. 『중국과 미국』. 서울: 나남출판, 1995.
- Bader, Jeffrey. *Obama and China's Rise: An Insider's Account of America's Asia Strateg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1.
- Foot, Rosemary. *The Practice of Power: US Relations with China since 194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Harding, Harry. *A Fragil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1972*.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
- He, Jianwu, Li Shantong and Sandra Polaski, *China's Economic Prospects: 2006-2020*. Washington, D.C.: Carnegi Endowment, April 2007.
- Ikenberry, G. John. *Liberal Leviathan: The Origins, Crisis, and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World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 Keohane, Robert.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Keohane, Robert and Joseph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3rd edition. Longman: New York, 2001.
- Lum, Thomas *Human Rights in China and U.S. Policy: Issues for the 114th Congres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eptember 17, 2015.
-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1.
- Monteiro, Nuno P. *Theory of Unipolar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 Posen, Barry R. *Restraint: A New Foundation for U.S. Grand Strateg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4.
- Russett, Bruce and John Oneal. *Triangulating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w York: W.W.Norton & Company, 2001.
- Waltz, Kenneth N. *Man, the State, an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 _____.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 Wesley, 1979.
- Zhao, Suisheng. *China-U.S. Relations Transformed: perspectives and strategic interact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8.

劉華清. 『劉華清軍事文選(上卷)』. 北京: 解放軍出版社, 2008.

_____. 『劉華清回顧錄』. 北京: 解放軍出版社, 2005.

閻學通. 『歷史的慣性: 未來十年的中國與世界』. 北京: 中信出版社, 2013.

2. 논문

- 김동엽. “사드 한반도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과 한반도 미래.” 『국제정치논총』. 제57권 2호, 2017.
- 김동욱. “남사군도를 둘러싼 관련국의 대응과 그 해결방안.” 『영도해양연구』. 제3권, 2012.
- 김보람·안세현. “오바마 기후 변화 정책의 국제정치경제적 메커니즘: 미국의 환경·에너지정치와 파리기후 변화협약과의 연관성 분석.” 『동서연구』. 제28권 3호, 2016
- 김상기. “기로에 선 한반도: 2010년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전략.” 『한국정치학회보』. 제48권 5호, 2014.
- _____. “미국의 대안적 대전략: 자제?” 『KINU 통일플러스』. 제1권 4호, 2015.
- 김상배. “사이버 안보의 주변4망(網)과 한국.” 『국제정치논총』. 제57권 1호, 2017.
- 김옥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정치·경제적 함의: 실크로드 경제 벨트 구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18권 1호, 2015.
- 김재철. “세계금융위기와 중국의 대미정책.” 『中蘇研究』. 제34권 2호, 2010.
- 김태성·김현승.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전략 분석 및 영향.” 『동북아연구』. 제31권 1호, 2016.
- 김한권. “2014 양회 이후의 중국 대(對)내·외 정책 분석과 함의.”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4-11, 2014.03.28.
- _____. “4차 핵실험과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고민.” 『KDI 북한 경제리뷰』. 2016년 2월호.
- _____.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02, 2016.
- _____. “중국의 주변국 정책과 한국: 한중동맹론 등장 의미.” 『성균차이나포커스』. 제15호, 2014.11.01.
- 박건영. “오바마의 주판과 긴 파장?: 재균형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3호, 2013.
- 박창희. “중국의 군사력 증강 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전략연구』. 제57권, 2013.
- 박홍서. “중국의 부상과 국제관계이론: 중국위협에 관한 이론적 시각.” 김태호 외. 『중국의외교연구의 새로운 영역』. 파주: 나남, 2008.

- 아산정책연구원. “뉴노멀’의 시대.” 『2016 아산 국제정세 전망』.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5.
- 유다형. “2015년 상반기 중국경제 주요 현황 2.” 『인천발전연구원 최신중국동향』. 제164권, 2015.
- 유현정·주재우.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보복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5권 2호, 2017.
- 이영학. “중국의 주변국 외교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의.” 『IN China Brief』. vol. 289, 2015.
- 이혜정. “어떻게 불구국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 미국 우선주의, 백인 우선주의, 그리고 트럼프 우선주의.” 『동향과 전망』. 제99권, 2017.
- 이호철. “중국의 부상과 지정학의 귀환.” 『한국과 국제정치』. 제33권 1호, 2017.
- 전병곤. “중국의 동북지역개발과 한중협력 구상.” 『중국학연구』. 제54집, 2010.
- 전재성. “국제환경 변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영향.” 신중호 외.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정갑용.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9단선’의 합법성 검토.” 『독도연구』. 제16권, 2014.
- 정구연. “긴장국면의 남중국해: 미국의 남중국해 분쟁 접근법과 전망.” 『성균차이나브리프』. 제4권 1호, 2016.
- 최원기.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후속협상 평가와 전망: 2017년 5월 협상회의를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2, 2017.06.12.
- 하도형. “중국 해양전략의 양면성과 공세성: 국가정책적 추진 목표 및 방식과 현황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5권 4호, 2015.
- 현승수. “새 정부의 대러정책: 새로운 한러 협력을 위한 제언.” 『한반도포커스』. 제39호, 2017.
- 홍민.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KINU Insight』. no. 1, 2017
- 황재호.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군사력 평가와 전망.” 『전략연구』. 제62권, 2014.
- Choi, Jong Kun. “The Perils of Strategic Patience with North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Winter 2016.
- Christensen, Thomas J. “China, US-Japan Alliance and the Security

- Delemma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4. spring 1999.
- Friedberg, Aron L.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2. 2005.
- Haass, Richard N. “Where to Go From Here: Rebooting American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June/August 2017.
- Holloran, Richard “The Rising East,” *Foreign Affairs*. no. 102. Spring 1996.
- Ikenberry, G. John. “The Plot Against American Foreign Policy: Can the Liberal Order Survive?” *Foreign Affairs*. May/June 2017.
- Ikenberry, G. John, Michael Mastanduno and William C. Wohlforth. “Introduction: Unipolarity, State Behavior, and Systemic Consequences.” *World Politics*. vol. 61, no. 1. January 2009.
- Kahn, Robert and Steven A. Tananbaum.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 G2 Within the G20.”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Global Economics Monthly*. April 2016.
- Kang, Jean S. “US Policy Dilemma: Food Aid to an ‘Enemy Stat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6, no. 2. October 2005.
- Kim, Samuel S. “China as Great Power.” *Current History*. vol. 96, no. 611. September 1997.
- Lampton, David M.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Age of Obama: looking each other straight in the eye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8, no. 62. November 2009.
- Li, Jinming and Li Dexia. “The Dotted Line on the Chinese Map of the South China Sea: A Note,”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4, issue3-4. 2003.
- Lipset, Seymour M.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3, no. 1. 1959.
- Mearsheimer, John J. and Stephen M. Walt.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A Superior U.S. Grand Strategy.”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16.
- Monteiro, Nuno P. “Unrest Assured Why Unipolarity Is Not Peaceful.” *International Security*. vol. 36, no. 3. Winter 2011/12.

- Romberg, Alan D. "U.S. Strategic Interests in Northeast Asia: 2009 and Beyond." 『전략연구』. 제14권 2호, 2007.
- Shambaugh, David. "Chinese Hegemony over East Asia by 2015?"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9, no. 1. Summer 1997.
- _____. "Patterns of Interaction in Sino-American Relations." In *Chinese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edited by Thomas Robinson and David Shambaug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Swaine, Michael D. "China's Assertive Behavior Part One: On "Core Interest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4. 2010.
- Wang, Jisi. "China's Search for a Grand Strategy: A Rising Great Power Finds Its Way." *Foreign Affairs*. vol. 90, no. 2. March/April 2011.
- Yahuda, Micheal. "China's Search for a Global Role." *Current History*. vol. 98, no. 629. September 1999.
- Yann, Huei-Song and Zou Keyuan. "Maritime Legislation of Mainland China and Taiwan: Developments, Comparison, Implications, and Potential Challenges for the United States."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1, issue 4. 2000.

- 陳向陽. "中國對朝鮮半島統一政策淺析." 『亞非縱橫』. 第5期, 2012.
- 江澤民. "全面建設小康社會, 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在中國共產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求是』. 第22期, 2002.
- 金景一·金強一. "朝鮮半島的地緣政治意義及其對我國的影響研究."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4期, 2008.
- 金強一. "韓國部署"薩德"必將陷入新的困境." 『延邊大學學報』. 第5期, 2016.
- 李婷婷. "亞投行與"薩德":韓國的兩難選擇?." 『世界知識』. 第9期, 2015.
- 虞少華. "重新審視朝鮮半島無核化問題." 『國際問題研究』. 第2期, 2017.
- 石源華. "'薩德'入韓與韓國的國家主權." 『世界知識』. 第5期, 2017.
- 王俊生. "面對朝鮮半島局勢中國需保持戰略定力." 『東北亞學刊』. 第3期, 2017.
- 楊希雨. "'薩德'入韓與半島安全博弈." 『軍事文摘』. 第19期, 2016.
- 于迎麗. "中國周邊戰略與朝鮮半島統一前景." 『遼東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15卷 第5期, 2013.

3. 기타

『노컷뉴스』.

『동아일보』.

『매일경제』.

『세계일보』.

『아주경제』.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중앙일보』.

AP.

China Policy Review.

CNN.

Far Eastern Economic Review.

First Press Release.

Los Angeles Times.

Reuter.

South China Morning Post.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The Diplomat.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Wall Street Journal.

『和訊』.

『環球網』.

『聯合早報網』.

『全國人大網』.

『人民日報』.

『人民網』.

『新華社』.

『新華網』.

『中國新聞網』.

『中國共產黨新聞』.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 <www.whitehouse.gov>.
통일연구원 <www.kinu.or.kr>.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www.pca-cpa.org>.
유튜브 <www.youtube.com>.
AIIB 공식 홈페이지 <www.aiib.org>.
CSIS China Power <chinapower.csis.org>.
Daum 백과 해외투자용어사전 <100.daum.net/encyclopedia>.
Freedom House <freedomhouse.org>.
U.S. Department of State <www.state.gov>.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www.fmprc.gov.cn>.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www.mod.gov.cn>.
中華人民共和國國家海洋局 <www.soa.gov.cn>.
中共中央網絡安全和信息化領導小組辦公室 <www.cac.gov.cn>.

「유엔해양법협약(UNCLOS)」.

- 김상기. “트럼프 시대 미국 대전략의 전환과 동아시아·한반도 정세 변화.”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7-03, 2017.01.25.
- _____.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7-12, 2017.05.24.
- Chairman’s Statement of the 23rd ASEAN Regional Forum. Vientiane, Lao PDR. July 26, 2016.
- Chairman’s Statement of the 24th ASEAN Regional Forum. Manila, Philippines. August 7, 2017.
- Clinton, Hillary.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May 1997.
- Elwell, Craig K. and Marc Labonte. “Is China a Threat to the U.S. Economy?” *CRS Reports for Congress*. January 23, 2007.
- Fedorenko, Vladimir. “The New Silk Road Initiatives in Central Asia.” Rethink Institute. Rethink Paper 10. 2013.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11.
- Johnson, Christopher K. “President Xi Jinping’s “Belt and Road” Initiative: A Practical Assessment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Roadmap for China’s Global Resurgence.” *A Report of the CSIS Freeman Chair in China Studies*. March 2016.
- Joint Communique of the 50th 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 Manila, Philippines. August 5, 2017.
- Karako, Thomas. “FPI Analysis: The Future of Missile Defense in the Asia Pacific.” *The Foreign Policy Initiative*. May 31, 2017.
- Morrison, Wayne M. “China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CRS Report. June 3, 2009.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lobal Trends 2025 : A Transformed World*. 2008.
- PricewaterhouseCoopers, *The World in 2050 : The accelerating shift of global economic power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011.
- RAND.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Posture*, embargoed news release report. May 15, 2001.
-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y 12, 2017.
- _____. “Maritime Territorial and Exclusive Economic Zone (EEZ) Disputes Involving China: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y 31, 2016/September 15, 2017.
-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6 Report to Congress of the U.S. -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 U.S. Department of Defense.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Report*.
- Wacker, Gudrun. “China’s role in G20/BRICS and Implications.”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Berlin. 2014.
- 『《2002年中國的國防》白皮書』.
- 『中國的軍事戰略(全文)』.
- 『中國的和平發展』.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마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옥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2015-05 The Reality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Maritime Province of Russia	Lee Aeliah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2017-01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통일연구원
2017-02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홍 민 외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2016-01 KINU 통일 + Vol. 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6-02 KINU 통일 + Vol. 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6-03 KINU 통일 + Vol. 2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6-04 KINU 통일 + Vol. 2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KINU Insight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 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곤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옥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옥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i>	도경옥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i>	도경옥 외	24,500원

연구보고서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장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 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예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갈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2015	Inter Korean Relations and the Unification Process in Regional and Global Contexts	박종철 외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2016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운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욱 외	14,000원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중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예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인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2,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3,000원
2016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7,500원
2016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 외	9,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2016-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중호 외	
2016-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이강우	
2016-04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	

■ Study Series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2017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2017-05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2017-08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홍민 외	7,000원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강택	8,000원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성과 대북정책	정성운 외	8,000원
2017-11	평양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정아, 최은영	9,500원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상기 외	11,000원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 외	7,000원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와대남 전략	정성운	6,500원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1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2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2017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3,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 Study Series ■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연례정보보고서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통일연구원
201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7~2018	통일연구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1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6, No. 2 (2017)

10,000원

기 타

2015 북한교화소	한동호 외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7 북한 내 이동의 자유	한동호 외
2017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속*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락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원구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뉴노멀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우리의 통일·대북전략(1/3년차)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 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 **1부**

